

Journal of Geography
(Jirihak Nonchong)

地
理
學
論
叢

제
68
호

ISSN 1226-5888

地理學論叢

No. 68

February 2022

Articles

A Study on the Significance, Forms and Viability of Industrial Agglomerations / Chulwoo Lee	1
Formal Usage of the Geographic Terms Originated from Korean Language instead of Those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 Jeon Lee	15
Garibong as The Archetype of <i>Chosonjok's</i> Residential Concentration / Su-Yeul Chung · JungHyun Lee	25
Strategies for Transforming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Structural Asset Inequality / Yongchang Kim	39
Increase of Extreme Events and Following Changes in the Worldwide Forest Ecosystem / Hanseop Lee	61
Institute Report	71

제 68호

2022. 2. 28

논문

산업집적지 의의와 그 존립 형태 및 기반에 관한 연구 / 이철우	1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 이 전	15
조선족 집중거주지의 원형(原形)으로서 가리봉: 집터, 일터, 그리고 쉼터 / 정수열·이정현	25
구조적 자산불평등 시대 주거복지 체제 전환 전략 / 김용창	39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현상의 증가와 전세계적 산림 생태계의 변화 / 이한섭	6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동정	7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22년
2월

편집위원회

(2021. 4. 1~2023. 3. 31)

위원장

이강원(서울대)

위원

구동회(부산대) 구양미(서울대) 권규상(충북대) 김대현(서울대)

박수경(상명대) 박정재(서울대) 박지훈(공주대) 배선헌(강원대)

이건학(서울대) 이승욱(KAIST) 이재열(충북대) 이정섭(경상대)

이태수(전남대) 이후빈(강원대) 지상현(경희대) 金石柱(중국, 延邊大)

Daikwon Han(미국, Texas A&M University)

간사

이정훈(국토문제연구소)

조교

정진영(국토문제연구소)

제휘(題揮)

창해 김창환 선생(滄海 金昌煥 先生)

地理學論叢 제68호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220동 502호

TEL: 02) 880-6322 | FAX: 02) 877-7656

발행인 이강원

편집인 이강원

인쇄소 (주)푸른길

산업집적지 의의와 그 존립 형태 및 기반에 관한 연구

이철우*

A Study on the Significance, Forms and Viability of Industrial Agglomerations

Chulwoo Lee*

요약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오늘날 산업집적지 연구의 핵심적 과제인 존립 형태와 기반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이들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의 문화적·제도적 근접성이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지역과 지역산업의 핵심적 공간적 실체인 집적지 및 그 연구의 의의가 강조되었다. 기존의 산업집적지 유형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산업집적지의 유형별 존립형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업집적지가 2개 이상의 유형의 혼종적 형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은 과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산업집적지 단위의 규모의 외부경제에 의한 생산 및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요인이었다. 반면에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는 혁신 주제 간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적 밀집에 기초한 혁신적 산업생태계로 변화되고 있다.

주요어 : 산업집적지, 산업집적지의 존립 형태 및 기반, 규모의 외부경제, 거래비용, 제도적 밀집, 혁신적 산업생태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s and viability of industrial cluster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and to present the future research issues. As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proximity in a region has been recognized as a social foundation for innovation,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cluster and their research is emphasized. Because an industrial cluster has many hybrid forms,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orm in spite of many case studies. In the industrial capitalism era, the core viability was trading cost reduction based on external economies of scale. On the other hand, in today's knowledge-based economy, It has been changed to the innovative industrial ecosystem by cooperative networking among innovative actors and institutional thickness for innovation.

Key Words : industrial cluster, viable forms and viability, external economies of scale, trading cost, institutional thickness, innovative industrial ecosystems

이 논문은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지역개발연구소 소장(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 Director,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wlee@knu.ac.kr

1. 머리말

경제지리학은 지역에 투영된 경제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으로, 그 연구대상은 경제공간이다. 경제공간은 로컬,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등 그 스케일이 다층적이며, 그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유기체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제공간의 전형적인 존재양식이 바로 산업집적지이다(이철우, 2020). 즉 경제지리학은 산업집적지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을 가진 경제공간의 경제적 과정(economic process)을 다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 왔다. 산업집적 혹은 산업집적지는 19세기말 이후 마셜(Marshall), 베버(Weber)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지리학자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들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는 집적의 요인과 산업집적지의 형성 및 변화, 즉 존립 형태와 기반이었다.

이러한 산업집적지의 존립 형태와 기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경제적 과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 동인의 변화와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의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위기 이전의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정태적 관점에서 산업집적지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밝히거나, 운송비, 노동비 등의 요소비용 및 전문화, 분업 등의 경제적 요소를 통해 입지특성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 반면에 후기산업사회에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라는 경제패러다임을 전환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역 및 산업집적지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면서 혁신적 지역 및 산업집적지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책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 지역 및 산업집적지와 그 연구의 의의를 검토한 후에 산업집적지의 연구의 핵심적 과제인 존립 형태와 기반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이들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제지리학에 있어서의 산업집적 연구의 의의

1) 경제지리학과 산업집적지 연구의 변화

오늘날 경제지리학자들은 공간(지역)의 경제적 과정에 대한 지리적 요인, 지역의 변화와 불균등발전의 핵심 주제와 동인을 주로 연구한다(이철우 외, 2018).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경제지리학자들은 노동력, 자연조건 그리고 부존자원 등을 포함한 지역별 특화 자원을 지역발전의 핵심동인으로 간주하였다. 20세기 산업화 시기에는 연구주제가 기업 및 산업의 지리, 생산과정, 기술과 혁신, 노동의 질과 기능, 정부의 역할 등으로 다변화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리적 경제요소 외에 비가시적 원인과 제도, 네트워크, 지식, 문화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중요한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지리학의 연구주제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지리학의 타분야와는 달리, 경제지리학의 다중적 기원¹⁾과 방법론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발전과정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마셜은 산업집적현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산업화에 있어서 노동력 풀이나 인프라의 공유에 기반한 규모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산업집적은 전통적으로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되어왔다. 규모의 외부경제에서 비용절감은 특정지역의 다수 업체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마셜의 집적론에서 기원한 경제지리학의 전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1970년대의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침체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탈공업화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탈공업화 이후의 신산업 및 고용창출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혁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학제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였다. 피오르와 세이벨(Piore and Sabel, 1984)의 유연적 전문화는 산업집적지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한 가지 기능에 전문화된 국지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조직은 소량생산체제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요견인생산을 지향함으로써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하여 소품종대량생산체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규모의 외부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적 전문화의 공간적 실체로서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를 비롯한 산업집적지의 사례가 부각되면서, 그 형성요인과 존립기반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운송비 및 거래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산업집적지의 기업 간 사회적 분업과 국지적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사회·문화·제도적 기반을 강조한다(Paniccia, 2002).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집적의 요인과 집적지의 존립기반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과 지식의 국지적 창출과정 및 메카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한국 경제지리학 발전과 산업집적지 연구

한국 지리학은 1945년 학회가 창립되고 1963년에 학회지가 창간되었으나 이때까지 지리학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특히 지역분화와 입지변동을 주제로 한 농업지리가 경제지리학을 선도하였으나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손용택, 2007).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공업지리가 부상하고, 연구방법과 주제는 실증적·계량적 분석에 기초한 공간 모델링을 지향하는 연구가 늘어남으로써 한국 경제지리학은 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박삼옥,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는 특정 경제공간의 산업구조와 특정산업의 입지 및 그 변화로, 산업집적과 경제공간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업지리학은 기존의 입지변동, 지역구조 및 공업지역의 형성과 발달로 경험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이슈를 비롯해서 기업의 조직과 행태 및 전략, 공간분업 등으로의 확대²⁾와 구조주의와 행태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수용을 통해 논리실증주의 일변도의 연구방법론을 극복함으로써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다변화가 한층 심화되었다(한주성, 2007; 박삼옥,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피오르와 세이벨의 유연적 전문화 논의를 필두로 산업집적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선진자본주의 국가(山本健兒, 2005)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산업집적지에 관한 본격적인, 소위

사회·문화·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신경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제공간의 강화된 역동성 그리고 신경지리학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는 네오(neo) 베버리안의 연구의 정착과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의 창간³⁾이라는 내·외적 환경변화를 계기로 기존 경제지리학 연구와 차별화된 산업집적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신산업집적론 연구는 1994년 박삼옥의 「첨단 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와 일련의 연구(Sam Ock Park and Ann Markusen, 1995; Sam Ock Park, 1996)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삼옥은 마셜의 산업지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현대 자본주의 환경 하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산업집적지를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로 정의하고,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역동성에 작용하는 4가지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4가지 요인 중에서 네트워크와 뿌리내림(embeddedness)을 기준으로 신산업지구를 4가지의 기본 유형과 9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이철우는 「農村地場産業に關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1991)와 일련의 한국재래공업에 관한 연구(1995; 1997)에서 마셜의 산업집적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한 일본의 '地場産業論'에 기초하여 산업집적지의 원형(元型)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공업 산지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그동안 한국 경제지리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온 "재래공업의 지역적 존립 형태, 혹은 재래공업지의 변용과정에 대한 연구"(형기주, 1977)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래공업 산지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산업집적지의 생산유통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분업과 암묵적 지식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신경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산업집적지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그 외 한국의 신산업집적에 관한 연구의 패러다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와 클러스터 연구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정책론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는 2000년을 전후해서 국내에 소개되었다(정선양, 1999; 박삼옥, 1999; 박경 외, 2000). 이들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은 경제지리학과 인접 분야에 걸쳐 산업

집적지 분석에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
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혁신체제
의 구축과 클러스터육성정책이 산업집적지 연구의 활성화
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⁴⁾보다는 경험적
연구가 중심이었다. 경험적 연구의 핵심주제로는 산업집
적지의 존립기반, 네트워크, 학습,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
책 등을 들 수 있다.

3. 지역 및 산업집적지의 의의

1) 경쟁과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역 역할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경제의 세계화가 한
층 심화되면서 기업·지역·국가 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지역과 중소기업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지역이 경제활동의 핵심 단위 및
요소로 부각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
단위가 되었고, 유연적 생산체제, 지식기반경제(knowl-
edge based economics)이라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지역
의 의미와 기능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지
리학에서 지역과 혁신을 관련시킨 본격적인 논의는 1980
년대 이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지구론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물리적·관계적 거래비용과
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새롭게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Asheim, 1996). 다른 한편에서는 혁
신과정에 있어 노하우, 숙련 등과 같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개인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교환, 이해, 적용
되기 때문에, 영역성(territoriality)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
게 된다(Lundvall and Johnson, 1994). 이러한 인식하에
세르지오 콩띠(Conti, 1998)는 실리콘밸리의 산업집적을
암묵적 지식의 학습, 혁신 그리고 외부효과 등으로 설명하
였다.

물론 이들의 사회적·공간적 영역이 반드시 '지역'인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다 지역이 이유로는, 첫째 학습
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
면 접촉과 소속감 등 문화적 접근성이 큰 '제한적·사회적
영역'인 지역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

하면 지역이 '제도적 밀집(institutional thickness)'에 기여
하기 때문이다⁵⁾.

둘째, 쿡과 모건(Cooke and Morgan, 1998)에 의하면,
기업에 실제 필요한 응용기술은 지역에 뿌리를 둔 연구기
관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특히 혁신의 변화가
빠를수록,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필요한 각종 지원은 해당
기업의 사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 업계협회,
기술혁신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이라고 한다. 더욱이 종래에 비해 지역정부의 지역산업 활
성화와 혁신의 촉진에 대한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산업의 국지적 집적은 전문 인력의 공동 이용, 관
련 지원 산업의 발달, 지식정보 교류의 촉진을 통해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집적은 더욱 전문화·특화
되어 가고, 이러한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 자본이
유입함에 따라 집적은 더욱 강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적·제도적 근
접성은 혁신과 산업집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관련 연구도
학습과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즉 신산
업공간(Scott, 1988), 혁신지구(Camagni, 1991), 학습지역
(Morgan, 1997), 지역혁신체제(Cooke et al., 1998)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지역과 지
역단위의 학습과 혁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2)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산업집적의 의의

지식기반사회란 지식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혁신
이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이다. 기
술혁신의 개념은 기존의 신기술의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
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소화하고, 사용하고, 변화시
키고, 창조하는 과정(박경 외, 2000)으로, 또 기술은 "실제
적·이론적 지식, 노하우, 절차, 경험 및 물적인 장비의 집
합"(Dosi, 1984)으로, 그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대
기업이나 연구소의 R&D 투자만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생산자와 연구소 연구원 간
의 상호 협력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학습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관계와 기술혁신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규모, 자본, 정보력 등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영역적, 관계적 기반이 바로 국지적 산업집적, 즉 산업집적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집적지의 중소기업들은 각 분야의 전문화와 사회적 분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집적지 전체로 규모 및 범위의 경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근접성, 전문화에 기초한 기업 간 협력, 가격보다는 혁신에 기반을 둔 경쟁, 기업 간 및 고용주와 숙련노동자 간의 신뢰관계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활발한 동업자/숙련기술자/상공회의소 등의 자발적 조직과 지방정부라는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중소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국지적 산업집적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과거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학습의 관점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즉 기업의 혁신능력은 혁신 주체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역량과 상호학습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집적의 역할이 핵심적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하여 혁신적 산업집적지가 새로운 산업체제의 대안으로, 그리고 혁신과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지역혁신 체계(RIS)와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 지식기반사회의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폐쇄적 산업집적지는 동종의 상품, 동일 생산과정의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과 국지적 네트워크의 강화만으로는 기술혁신의 정체(lock-in)로, 세계적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지적·비국지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산업집적지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⁶⁾

1) 산업집적에 관한 연구 활성화의 배경

유연적 생산체제에서는 기업조직이 수직적·수평적으로 해체되어, 타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분업과 네트워크의 원활한 관리와 조정을 위한 거래비용도 증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적은 거래비용으로 협력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지역에

집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집적지의 외부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유연적 생산체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 내 공식·비공식 조직과 제도들 간의 긴밀한 협조적 관계, 문화적 동질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제도와 문화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룬드발(Lundvall, 1992)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의 혁신은 고객, 기업 간, 기업과 연구소 간 다양한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혁신과 상호학습은 지역의 지리적·문화적·제도적 근접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산업 경쟁력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 결정되고, 혁신은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식은 학습(learning)을 통해서 창출·전파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제(과정)의 다양한 주체들을 조정(coordination)하고 학습, 특히 집단학습에 유리한 관습, 습관 등 비공식적 제도, 이른바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 없는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e)'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춘 산업집적지에 대한 연구가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 혹은 개념적 도구 그리고 이론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Markusen,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론들도 대부분 비판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집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개념과 개념적 도구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집적에 관한 연구자들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클러스터'는 경제지리학이 전통적으로 초점을 두었던 산업집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분석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클러스터 관련 개념이나 이론들이 지나친 정책 친화성으로 용어와 개념의 정지성(精緻性)과 이론의 논리적 명료성은 점차 약화되고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Martin and Sunley, 2003; Benneworth and Henry, 2006).

이에 본 장에서는 클러스터를 비롯한 산업집적과 관련된 용어와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다른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업집적지 개념에 관한 논의

산업집적에 관한 연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산업집적지에 대한 용어와 개념도, 산업지구, 신산업지구, 신산업공간, 국지적 생산체계, 혁신환경, 지역혁신체계, 학습지역, 클러스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현재는 클러스터가 다양한 형태의 산업집적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집적과 클러스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구자(예를 들어, Maeda, 2004; 권영섭 외, 2005 등)도 있다. 예를 들면, 권영섭 외(2005)는 고든과 매켄의 연구를 인용하여, “집적이란 집적지 내의 활동주체들 간 어떤 형태의 협력도 없음을 가정하며(Gordon and McCann, 2000) … 클러스터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를 의미한다. … 단순히 모여 있는 상태는 집적으로 보고, 모여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 간 공통성이나 보완성에 의하여 연계된 집적일 경우 클러스터…”로 구분하였다(권영섭 외, 2005: 13-14). 그러나 고든과 매켄(Gordon and McCann, 2000)은 집적과 클러스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적지 내의 활동주체들 간 어떤 형태의 협력도 없는’ 즉 ‘순수 집적 모형(Pure Agglomeration Model)’과 ‘산업단지 모형(Industrial Complex Model)’을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Social Network Model)’과 함께 클러스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에다(Maeda, 2004)는 “산업집적은 지역 내 기업 간 협력과 협업을 통한 생산 효율성의 증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클러스터는 지속적 혁신의 증진에 초점을 둔다. 클러스터의 기반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다. 클러스터는 단순히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의 생태계로서 경쟁적 협력을 강조한다”(Maeda, 2004: 12)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코 외(Coe *et al.*, 2007)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 즉 집적지를 통칭하여 ‘클러스터’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반적인 클러스터라는 개념⁷⁾은 당초 포터(Porter, 1998)가 제시하였던 개념에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 성과가 수렴되면서 변화하여 다양한 집적의 형태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착하였다(Asheim *et al.*, 2006). 바꾸어 말하면 산업지구, 신

산업공간, 기술지구, 신산업지구 등과 같은 개념과 형태는 클러스터 유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든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거나 하면 모두 클러스터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포터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산업부문)에서 공통성과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경쟁기업, 전문 부품 공급기업, 서비스 공급기업 등)과 관련 기관(대학, 지원기관, 협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의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집적지”(Porter, 1998: 197)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산업집적지가 클러스터가 아니라, 클러스터는 산업집적지의 한 유형으로(Phelps, 2006), ① 특정 지역의 기업집적에 의한 경제활동의 국지화(loc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② 특정 특화산업에 의한 지역산업 전문화(regional specialization), ③ 기업의 대학, 연구기관, 훈련기관, 혁신 지원기관, 정부기관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즉 하부구조의 존재(existence of social infrastructure), ④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이 공존(co-pres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networks)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갖춘 산업집적지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클러스터는 집적지의 진화과정상 고도화 단계의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집적지가 지향하는 이념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산업집적지 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

산업집적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경제학 원리(The Principles of Economics)』의 산업지구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유연적 전문화의 공간적 실체로서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의 사례가 부각되면서, 산업집적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양한 학문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절감 요인을 강조하는 베버류의 고전적 산업입지론이나 거래비용의 절감을 강조하는 신산업공간론 등의 신고전파 입지론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국지적 사회적 분업 및 생산체계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사회·문화·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며, 주로 혁신과 지식의 국지적 창출과정 및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⁸⁾(Malmberg, 1996; 1997).

뿐만 아니라 각 이론은 발전과정에서 상호 수렴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다지적(多枝的)이고 다양한 산업집적 관련이론

들을 비교·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뉴랜드스(Newlands, 2003), 컴버스와 매키넨(Cumbers and MacKinnon, 2003)을 들 수 있다. 먼저, 뉴랜드스는 클러스터 관련 이론들

표 1. 뉴랜드스의 집적 관련 이론의 비교

이론 특징	마셜의 집적이론	신산업공간론	유연적 전문화론	혁신환경론	진화 및 제도 경제학
우위의 원천	노동력, 하부구조, 사업서비스 등 공공재 공유	집적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	집적지 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호혜적 정보 교환	혁신창출 지원을 위한 혁신환경의 구축	점진적으로 확충된 제도적 기반
유발 요인	공통적 서비스의 국지적 집중에 의한 외부 경제	물리적 거리 단축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	국지적 네트워크에 뿌리내려진 신뢰	개인적 접촉에 의존도가 큰 혁신의 국지적 제도와 관행	다양한 공간 규모에 따른 특정한 진화 궤적
경쟁과 협력	집적지 내 경쟁에 기초한 기업간 협력	협력은 거래비용 절감에 효과, 절대적 요인은 아님	가격보다는 품질경쟁 중심, 강한 협력 관계도 공존재	경쟁적 기업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중시	기술변화를 경쟁추동력으로 인식
정책 함의	공공재 공급의 시장 실패를 최소화 할 필요 있음	시장은 클러스터 내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봄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뢰 구축의 핵심, 적절한 규범체계가 요구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초점을 둠	혁신을 정책 개입은 하나의 결정요소에 불과

자료: 이종호·이철우(2008)을 참고로 필자 재수정

표 2. 컴버스와 매키넨의 산업지구론, 지역혁신체계론, 학습지역론의 비교

이론 특징	산업지구론	지역혁신체계론	학습지역론
제도적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성(soft)' 제도에 초점 · 신뢰와 협업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조 · 노동조합, 지방정부, 기업협회 및 정당 등의 역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hard)' 제도의 형태에 초점 · 지역 내 핵심 조직(금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역할 강조 · 기업과 지원기관(대학, 연구기관, 협회, 훈련기관 등) 간의 협력과 협업에 대한 규범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역적 상호의존성'과 '관계적 자산' 등 '보다 연성적인(soften)' 제도에 초점 · 혁신의 촉진에 있어 암묵적 지식과 집단 학습의 중요성 강조 · 핵심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적 제후에 관심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협업관계에 초점 · 성공적 산업지구의 '좌파적' 정치 성향 인식 · 잠재적 경쟁과 대립 문제는 간과 · 산업지구 내의 분화와 착취 문제에 대한 논쟁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사회관계에 초점 · 잠재적 분화와 갈등 요소는 간과 ·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암묵적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학습과 신뢰에 초점 · 기업 간의 불평등 권력관계 및 장기적 협업관계 지속의 현실적 어려움 간과 · 권력을 관계적 측면에서는 인식, 능력적 측면에서는 간과
공간/스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local) 단위에 초점 · 타 공간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주체를 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regional) 단위에 초점 · 국가 단위의 제도(교육, 훈련, 금융체제 등)를 간과 · 세계화 과정은 지역이 경제활동과 정치적 개입의 핵심 공간 단위임을 인정 · 지역 단위 차이를 미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역적 상호의존성의 핵심 공간 단위로 지역의 역할 강조 · 지역을 전략적 행위주체로 인식하는 공간물신주의 경향 · 경쟁력의 개념을 기업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장

자료: 이종호·이철우(2008)을 참고로 필자 재수정

표 3. 산업집적 관련 이론의 특성 비교

특징 \ 이론	신산업공간론	산업지구론	클러스터론	혁신환경론	지역혁신체계론	학습지역론
공간집적	○	○	○	×	×	×
산업전문화	○	○	○	×	×	×
산업 유형(침단 혹은 성숙)	○	○	○	×	×	×
생산연계 (교역적 상호의존성)	○	○	○	×	×	×
상부구조 (비교역적 상호의존성)	×	○	○	○	○	○
사회적 하부구조 (대학, 연구기관 등)	×	×	○	○	○	○

자료: 이종호·이철우(2008)

주: 각 이론별로 초점을 두고 있는 항목에는 ○, 그렇지 않은 항목에는 ×로 표기함

을 마셜의 집적이론, 캘리포니아학파의 신산업공간론, 유연적 전문화론(신뢰 및 비교역적 상호의존성 포함), 그레미(GREMI)학파의 혁신환경론, 진화 및 제도 경제학 등 6가지 이론을 우위의 원천, 유발요인, 경쟁과 협력 그리고 정책적 함의 등의 관점에서 각각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표 1).

그는 ‘산업지구론’을 명시적으로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유연적 전문화론’과 동일한, 그리고 ‘지역혁신체계론’은 진화 및 제도 경제학 영역의 이론적 범주로 간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의 분석대상인 6개 이론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클러스터, 산업지구, 신산업공간, 신산업지구, 혁신환경 등의 용어들이 대단히 상이한 이론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컴버스와 매किन은 산업지구론, 지역혁신체계론, 학습지역론을 권력관계, 공간 스케일 그리고 특히 제도에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표 2).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필자 나름의 산업집적 관련 이론⁹⁾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시적 산업집적이론인 신산업공간론, 산업지구론 그리고 클러스터론은 공간 집적, 산업 전문화, 산업 특성 및 생산 연계를 공통적으로 강조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공간론은 혁신의 상부구조를 강조하지는 않는 반면에, 산업지구론은 주체간의 비교역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클러스터론은 산업집적에 토대를 두면서도 집적지의 동태성을 생산 및 혁신 네트워크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산업집적뿐만 아니라 지역혁신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이론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외 3개 이론은 산업집적 현상보다는 혁신의 사회적 하부구조와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상부구조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산업집적지의 동태성에 대한 분석 틀로서 기여하였다.

5. 산업집적지의 존립 형태와 기반

이상의 산업집적에 관한 기존 연구의 주제는 첫째, 다양한 유형의 산업집적지의 존립형태와 특성, 둘째 산업집적지의 형성 요인과 존립기반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존하는 산업집적지의 유형별 존립형태와 존립기반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산업집적지의 유형별 존립 형태 및 특성

다양한 형태로 존립하고 있는 집적지의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삼옥(1994)과 마커슨(Markusen,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삼옥은 산업집적지를 생산 체계, 생산 네트워크, 뿌리내림 그리고 기업 규모 등의 4가지 요인을 준거로 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커슨(Markusen, 1996)은 기업 규모별 비중, 전후방연계, 수직적 분해 수준, 기업 간 네트워크, 집적지의 거버넌스, 혁신능력, 생산조직 등 일반적인 요소 외에 정부와 집적지 대기업의 역할, 기업들의 뿌리내림, 집적지의 동태성, 집적지의 사회적 관계 특성(노사관계, 노조 활동, 지역정치 등) 등을 기준으로 마셜형, 허브-스포크형, 위성형, 국가기관 주도형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클러스터를 비롯한 산업집적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코 외(Coe *et al.*, 2007), 고든과 매캔(Gordon and McCann, 2000), 보타치 외(Bottazzi *et al.*, 2001), 파니치아(Paniccia, 2006)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다양한 기준으로 집적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¹⁰⁾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산업집적지 유형 및 그 특성에 관한 풍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산업집적지를 명확하게 유형을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대부분의 산업집적지는 2개 이상의 유형의 혼종적 형태(hybrid forms)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대표적인 클러스터로 알려진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혁신클러스터'로 분류되지만, 인텔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적 생산 허브-스포크 클러스터'와 연방정부의 대규모 국방 예산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클러스터'의 혼종적 형태로 각 유형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학자에 따라 유형구분의 기준이 다양하며,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유형화와 그 특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집적지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전제조건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 구분인지, 아니면 산업지구, 신산업 지구, 클러스터 등과 같은 특정한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그 하위 단위로서의 집적지의 유형 구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앞에서 규정한 클러스터를 산업집적지의 한 형태로 간주할 경우의 클러스터의 유형 구분이라 함은 클러스터의 하위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클러스터 유형은 광의의 산업집적지의 유형화와는 그 기준과 유형 및 그 특성에 있어서 차별적이어

야 하고, 당연히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과 변화

코 등(Coe *et al.*, 2007)은 산업집적지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클러스터'의 존립기반을 ① 집적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교역적 상호의존성(traded interdependencies)과 ② 집적의 사회문화적 기반으로서 비교역적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ie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존립기반으로 신산업공간론에서 강조하는 ① 수직적 분해에 기초한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 등의 교역적 상호의존성과 학습지역론·혁신환경론·지역혁신체계론·클러스터론 등에서 강조하는 ② 지식 하부구조의 공급 및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한 암묵적지식 교환 등의 비교역적 상호의존성을 제시하였다. 즉 이들은 클러스터(집적지)의 존립기반을 고전 산업입지론에서 강조하는 비용요인뿐만 아니라 신산업입지론에서 강조하는 혁신 및 지식요인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도 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와 기술이나 조직 등 기업 경영 체제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을 기업의 생산 요소와 생산 체계 그리고 지원양식 등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한 산업자본주의와 후기산업자본주의 사회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업집적지 존립기반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업집적지는 전통공업산지와 도시화·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자유입지형 집적지 등의 자연발생적 산업집적지와 근대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에 의해서 조성된 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및 사이언스파크로 대표되는 정책적 산업집적지로 대별된다. 자연발생적 산업집적지의 형성과 존립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지역자원이었다. 즉 집적지 형성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성을 가진 천연자원과 국지적 소비시장이었다. 그 후 생산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에 힘입은 소비시장의 확대로 생산 공정의 수직적 분업과 생산과 유통 간의 수평적 분업에 의한 산지 내 사회적 분업체계가 뿌리내림에 따라 특정부분의 기술이나 기능 그리고 소규모

인력이나 자본으로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점차 집적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자재 공동구매와 제품의 공동판매를 통한 비용절감, 숙련 노동력 증대 그리고 집적지 브랜드화에 의한 홍보 효과 등에 의한 집적지 단위의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가 핵심적 존립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그 외 존립기반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산업집적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산업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뿌리내려진 사회적 자본과 암묵적 지식 등의 소위 혁신자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정책적 산업집적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에 공장부지, 도로, 용수, 통신 등 하부구조, 노동력, 사업서비스, 세제 혜택 등의 공공재를 제공·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 외에 국지적인 노동자풀의 형성 등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핵심적 존립기반이 되었다. 그 외 존립기반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산업집적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 시설 등을 비롯한 지원기관과 생산자 서비스시설의 입지 그리고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증대하기 위한 국지적 가치사슬의 확장에 의한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도 중요한 존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 경제는 활동의 다양성과 규모의 경제의 결합에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이철우 외, 2018).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업집적지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집적지 단위의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에 기초한 생산 및 거래 비용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2) 후기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업집적지 존립기반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대기업 중심의 포디즘 생산체제가 유연적 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후기자본주의로 진입하게 되었다. 유연적 생산체제에서는 기업조직이 수직적·수평적으로 해체되어, 기업을 비롯한 타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비용으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유리한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구조화¹¹⁾를 추구하게 됨에 따

라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도 전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집적지의 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주요한 존립기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적 분업체계에 산·관·학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들 주체 간의 네트워크에서 나아가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또는 쿼드러플 헬릭스(quaduple helix)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 창출과 이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학습의 성과가 다시 기술혁신에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학습지역(learning region)화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이 지역산업생태계이다. 지역산업생태계란 산업집적지를 포함한 국지적 산업생태계로, 중핵업종 중심의 가치사슬 구조를 근간으로 기업 간 연계구조와 혁신 자원 및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경제 권역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 지역경제 전반, 산업 인프라, 문화, 제도 등과 연계 및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진화 발전 시스템(김영수, 2012)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이 정신과 노동문화가 뿌리내리고,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로, 최근의 그 화두는 ‘공유-소통-협업-융합-창조’이며, 그 목표도 기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job follow people)에서 인재를 통한 일자리 창출(job follow people), 즉 창업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넷째는 산업집적지를 둘러싼 혁신 주체 간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로컬 거버넌스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산업자본주의 산업집적지 존립기반과 그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클러스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화두가 되어왔고, 혁신클러스터정책은 적지 않은 비판(남기범, 2016; 이철우, 2007)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 효과적으로 편입하고,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유효한 분석 틀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의 산업집적지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존립기반으로의 전환에 초석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6. 결론: 산업집적지 관련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산업집적지의 의의와 그 존립 형태와 기반을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산업집적지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소수의 이론을 분석적 도구로 주요 주제별로 특정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사례연구와 정책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특히 한국의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RIS 구축과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집적지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지리학의 위상 제고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며 연구 주제와 분석도구가 다변화되었고, 산업집적지의 구체적인 존립기반 분석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향적 사례연구는 이론의 정치성 및 논리적 명료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업집적지의 존립기반의 역동성에 대한 고유한 분석틀을 비롯한 이론화를 간과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산업집적론’의 핵심요소인 기업을 비롯한 주체 간 관계 등의 비경제적 요인과 기존의 입지론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요인을 통합하는 분석틀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산업집적지의 역동적 존립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신산업집적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특정 스케일의 경제 공간 내에서의 기업을 비롯한 주체 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와 집적과 관계된 지역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폐쇄주의 경향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산업집적지의 국민경제 또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위치와 관련 제도 그리고 비국지적 네트워크 등도 다중적 공간스케일에 따라 존립기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의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정책으로서의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실천적 방안뿐만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산업집적지 연구는 대다수가 성공한 산업집적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침체

혹은 쇠퇴한 산업집적지를 사례로 하여 lock-in이나 경로 의존성과 같은 쇠퇴요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산업집적지 존립기반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

- 1) 경제지리학의 기원과 계보는 영국의 식민주의와 관련된 상업지리학, 독일의 입지론, 마셜의 산업집적론, 그리고 북미의 인간-환경지리학 등으로 다양하고 다지적이다(이철우 외, 2018)
- 2)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부각된 주제로는 ① 기업조직의 변화와 산업입지, ② 생산체계의 변화와 산업공간의 변화, ③ 첨단기술산업과 과학단지개발 연구, ④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경제, ⑤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변화, ⑥ 산업네트워크와 산업의 공간연계 및 산업지구, ⑦ 공업정책과 지역발전, 행태적 접근, 기업가 정신, 노동시장 등을 들 수 있다(박삼욱, 1996).
- 3) 1997년 3월 15일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되었고 ‘한국경제지리학지’는 1998년 6월 30일 창간되었다. ‘한국경제지리학지’는 2005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매년 4호를 출간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일본경제지리학회’와 ‘한·일 경제지리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4) 이론적 연구(박삼욱, 1994; 2006; 2008; 최병두, 2003; 박양춘, 2003; 이종호·이철우, 2008; 이철우, 2020)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 5) 지역이 제도적 밀집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① 토착화된 매개 기관이나 제도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을 것, ② 이 기관이나 제도 간에 긴밀한 협력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③ 협력을 고취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규칙(rules), 관행(convention), 제휴(coalition) 패턴과 지배·통제 구조가 발달해 있을 것, ④ 공통의 집단에 소속감,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다(Amin and Thrift, 1994).
- 6) 이종호·이철우, 2008, “집적과 클러스터: 개념과 유형 그리고 관련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302-318.를 수정·가필하여 작성하였음.
- 7) 포터(1998)의 클러스터(cluster)는 마셜(Marshall, 1890), 피오레와 세이블(Piore and Sabel, 1984) 등의 ‘산업지구’, 스콧(Scott, 1988)의 ‘신산업공간’ 그리고 스토퍼(Storper, 1992)의 ‘기술지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사실 이들의 접근방법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상이나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 8) 반드시 집적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산업집적과 관련된 대표적 이론으로는 혁신환경(innovation milieu),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학습지역(learning region)론 들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지식(특히 암묵적 지식)과 혁신의 창출이

-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역 내의 상호작용적 학습이 산업집적지의 형성 및 존립기반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9)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혁신환경론, 산업지구론, 신산업공간론, 지역혁신체계론, 학습지역론, 클러스터론 등 6개 이론이다. 이 중에서 산업지구론, 신산업공간론, 클러스터론은 명시적인 산업집적론인 반면에 그 외 이론은 산업집적에 관한 이론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론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각 이론의 비교 분석은 산업의 유형과 집적, 전문화, 연계 그리고 상·하부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 10) 이들의 산업집적지 유형화의 기준과 유형 그리고 유형별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철우의 산업집적의 경제지리학 (2020, 23-41)을 참조할 것
- 11) 재구조화란 생산성과 이윤 회복을 위해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신조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전략과 사회관계의 변화로 정의된다.

참고문헌

- 권영섭·정석희·강호제·박경현, 2005,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경·박진도·강용찬,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론의 의의, 과제 그리고 정책적 함의,” 공간과 사회, 13, 12-45.
- 박삼욱,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54, 117-136.
- 박삼욱, 1999,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서울.
- 박삼욱, 2006, “지식정보사회의 신경제공간과 지리학 연구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41(6), 639-656.
- 박삼욱, 2008,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변화와 신경제지리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8-23.
- 박양춘, 2003, “신산업환경과 산업공간 연구의 패러다임,” 박양춘 엮음,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도시 산업공간의 재편: 영남지역 연구, 한울.
- 이종호·이철우, 2008, “집적과 클러스터: 개념과 유형 그리고 관련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302-318.
- 이철우, 1997,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35-154.
- 이철우, 2020, 산업집적의 경제지리학, 푸른길, 서울.
- 이철우·이원호·이종호·서민철, 2018, 핵심개념으로 배우는 경제지리학, 푸른길, 서울(Aoyama, Yuko·Murphy, James T. & Hanson, Susan, 2010, Key Concepts in Economic Geography, Sage Publications Ltd).
- 정선양, 1999,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 199, 79-98.
- 최병두, 2003, 지역발전과 산업공간의 재편: 개념과 이론,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도시 산업공간의 재편(박양춘 지, 2003,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와 도시 산업공간의 재편, 한울), 서울.
- 형기주, 1977, “韓國의 經濟地理學 研究動向: 成果와 課題,” 국토지리학회지, 3, 43-54.
- 山本健兒, 2005, 産業集積の經濟地理學, 法政大學出版局.
- 李哲雨, 1991, 農村地場産業に關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 名古屋大學 博士學位論文.
- Amin, A. and Thrift, N., 1994, Living in the global, in Amin, A. and Thrift, N.(ed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Asheim, B., 1996, Industrial districts as ‘learning regions’: a condition for prosperity?, *European Planning Studies*, 4, 379-400.
- Asheim, B., Cooke, P. and Martin, R., 2006, The rise of the cluster concept in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a critical assessment, in Asheim, B., Cooke, P. and Martin, R. (eds.), Clusters and Regional Development: Critical Reflections and Explorations, Routledge, London.
- Benneworth, P. and Henry, N., 2006, Where is the value added in the cluster approach? hermeneutic theorising, economic geography and clusters as a multiperspectival approach, in Cumbers, A. and MacKinnon, D. (eds.), Clusters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 Bottazzi, G., Dosi, G. and Fagiolo, G., 2001, On the ubiquitous nature of the agglomeration economies and their diverse determinants: some notes, LEM Working Paper Series.
- Camagni, R.,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 Belhaven Press, London.
- Coe, N., Kelly, P. and Yeung, H., 2007,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 Cooke, P. and Morgan, K.,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ooke, P., Uranga, M. and Etxebarria, G., 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1563-1584.
- Cumbers, A. and MacKinnon, D., 2003, Institutions,

- Power and Space: Assessing the Limits to Institutionalism in Economic Geography,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0(4), 325-342.
- Dosi, G., 1984, Technical Change And Industrial Performance, Macmillan, London.
- Gordon and McCann, 2000, Industrial Clusters: Complexes, Agglomeration and/or Social Networks?, *Urban Studies*, 37(3), 513-532.
- Lundvall, B.-A. (ed.), 1992,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London.
- Lundvall, B. Å. and Johnson, B., 1994, The Learning Economy, *Journal of Industry Studies*, 1(2), 23-42.
- Malmberg, A., 1996, Industrial geography: agglomeration and local milieu,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3), 392-403.
- Malmberg, A., 1997, Industrial geography: location and learn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4), 573-582.
- Maeda, N., 2004, A study on conditions and promotion policy for successful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udy, 9, Third Policy-Oriented Research Group, NISTEP & MEXT.
- Markusen, A., 1996, Sticky places in slippery space: a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72(3), 293-313.
- Markusen, A., 2003, Fuzzy Concepts, Scanty Evidence, Policy Distance: The Case for Rigour and Policy Relevance in Critical Regional Studies, *Regional Studies*, 37(6-7), 701-717.
- Marshall,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London.
- Martin, R. and Sunley, P., 2003, Deconstructing clusters: chaotic concept or policy panac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 5-35.
- Morgan, K., 1997, The regional animateur: taking stock of the Welsh Development Agency, *Regional and Federal Studies*, 7, 70-94.
- Newlands, D., 2003,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clusters: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European Planning Studies*, 11(5), 521-532.
- Paniccia, I., 2002, Industrial Districts: Evolution and Competitiveness in Italian Firms, Edward Elgar, Cheltenham.
- Paniccia, I., 2006, Cutting through the chaos: towards a new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and clusters, in Asheim, B., Cooke, P. and Martin, R. (eds.), Clusters and Regional Development: Critical Reflections and Explorations, Routledge, London.
- Park, Sam Ock, 1996, Industrial Restructuring for the Sustainable C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SEOUL metropolitan FORA 96, 1996, 345-377.
- Park, Sam Ock and Markusen, A., 1995,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a theoretical agenda and an application from a non-wester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81-104.
- Phelps, N. A., 2006, Clusters, dispersion and the spaces in between: for an economic geography of the banal, in Cumbers, A. and MacKinnon, D. (eds.), Clusters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Y: Basic Books, New York.
- Porter, M., 1998, On Competi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 Scott, A.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Pion, London.
- Storper, M., 1992, The limits to globalization: technology districts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Geography*, 68(1), 60-94.
- 교신: 이철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35호(이메일: cwlee@knu.ac.kr, 전화: 053-950-5234, 팩스: 053-950-6227)
- Correspondence: Chulwoo Lee,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e-mail: cwlee@knu.ac.kr, Tel: 053-950-5234, Fax: 053-950-6227)
- 최초투고일 2022. 1. 13
수정일 2022. 1. 20
최종접수일 2022. 1. 22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이 전*

Formal Usage of the Geographic Terms Originated from Korean Language instead of Those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Jeon Lee*

요약 : 지리학자들은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지리교육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원만한 학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리학 학습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계는 한자 고고학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학문 분야인데, 지리학계는 고고학계의 성과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지리학 분야에서도 쉬운 우리말 용어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지리학이 일반인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학문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1은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전문가는 남북한의 지리 용어를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고민은 쉬운 우리말 용어의 개발 노력과 병행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 끝으로 지리학계의 우리말 사용 노력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학술·전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리 용어, 한자 용어, 우리말 용어, 지리 교과서, 전문 용어

Abstract : Korean geographers should make efforts to use formally the geographic terms originated from Korean language instead of those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The Chinese geographic terms are so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y can often be a major obstacle to studying geography at school. Korean geographers need to learn a lesson from the Korean Archeology Community that has respectably achieved the terminology transition from Chinese characters to Korean language characters in the past fifty years. Hopefully, I expect that the terminology transition of Korean geographers in the near future will raise the level of geography up to a highly favorite academic discipline. <Table 1> shows the experimental Korean terms that the existing terms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can be replaced with. If Korean geographers and the Korean specialists in geography education have to find the way how to standardize the geographic terminologies of two Koreas, i.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at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 terminologies should be based on the terms originated from Korean language instead of those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Finally, I would expect that the transition movement of geographic terminology may contribute to the Korean language movements for academic/technical terms in Korea.

Key Words : geographic term, Chinese term, Korean term, geography textbook, technical term

*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Director, Gyeongsangnam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glee@gnu.ac.kr

1. 머리말

오늘날 법조인, 의료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정보를 그 집단 구성원에게만 제한하겠다는 의도와 결부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도는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판사·변호사·검사 등의 법조인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법률 용어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이순동, 2021, 25). 또한 의료인만 이해하는 의학 용어가 줄어들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의학 용어가 늘어나면 다수의 사람이 의학 상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도 쉬운 우리말 용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에 관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의 글을 일반 노동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글을 오직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글에 의한 사회적 파급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의 사회적 기여는 사회과학자의 사회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 학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꿈으로써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리학자도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자는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 지리학의 연구업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리학자가 지향하는 사회는, 일반인이 지리 개념을 이해하는 사회, 많은 사람이 지리적 사고를 공유하고 지리학의 연구업적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지리학자가 이러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은 지리학자가 독차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일반인도 공유해야 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지리학자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지리 교과서에는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내용 혹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용어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사실, 지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리 용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지나치게 많다. 지리 교과서가 학생의 입장에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리 교과서라도 교수-학습 활동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교수-학습 활동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과서가 쉬운 우리말 용어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말 지리 용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겠지만, 일단 초·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우리말 지리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일반인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말 지리 용어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일상생활 용어로 거듭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이 글은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먼저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지리 용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하고, 고고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리말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의 문제점과 쉬운 우리말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끝으로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2. 지리 과목의 인식과 지리 용어의 중요성

초·중·고등학교의 지리교육에서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리학 학습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이전·이영민, 2001). 초·중·고등학교의 지리 교과서는 지리 교육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서 기술한 것인데, 지리 교과서에서는 지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지리 용어를 동원한다. 지리 용어는 지리 개념이 조직되고 다루어지는 수단이며, 학습과 의사소통에

유용하며, 지리 교과과정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창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김현주, 1997). 그래서 상위 지리 개념과 함께 도입되는 하위 수준의 지리 용어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조성욱, 2014).

지리 지식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리 수업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리 용어를 이해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초·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리 용어 자체를 암기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난해한 지리 용어가 주는 학습자와 학습내용 상의 괴리감이 지리교육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이전·이영민, 2001). 지리 용어가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면, 지리 수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곤경에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한자 용어가 초·중·고등학교 수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지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책화, 우제점법, 형사취수법, 도정, 삼정, 육의전, 여각, 보부상, 호민, 하호, 양천계, 흑세무민, 종법, 서리, 이두, 향찰, 관음신앙, 주자소, 도첩 등과 같은 어려운 한자 용어는 국사 수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박승호, 2005). 그렇다고 해서 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사 교과과정의 특성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 국사교육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 용어 뜻을 풀이를 잘해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화학 용어에서도 일본어식 한자 용어가 매우 많다. 원소 이름으로 사용하는 탄소(炭素; C), 아연(亞鉛; Zn), 수소(水素; H), 산소(酸素; O) 등은 일본어식 한자 용어이다. 한자에서 유래하는 원소 이름은 철(鐵; Fe), 은(銀; Ag), 금(金; Au) 등이 있다. 텅스텐(W)은 영어 tungsten에서 나온 원소 이름이다. 란탄 계열 원소(15개)와 악티늄 계열 원소(15개)를 비롯한 상당수 원소는 라틴어를 기준으로 만든 원소 이름을 사용한다. 우리말 원소 이름은 구리(Cu)와 납(Pb)밖에 없다(김승현, 2001). 그런데 화학 분야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볼 경우,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화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한자 용어 탄소, 아연, 수소, 산소, 철, 은, 금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쉽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경우는 국사나 화학 분야

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리 개념의 습득은 지리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발전시켜주는 기초가 되는데(이영민, 1999), 지리 개념은 모두 지리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리 개념의 습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를 높이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지리 용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와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김현주, 1997, 22-23).

첫째, 지리 용어는 지리 개념을 조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리 개념은 지리 지식을 쌓고 지리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지리 지식과 지리적 사고력은 지리학자만이 가져야 하는 전유물일 수 없다. 일반인에게도 지리 지식과 지리적 사고력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민주시민의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에, 지리학은 사회적 당위성과 아울러 사회과학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려운 한자 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용어가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쉽고 또한 일상생활의 요소들과의 연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지리 용어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리학습의 요소인 지리 지식이나 지리 개념은 지리 용어를 통해 기호화되며, 이러한 기호화된 지리 용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려운 한자로 만든 지리 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글세대의 학생은 어려운 한자 용어를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로 만든 지리 용어가 많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한자 용어 뜻풀이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3.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고고학계 성과를 검토하기

고고학계는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훌륭한

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학문 분야이다. 그래서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고고학계의 우리말 용어 사용 사례를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말 고고학 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된 고고학계 특성과 환경을 고찰하고, 한자 용어 대신에 사용하는 우리말 고고학 용어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고학계 특성과 환경, 그리고 우리말 용어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지리학계에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고고학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만 연구되는 학문에 속하였고, 고고학계 보고서와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일본어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에 한국 고고학은 일본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선구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고고학계 용어는 일본어식 한자 용어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70년대 들면서 구미 지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젊은 교수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구미지역의 고고학 용어를 각자 나름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한영희, 1985). 1970년대 고고학계에는 일본어식 용어, 우리말 용어, 구미식 용어의 한글 번역어 등이 난립하여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고고학 용어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를 중심으로 고고학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통일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마침내 1976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고학·미술사학 용어 개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면서 쉬운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지는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작업의 자료 수집은 만 3년이 지난 1979년 12월 『고고학·미술사 용어 심의자료집』(4×6배판, 983쪽, 12,000개 용어 수록) 출간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84년 3월 『고고학 분야 개정 용어집』(4×6배판, 108쪽)을 완성하였다(한영희, 198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고학계에서는 쉬운 우리말 용어 사용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고고학계의 우리말 용어 사용 운동을 통해 변화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석기 종류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다. ‘타제석기(打製石器)’ 대신에 ‘편석기’, ‘마제석기(磨製石器)’ 대신에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편석기’는 자연석에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형태를 다듬어 만든 석

기로 구석기 시대 사람이 주로 사용했다. ‘편석기’는 원석(原石)에 타격을 가해 쓸모없는 격지를 떼어낸 다음 원석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몸돌석기(석핵석기)(石核石器)’와 타격으로 떨어져 나간 격지를 손질해 만든 ‘격지석기(박편석기)(剝片石器)’로 나눌 수 있다. ‘간석기’는 돌을 갈아 만든 선사 시대의 생활 도구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간석기’는 ‘편석기’에 비해 훨씬 발전된 도구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토기 종류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다. 신석기시대에는 ‘빗살무늬토기(줄문토기)(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덧무늬토기(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 ‘붉은 간토기(단도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 ‘가지무늬토기(채문토기)(彩文土器)’ 등도 있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토기 표면에 각종 문양이 들어가 있는 토기인데, 이 토기의 밑바닥 모양은 주로 포탄형을 이룬다. 청동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무문토기)(無文土器)’가 주류를 이루었다. ‘민무늬토기’는 일반적으로 갈색 내지는 황갈색의 색상을 띠고, 문양이 없으며, 납작바닥(平底)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장식·석영립 등 화강암계의 굵은 모래 알갱이가 섞인 흙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민무늬토기’는 ‘빗살무늬토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빚고 ‘한뼉가마(노천요)(露天窯)’에서 구웠는데, 지역마다 그 형태가 다른 독특한 모양의 토기가 있었다.

세 번째로 무덤양식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다. 가장 흔한 예로 ‘지석묘(支石墓)’가 ‘고인돌’로 바뀐 사례를 들 수 있다. ‘고인돌’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데, ‘고인돌’에서는 ‘간돌검’과 ‘돌화살촉’, 혹은 ‘민무늬토기’ 등 토기류와 각종 청동기가 주요 ‘껴묻거리(부장품)’로 발견되기도 한다. ‘고인돌’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포하나, 황해도·전라도에 가장 밀집되어 나타나며, 수백기의 ‘고인돌’이 한 곳에 무리 지어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 ‘북방식 고인돌’은 한강 이남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전라북도 고창에서 발견된 ‘북방식 고인돌’이 최남단의 것이다. ‘남방식 고인돌’은 전라도 지방에 밀집 분포하며, 경상도와 충청도 등 한강 이남에서도 많이 보인다.

고인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덤양식에 대한 용어가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옹관묘(甕棺墓)’가 ‘독널무덤’으로, ‘토광묘(土壙墓)’가 ‘움무덤’으로, ‘목곽분(木槨墳)’이 ‘덧널무덤’으로, ‘석관묘(石棺墓)’가 ‘돌널무

덤'으로, '석곽묘'(石槨墓)가 '돌곽무덤'으로, '석실묘'(石室墓) 혹은 '석실분'(石室墳)이 '돌방무덤'으로, '적석총'(積石塚) 혹은 '적석묘'(積石墓)가 '돌무지무덤'으로,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석개토광묘'(石蓋土壙墓)가 '돌뚜껑움무덤'으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 '굴식돌방무덤'으로, '전축분'(塼築墳)이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고고학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 사례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패총'(貝塚)이 '조개무덤'으로, '수혈주거'(堅穴住居)가 '움집'으로, '철정'(鐵錠)이 '덩이쇠'로, '요지'(窯址)가 '가마터'로, '방추차'(紡錘車)가 '가락바퀴'로, '용범'(鎔范)이 '거푸집'으로, '환두도'(環頭刀)가 '고리자루칼'로, '조문경'(粗文鏡)이 '거친무늬거울'로, '어망추'(漁網錘)가 '그물추'로, '부장품'(副葬品)이 '꺼묻거리'로, '석도'(石刀)가 '돌칼'로,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가 '반달칼'로, '석부'(石斧)가 '돌도끼'로, '유구석부'(有溝石斧)가 '홈도끼'로, '마제석부'(磨製石斧)가 '간돌도끼'로, '환상석부'(環狀石斧)가 '달도끼'로, '석족'(石鏃)이 '돌화살촉'으로, '마제석족'(磨製石鏃)이 '간돌화살촉'으로, '연석'(研石) 혹은 '석봉'(石棒)이 '갈돌'로, '양면핵석기'(兩面核石器)가 '주먹도끼'로 바뀌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고학계는 일찍부터 우리말 용어로 통일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고고학계에서 우리말 용어 사용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고고학계 전문직 종사자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어 용어 개정 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아무튼 고고학계의 우리말 용어 사용 과정은 학술·전문 용어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4.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우리나라 학계에서 사용하는 학술 용어나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지나치

게 많다. 이는 학문이나 전문 분야의 내용 대부분이 중국·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근대학문은 대체적으로 일본을 거쳐서 국내로 전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어식 한자 용어가 그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한자조어(漢子造語)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허재영, 2014).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선구자들이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 학문과 전문 분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일본어식 한자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지리학계도 다른 학문이나 전문 분야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선구자들이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 지리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이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도 일본의 지리학 학술 저서와 학술 논문을 늘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리학계는 여러 측면에서 일본 지리학계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광복 이후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나라 지리학자가 일본어식 한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80년경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일본의 지리 교과서를 옮겨 쓰거나 모방하여 쓰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는 일본의 세계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를 거의 비슷하게 모방하였고, 한국지리 교과서의 자연지리 부분도 일본지리 교과서의 자연지리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어떤 지리 용어가 일본지리 교과서 자연지리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면, 한국지리 교과서 자연지리 부분에서도 무비판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용어의 사례로 '선상지'(扇狀地)라는 지리 용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형성된 지 오래된 지형이 보편적으로 있어, 선상지의 발달이 극히 미약하다. 심지어 어떤 지형학자는 남한에서는 전형적인 선상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김종욱, 1983; 장재훈, 1984; 장재훈, 1997).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상지의 발달이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선상지가 매우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지리 교과서가 일본지리 교과서 내용을 많이 베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산지의 하천이 V자곡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굽은 토사를 운반하여 산지의 곡구에

는 선상지가 현저하게 발달하였고, 이러한 선상지가 일본인의 생활 무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본지리 교과서는 일찍부터 일본의 선상지를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이를 베낀 한국지리 교과서도 선상지를 무비판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리학자가 사용하는 지리 용어 중에는 일본어식 한자 용어가 지나치게 많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현행 지리 교과서는 어려운 일본어식 한자 용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과의 발달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어려운 한자 용어의 나열은 '무의미한 철자 암기학습'(김현주, 1997, 13)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지리교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의미를 축약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 용어 자체가 한글세대인 학생에게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 용어가 오히려 정확한 의미와 개념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자 용어의 의미 축약 능력이 한글세대 학생에게 결코 장점만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무상일수'(無霜日數)라는 한자 용어는 지리학 전문가나 한자에 밝은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음 접하게 되는 한글세대 학생은 이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어렵다. 대다수 학생에게도 '무상일수'보다는 '서리없는날짜수'라는 우리말 표현이 더 쉽게 다가갈 것이다. 비록 우리말 지리 용어가 다소 길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우리말 지리 용어를 만들어내어 사용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소함의 문제는 극복되리라 본다. 축약된 한자 지리 용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용어 자체는 다소 길어지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우리말 지리 용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날 한글세대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자 지리 용어를 한글로만 표기한다. 그런데 어떤 한자 용어는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같아서 학생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암대지'(鎔巖臺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높고 평평한 지형)라는 지리 용어는 지리 교과서에는 한글로 '용암대지'라고 표기되는데, 이를 한글세대 학생은 '용암대지'(鎔巖大地), 즉 '용암에 의한 큰 땅'

등으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일부 한자 용어는 한글세대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뜻을 적용하여 해석을 달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소위 오개념(misconcept)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오개념은 교육 효과를 심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지리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학생의 인지 수준, 즉 학령 단계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예를 들어 '충적평야'(沖積平野; alluvial plain)라는 용어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학생에게 대단히 생소하게 어렵게 전달되고 있다. 과학 교과서에서도 '충적'(沖積; 흐르는 물에 의하여 흙과 모래 등이 운반되어 쌓임)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임준목, 2000, 179-180). 결국 한글세대 학생은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한자 지리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말 지리 용어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조시수'(日照時數), '선상지'(扇狀地), '침엽수'(針葉樹), '윤작'(輪作)이라는 용어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개별 한자의 뜻을 모두 알고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한글세대 학생의 경우에는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만큼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러한 한자 용어를 '해비침시간', '부채꼴 땅', '비늘잎나무', '돌려짓기'라는 우리말 용어로 고쳐놓는다면, 용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소 길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말 용어가 그 자체로서 뛰어난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용어 늘어짐 현상은 인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5.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성

우리나라 과거의 지리학자들은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보다는 한자 지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한자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쉬운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도 어려운 한자 용어를 무

리하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들은 한자 용어에 길들여져서 어려운 한자 용어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지리학의 각 분야에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남아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활동하는 대부분의 지리학자는 한글전용 시대에 교육을 받았고, 또한 대다수 지리학자는 한자 용어만이 공식 용어나 학술 용어로서 적절하다고 믿지도 않는다.

우리말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며, 있는 그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옥’이 ‘집’으로, ‘구렁’이 ‘언덕’으로, ‘사구’가 ‘모래언덕’으로, ‘매장량’이 ‘묻힌량’으로, ‘사하촌’이 ‘절아래마을’ 등으로 바뀐다면 일반인의 이해력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단지 우리말 용어가 그동안 학술·전문 용어로 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말 지리 용어가 지리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되어 일반인에게도 널리 통용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말 지리 용어의 어색함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에는 같은 뜻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학령단계가 높아지면서 용어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변하여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한 용어 사용이 아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쉬운 우리말 용어가 중·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한자 용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돌려짓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윤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학령단계가 낮은 단계에서만 쉬운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고 학령단계가 높아졌다고 해서 굳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 용어들은 학령단계가 높아지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같은 학년 교과서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지리 용어들을 섞어놓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리 용어를 선택할 때에 같은 학년 내에서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그동안 매우 부족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교과서에서 ‘갯벌’과 ‘간석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이전·이영민, 2001).

한자 지리 용어보다 우리말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 한자 용어를 버리고 우리말 용어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계절풍’ 대신에 ‘철바람’, ‘선상지’ 대신에 ‘부채꼴형’, ‘습곡운동’ 대신에 ‘주름운동’, ‘단층운동’ 대신에 ‘땅끊임운

동’, ‘용기운동’ 대신에 ‘솟음운동’, ‘범람원’ 대신에 ‘큰물벌’, ‘침식작용’ 대신에 ‘깎임작용’, ‘퇴적작용’ 대신에 ‘쌓임작용’ 등은 한글세대 학생에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쉬운 우리말 용어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용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쉬운 우리말 용어도 학술 용어나 공식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 지리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만, 좀 늘어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상일수’를 ‘서리없는날짜수’로, ‘한극’을 ‘가장추운곳’으로, ‘상록활엽수’를 ‘사철푸른넓은잎나무’, 혹은 ‘해식애’를 ‘바닷가파도벼랑’으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말 용어가 마치 하나의 문장을 축소해놓은 듯 간결성이 부족하고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인지발달 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어려운 한자 용어가 아니라 쉬운 우리말 용어임에 틀림없다. 다만, 우리말 용어를 어떻게 줄여서 간결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길고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말 지리 용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문장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용어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어려운 한자 용어가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작업의 당위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관행을 평계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우리말 지리 용어의 사례 검토

다음 표 1은 지리 교과서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이전·이영민, 2001). 이 표는 초·중·고등학교의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존의 용어 중에서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용어 중에는 많은 지리학자의 충지를 모아 좀 더 가다듬어야 할 용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전문가가 논의의 장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표 1. 우리말 지리 용어의 사례

번호	기존의 지리 용어	쉬운 지리 용어	번호	기존의 지리 용어	쉬운 지리 용어
1	기축	집집승	49	염도	소금기
2	간석지	갯벌	50	온난전선	더운전선
3	격해도	바다와의거리	51	우각호	소뿔호
4	경사	비탈	52	육풍	육지바람
5	경사한계	비탈한계	53	윤작	둘려짓기
6	계절풍	철바람	54	용기운동	솟음운동
7	고산기후	높은산기후	55	이모작	두벌농사
8	고위평탄면(고위침식면)	높이솟은평지	56	인력	끌힘
9	고적운	높은더미구름	57	일조시간	해비침시간
10	고층운	높은층구름	58	정단층	내림땅끊임
11	구름	언덕	59	조경수역	해류만남지역
12	구름성평야	언덕벌	60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13	기온역전현상	기온뒤바뀜현상	61	총상화산	총모양화산
14	기온의 일교차	기온의 하루차	62	중유석	돌고드름
15	기온의 연교차	기온의 한해차	63	지각	땅껍데기
16	노촌	길가마을	64	집중호우	무더기비
17	다우지	비 많이오는곳	65	철광석	쇠돌
18	단층선	땅끊임선	66	침식작용	깎임작용
19	단층운동	땅끊임운동	67	충적평야	충적벌
20	등고선	같은높이선	68	침엽수	비늘잎나무
21	등치선도	같은값선지도	69	침엽수림	비늘잎나무숲
22	동족촌(동성촌)	같은성씨마을	70	태양고도	해높이
23	매장량	묻힌량	71	퇴적작용	쌓임작용
24	무상일수	서리없는날짜수	72	평야	벌
25	범람원	큰물벌	73	평야지대	벌지대
26	복류천	땅밑하천	74	폐수	버림물
27	부유물질	떠다님물질	75	포유류	젖먹이류
28	불투수층	물안스밈층	76	풍속	바람속도
29	사구	모래언덕	77	풍향	바람방향
30	사주	모래띠	78	피수대	큰물피난지대
31	사취	모래부리	79	하안단구	강가다락땅
32	사하촌	절아래마을	80	하중도	강가운데섬
33	산맥	산줄기	81	하천구배	강바닥물매
34	상록활엽수	사철푸른넓은잎나무	82	한극	가장추운곳
35	서극	가장더운곳	83	한랭전선	추운전선
36	석주	돌기둥	84	해분	바다분지
37	석순	돌순	85	해식동	바닷가파도동굴
38	선상지	부채꼴땅	86	해식에	바닷가파도벼랑
39	소우지	비적게오는곳	87	해안	바닷가
40	수송적환지	짐바꿈지역	88	해안단구	바닷가다락땅
41	순상화산	방패모양화산	89	해안지대	바닷가지대
42	습곡운동	주름운동	90	해조류	바다나물류
43	습지	습한땅	91	해풍	바다바람
44	어선	고기잡이배	92	혼작	섞어짓기
45	어업	물고기잡이	93	홍수	큰물
46	어업량	물고기잡이량	94	화물선	짐배
47	역단층	올림땅끊임	95	활엽수	넓은잎나무
48	염전	소금밭	96	활엽수림	넓은잎나무숲

7. 맺음말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 학회들이 가칭 ‘지리 편수 용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리 용어 문제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편수 용어는 교과용 도서를 기술할 때 사용하도록 편수자료에 교과별로 집성되어 있는 용어를 가리킨다(김태호, 2020, 104; 오현아, 2019, 63). 이 위원회에는 반드시 현직 지리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학생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우리말 지리 용어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리 편수 용어를 위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한자 지리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얼마나 많은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전문가가 어려운 한자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지는 데 동의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지리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위원회는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리학자 혹은 지리교육 전문가가 공식 용어로 지정된 지리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말 지리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 공식 용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계의 우리말 용어 사용은 다른 학문 분야에 모범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타제석기’ 대신에 ‘뎨석기’, ‘마제석기’ 대신에 ‘간석기’, ‘즐문토기’ 대신에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대신에 ‘민무늬토기’를 사용한다. 또한 무덤양식을 표현할 때도 ‘지석묘’ 대신에 ‘고인돌’, ‘옹관묘’ 대신에 ‘독널무덤’, ‘토광묘’ 대신에 ‘움무덤’, ‘목곽분’ 대신에 ‘덧널무덤’, ‘석관묘’ 대신에 ‘돌널무덤’, ‘석곽묘’ 대신에 ‘돌곽무덤’, ‘석실묘’ 대신에 ‘돌방무덤’, ‘적석총’ 대신에 ‘돌무지무덤’을 사용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오늘날 널리 사용하는 우리말 고고학 용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 고고학 용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일제 강점기에는 국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어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전문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다(허재영, 2014, 228). 광복 직후 국어의 가장 큰 문제

는 우리말을 도로 찾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노력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학술·전문 용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격화되었다(허재영, 2015, 202).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각각의 분야에서 어려운 한자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도 쉬운 우리말 용어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지리학이 일반인에게 선호도가 높은 학문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리학자의 우리말 사용 노력이 인접 학문 분야에도 파급되어 다양한 학문·전문 분야에서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말 사용하기 운동, 쉬운 말 쓰기 운동, 한글 쓰기 운동 등은 국어국문학자만의 몫이 아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쉬운 우리말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챙기는 작업은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전 교과목 관련 학자와 교육자가 함께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오늘날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4세기(75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한 남·북한의 교육은 상당한 괴리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학문·전문 분야에서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다양한 학문·전문 분야에서는 이질적인 용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전문가는 남북한의 지리 용어를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남북한 지리학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학술적 교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오현아, 2019). 북한 사회는 쉬운 우리말 용어를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용되는 지리 용어 중에서는 우리가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 지리 용어가 많이 있을 수 있다(이전, 1998; 김재완, 2003; 이전, 2005).

이 글에서는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의 문제점과 쉬운 우

리말 용어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지리 교과서의 지리 용어를 어떻게 쉬운 우리말 용어로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해도가 높은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지리 수업에서 지리 개념과 지리 지식의 습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지리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들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통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김승현, 2001, 우리말 화학 술어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김재완, 2003,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53-168.

김종욱, 1983, 사천 와룡산 서쪽 산록면의 형상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태호, 2020, “지리교과 지형 편수용어 개선을 위한 모색,” 한국지형학회지, 27(1), 103-115.

김현주, 1997, “학생과 교사의 지리용어인식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한국지리』 농업단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37, 13-32.

박승호, 2005, 고등학생들의 국사 용어 이해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경제사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오현아, 2019,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우리말글학회), 82, 59-96.

이순동, 2021, “법률 용어의 개선: 특히 일본식 문체의 순화를 중심으로,”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73, 25-65.

이영민, 1999,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지리교사들의 인식과 재정립 방향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4(3), 281-294.

이전, 1998,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분석,” 민족통일논집(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소보), 14, 29-44.

이전, 2005,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고찰: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1990년판과 2000년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607-619.

이전·이영민, 2001, “쉬운 우리말 지리용어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연구,” 지리학연구(한국지리교육학회), 35(1), 1-11.

임준묵, 1999, “사회(지리) 교과서 지형 용어의 이해도 향상에 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7(1), 165-212.

장재훈, 1984, “한국의 산록완사면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19, 225-338.

장재훈, 1997, “남원 남서부 지역의 산록완사면에 관한 지형 연구,” 지리학연구(한국지리교육학회; 현 국토지리학회), 30, 87-102.

조성욱, 2014, “중등 지리교과서의 학습용어 분석: 과목별, 교과서별, 단원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3), 43-59.

한영희, 1985, “고고학 용어의 말바꾸기 작업,” 배달말(배달말학회), 10(1), 3-18.

허재영, 2014, “『우리말 도로 찾기』의 국어 순화 원리,” 사회언어학(한국사회언어학회), 22(3), 227-244.

허재영, 2015, “과학 술어와 우리말(김두봉, 1932)의 전문 용어 다듬기,” 동악어문학(동악어문학회), 64, 201-226.

교신: 이전,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메일: gglee@gnu.ac.kr, 전화: 055-239-6100, 팩스: 055-239-6199)

Correspondence: Lee, Jeon, Gyeongnam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48, Yongji-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430, Korea(e-mail: gglee@gnu.ac.kr, Tel: 055-239-6100, Fax: 055-239-6199)

최초투고일 2022. 1. 4
수정일 2022. 1. 19
최종접수일 2022. 1. 21

조선족 집중거주지의 원형(原形)으로서 가리봉: 집터, 일터, 그리고 쉼터

정수열* · 이정현**

Garibong as The Archetype of *Chosonjok's* Residential Concentration

Su-Yeul Chung* · JungHyun Lee**

요약 : 본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인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 이르러 204만여 명에 달한다. 동일 국적 혹은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서로 이웃하며 거주하면서 국토 공간 곳곳에 집중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의 최초 집중거주지인 가리봉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정착지로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리봉이 동포이자 외국인인 조선족의 귀환 이주와 정착에 적합한 장소로 여겨진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리봉이 집터이자 일터이며 그리고 쉼터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조선족의 삶터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귀환 조선족의 집중거주지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가리봉의 지역지리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국내 각지에 새롭게 생겨나는 조선족 집중거주지의 확산과 분화를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조선족, 이주민, 집중거주지, 원형(原形)

Abstract :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for a long time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30 years, reaching 2.04 million by 2020. Foreigners of the same nationality or culture are living next to each other, forming residential concentrations in the Korean ci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Garibong as the first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Chosonjok*(Korean-Chinese), the largest migrant group. To begin with, we analyze how Garibong becomes a suitable place for the returning migrants which are copatriots and also foreigner.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how Garibong gets to be a place of life(home, work, and recreation) for Chosonjok immigrants. All in all, Garibong is considered to be the archetype of the Chosonjok's residential concentration. This regional geographical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basis for further analyzing the spread and differentiation of newly emerging Korean-Chinese settlement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by.

Key Words : *Chosonjok*(Korean Chinese), Immigrant, Residential Concentration, Archetype

G밸리 산업박물관(가칭)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2020년 3월 20일, 서울대)에서 발표된 바 있음. 4장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은 이정현(2021)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게재된 바 있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교수(Professor,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sychung@smu.ac.kr

**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 박사(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checosa@suwon.re.kr

1. 서론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8년 약 31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20년 약 204만 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 인구의 약 3.93%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의 국내로의 이주는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웃 아시아 국가와의 임금 격차 심화,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춘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농축산어업, 건설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업에서의 인력난 가중, 또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외국인 이주민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집중거주지가 새롭게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국토 거주공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도 외국인 집중거주지는 존재했다. 구한말 조계지나 외국군 주둔지 인근과 같은 외국 관련시설 주변 외국인 집중지 중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했던 대만 국적 한국교회는 서울의 경우 소공동과 이후 연희동에 모여 살고 있다. 외교관, 해외 언론인, 상사주재원 등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고급 주택 단지 또한 존재했다. 이들 집중거주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그 수가 적었으나, 1990년대 단순 노무직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다수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에서 전환점이 된 가리봉동 조선족 집중거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집중거주지가 외국인 이주민의 삶터라는 점을 주목하고 집중거주지의 기능과 역할을 집터,¹⁾ 일터, 그리고 쉼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이들의 국내 정주화 정도에 따라서 심화된 연구 경향과 주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를 모색해본다. 3장에서는 주거지로서 가리봉동의 역사적 변천을 거주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해당 지역은 과거에 여공의 이촌향도 상경지였다면 지금은 조선족의 초국적 상경지라 할 수 있다. 4장은 조선족의 가리봉동 이주 과정 또는 이주 결과로서 성장해 온 이주민 삶의 터전을 집터, 일터, 그리고 쉼터로 나누어 차례로 분석한다. 마지막장에서는 연구의 결

과와 함께 이로 인해서 제기되는 함의를 찾아본다. 본 연구는 동포이자 외국인 이주민인 조선족의 최초 집중거주지를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리봉동이라는 국내 공간이 외국인 이주민과 동포로서의 조선족 생활에 적합한 장소로 가꾸어진 배경 및 과정과 함께, 이들의 삶터가 다시 국내 공간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집중거주지에 대한 기존 연구

국내 외국인 이주민의 집중거주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박세훈, 2010). 첫째,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으로 구한말 개항 시기 최초 형성된 인천차이나타운이나 외국 군대 주둔지이자 종교 사원이 있는 용산-이태원을 들 수 있다. 둘째, 외교관, 언론인, 상사 주재원 등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고급주거단지로 프랑수아 서래 마을이나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일본인 마을이 사례이다. 셋째, 공단배후지역에 노동자거주지로 안산시 원곡동(국경없는 마을), 남양주시 마곡지구, 시흥시 정왕동, 대구시 달서구 등이다. 넷째, 대도시 저렴한 주택지로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조선족 타운)과 구로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 각각은 우리나라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정수열, 2018). 인천차이나타운은 1884년 ‘인천화상조계장정’에 따라 조성된 조계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개항 이후 식민의 역사가 담겨 있다. 용산-이태원은 임오군란을 제압하기 위해 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다가 청일전쟁 이후 일본군이 대신 들어섰으며 해방 이후로 미군의 주둔지가 되었다. 해당 지역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 이념대립, 냉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태원은 이슬람중앙성원터에 대표적인 무슬림의 밀집지역이 되었다. 이슬람 사원은 1970년대 중동 산유국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기에 산업화 초기 외화 벌이를 위한 중동 진출의 단면을 담고 있다.

공단 배후 지역에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거주지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뚜렷해졌음을 보여 준다. 이

는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 덕이기도 하며 같은 이유로 전 문직 외국인 노동자의 고급주거단지도 성장했다. 대도시의 저렴한 주택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집중거주지는 한국계 중국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해 혹은 지배를 피해 한반도를 떠났다가 해방이후에도 분단, 전쟁, 냉전으로 체류국의 국민으로 사회화된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증언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집중거주지는 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초 과정으로 최재현·강민조(2003), 손승호(2008), 김희철·안건혁(2011), 이진영·남진(2012)은 그 지리적 분포와 변화를 파악하였다. 박세훈·정소양(2010)과 같이 집중거주지를 유형 분류하는 연구가 잇따랐다. 특정 집단의 집중거주지에 대한 심층 분석도 이루어졌다. 예로, 서지수(2012)는 조선족 집중거주지로서의 대림동을, 홍승표(2008)는 무슬림 집중지로서 한남동을 탐구했다. 집중거주지의 형성 과정에 관련하여 인구지리학에서는 이주에 주목했다. 정수열(1998)은 1990년대 중반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 이주 과정을, 정수열·이정현(2014)은 대림동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주 경로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지은 외(2011)와 같이 외국인의 주거선호와 거주지 선택 과정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집중거주지의 의미를 짚어보는 논의도 이어졌다. 즉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따른 공간적 격리로, 이와 달리 타국 생활의 인식이나 인큐베이터로 자민족 단합의 지리적 표출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정현·정수열, 2015). 박배군·정건화(2004)는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거주지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배제’와 ‘잇혀짐’ 정치의 소산이라고 보았다. 반면 조현미(2006)는 대구시 달서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국적 이주민의 만남과 정보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초국가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그 공간과 장소의 발달이 심화됨에 따라서 깊이를 더해갔다. 초기에는 낯선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집단의 공간분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일부 국적 출신 외국인의 국내 정주화 경향이 보이자 국적별 외국인의 지역 분포 및 밀집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이들이 정주하면서 집중거주지를 형성

하는 기제를 분석하고자 해당 인구 집단의 이주에 집중한 연구도 전개되었다. 한편, 외국인 이주민이 자국적, 자민족 집중거주지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자, 이들을 장소의 주체로 간주하고 해당 정체성 및 장소성을 공간 철학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되었다.

종합하면,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대한 기존 논의는 그 연구의 지평선을 다채롭게 넓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각 연구의 특정 분야와 주제를 강조하는 수단으로만 현장의 집중거주지를 활용한 점은 한계로도 보인다. 그 예로, 서지수(2012)는 대림동을 조선족이 국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통과의례지로 보았고, 이에 대림역 8번 출구는 조선족의 중국 내 출신지와 대림동을 연결하는 실질적, 상징적 통로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대림동의 장소성을 조선족의 국내 사회 진출 ‘통로’로서 규명하였다. 하지만 통로로서 장소 매김된 대림동에는 여전히 조선족이 생활 주체로서 또 다른 장소를 가꾸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족의 국내 생활이 실현되는 현장에 대해서 장소성을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삶의 전개 과정과 함께 해당 결과로서의 터전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선(2010)의 연구는 조선족의 국내 최초 정착지로서의 가리봉동과 정주민의 삶과 의식을 분석한 선례가 된다. 다만,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조선족의 정주지로서 가리봉동을 조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장소가 국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적 방식도 규명한 차별성을 보인다.

즉, 본 연구는 가리봉동에 펼쳐진 조선족 삶의 터전을 ‘집터’, ‘일터’, ‘쉼터’로 살펴봄으로써, 가리봉동이라는 공간이 조선족의 장소로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그것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조선족의 삶을 토대로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유지의 면모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들의 일상이 국내 사회와 연계되는 방식의 일면도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3. 가리봉동의 인구 구조: 여공의 상경과 조선족의 초국적 상경

1973년 마지막 시역 확장이 있는 직후인 1975년에 서울 인구는 약 688만 명(전국 인구의 19.8%)이었다. 당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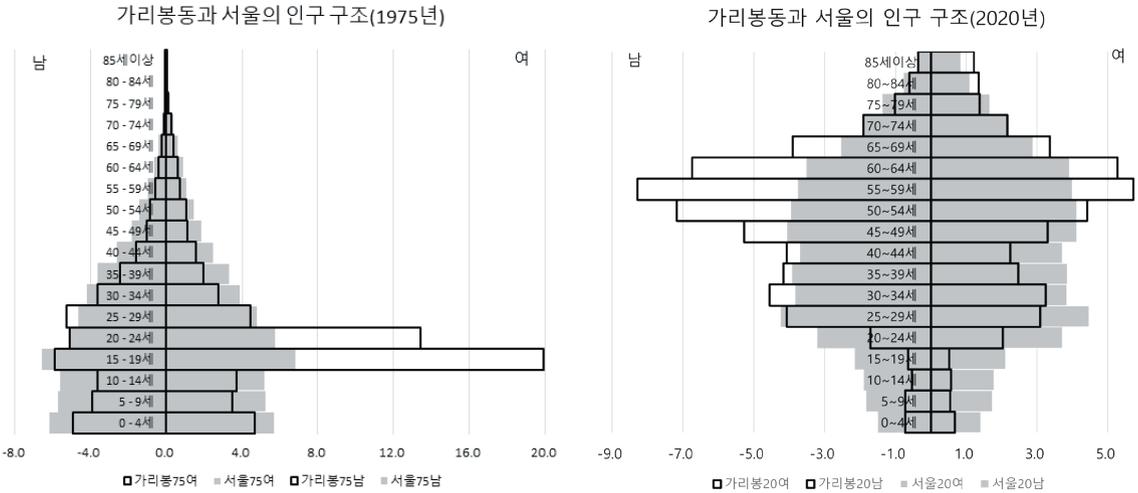


그림 1. 가리봉동과 서울의 인구 구조 (1975년, 2020년)

* 인구 피라미드의 세로축은 연령대를 가로축은 0을 기준으로 왼편 막대는 남성, 오른편 막대는 여성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울은 15~39세 연령대 인구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 도시였다(그림 1의 왼쪽 회색 인구피라미드 참조). 구로구 가리봉동은 15~24세 연령대 인구가 절반에 가까워 더 젊었다. 성별 구성과 결부시켜 보면 15~24세 ‘여성’ 인구가 가리봉 전체 인구의 33.3%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왼쪽 투명 인구피라미드 참조). 이처럼 3명에 1명꼴로 젊은 여성이 많은 것은 구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여공 덕이다.

1975년 이후에도 서울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1,060만 명(전국 인구의 24.4%)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인근 경기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소폭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약 959만 명(전국 인구의 18.5%)이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함에 따라 서울의 인구피라미드 또한 삼각형에서 중형으로 변화했고, 급격한 저출산이 더해지면서 오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가리봉동의 인구 구조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45~54세 연령대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며 인구피라미드는 역삼각형에 가깝다. 성별 구성도 변화었는데 40년 전에 관찰되었던 여초 현상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여성 100명 당 남성 수가 125명에 달할 정도로 성비가 역전되었다. 이와 같은 남초 현상을 동반한 두터운 중장년층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조선족의 유입 덕이다. 과거 여공의 상경이 특징적이었다면 현재

는 조선족의 ‘초국적 상경(박우, 2017)’으로 대체되었다.

조선족의 초국적 상경은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자료는 동 단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 단위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가리봉동이 속한 구로구의 지난 20여 년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999년 40만 명에 미치지 못했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46만 명에 근접했다. 이는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재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이 증가한 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수가 다소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약 43만여 명 수준이다.

위와 같은 인구 변화의 이면에 내외국인 구성의 변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1999년 1,350명으로 구로구 인구의 0.3%에 불과했으나, 다소 기복이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직전인 2019년 32,707명으로 7.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2006년 이후 구로구 인구는 43만~46만 명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내국인 비중은 줄고 외국인 비중이 늘어 내국인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약 3만 6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한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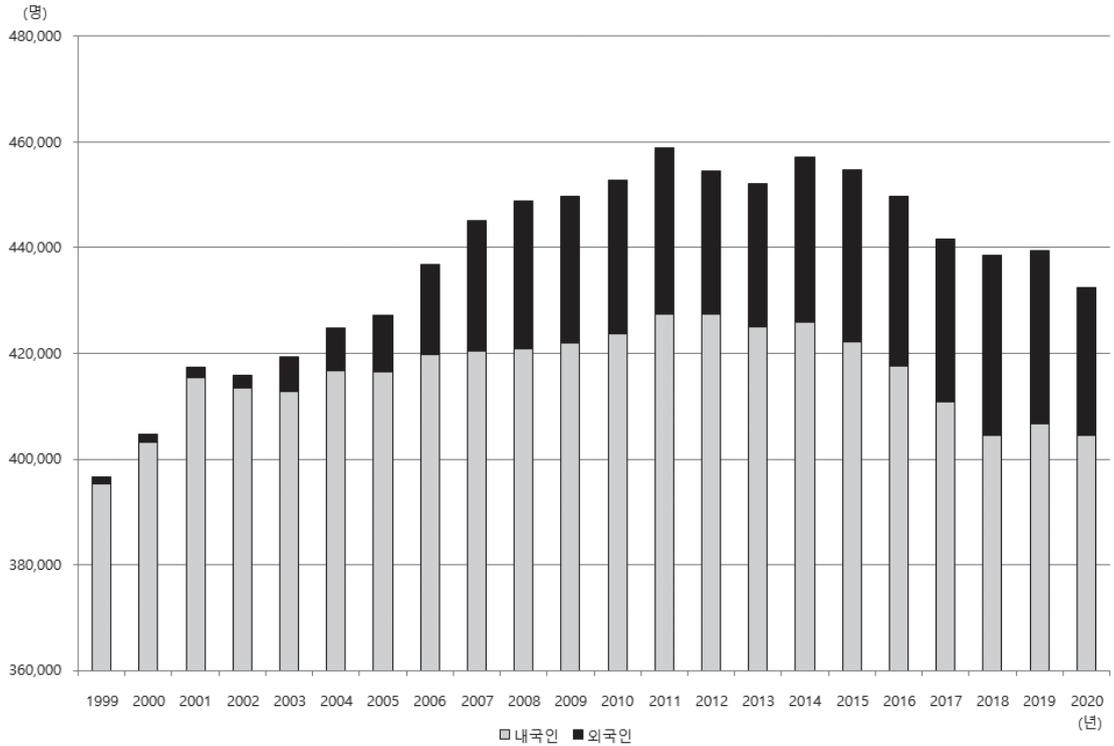


그림 2.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수 변화(1999~2020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국민이 6천여 명(14.4%)으로 많아 구로구 거주 외국인의 95%가 중국 국적이다. 사실 조선족은 서울시 외국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구로구는 조선족의 밀집거주지임이 분명하다.

외국인 이주민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통해 체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 구로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와 근로자가 각각 46.2%와 30.9%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밖에 한족 중국인에 결혼이민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 조선족은 방문취업제(H-2)와 재외동포법(F-4)을 활용하여 국내로 이주해 왔다. 2007년 제정된 방문취업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재외 동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는 취지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체류를 허용했다.

전국 규모에서 조선족 이주민은 2009년만 하더라도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방문취업이 소폭 감소한 반면 재외동

포(F-4) 비자로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이 급격히 상승했다. 재외동포법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공헌을 기대하면서 제정되었는데 당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한인만을 재외동포로 인정했다. 추후 중국과 CIS 지역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2004년에 개정되어 한국계 중국인도 출입국 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한국에 친척연고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국가 기술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신청가능하다. 정부에 의해 지정된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취업이 자유롭고 5년 만기 후 해외출국 없이도 연장이 가능해서 방문취업 비자보다 선호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취업 비자로 왔다가도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 1. 구로구 거주 외국인 이주민의 출신국가별 이주목적(2020년)

단위: 명(%)

출신국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동포	기타외국인	국적 합계
한국계 중국인	11,221 (30.9)	1,369 (3.8)	32 (0.1)	16,788 (46.2)	6,919 (19.0)	36,329 (100.0)
중국	53 (0.8)	729 (11.1)	155 (2.4)	* (0.0)	5,614 (85.7)	6,551 (100.0)
베트남	35 (6.8)	155 (30.3)	149 (29.2)	* (0.0)	172 (33.7)	511 (100.0)
미국	33 (9.5)	66 (18.9)	6 (1.7)	147 (42.1)	97 (27.8)	349 (100.0)
일본	* (0.0)	118 (69.0)	11 (6.5)	5 (2.9)	37 (21.6)	171 (100.0)
필리핀	32 (31.7)	48 (47.5)	* (0.0)	* (0.0)	21 (20.8)	101 (100.0)
대만	* (0.0)	26 (18.6)	* (0.0)	* (0.0)	114 (81.4)	140 (100.0)
기타	208 (14.3)	221 (15.1)	149 (10.2)	147 (10.1)	733 (50.3)	1,458 (100.0)
유형 합계	11,582 (25.4)	2,732 (6.0)	502 (1.1)	17,087 (37.5)	13,707 (30.0)	45,610 (100.0)

주) *은 5인 미만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20년.

4. 조선족의 집터, 일터, 그리고 쉼터로서의 가리봉

모두에게는 의(依), 식(食), 주(住)를 비롯한 일상과 그러한 일상을 유지하고자 노동을 누릴 장소가 있다. 하지만 장소는 특정인에게만 전유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특정인에게 일상생활을 향유할만한 '터전'으로 변모한다. 가리봉의 경우에도 시기별로 여공의 터전, 조선족의 터전, 조선족과 한족의 터전으로서 내비쳐왔고, 이후에도 시기별 특정인에 부합하는 장소로 변모해 갈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현재 가리봉의 이미지로서 가시화된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장에 가꾼 '터'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집터: 별집에서 원룸으로

서울 구로는 우리나라 공업화의 시발지이다. 1965년 구

로공단이 착공되고 1공단이 1967년 조성되었다. 자본은 적고 기술 수준도 낮다 보니 주력 산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이었다. 핵심 경쟁력인 값싼 노동력은 농촌에서 올라온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으로부터 얻어졌다. 산업화의 전 과정은 국가 주도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나 상경한 여공을 위한 주거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공장 기숙사가 있던 하였으나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숙사에 수용되는 비율은 1978년 19%에서 1984년 37%로 올랐으나 1988년에는 25%로 도리어 낮아졌다. 사실 여공 또한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았다. 기숙사비도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 통제가 심했다. 결국 상경한 대다수 여공들은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고향집 송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장 근처 별집에 거주하게 된다(최은영 외, 2013: 127-130).

현재는 흔히 쪽방이라 불리는 별집은 한 집에 입구로 들어가면 방들이 일렬로 여럿 있는 것이 흡사 '별집'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별집 내부구조는 개별 출입구, 방 하나, 부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이다. 방은

1.5~3평으로 두 사람이 눕기 힘들 정도로 좁고 특히 과거에는 연탄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상하수도가 있으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1990년대 초 구로공단에서 공장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별집에도 빈방이 늘어났다. 일부 별집은 여러 방을 터서 방 2칸에 거실을 갖춘 살림집으로 개조되기도 했다. 1990년 말에 접어들면서 별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다. 중국동포 조선족이었다. 방세를 기한 내에 꼬박 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동포 이주민은 임대인이 선호하는 세입자로 자리잡았다. 반대급부로 조선족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감면해주는 관행도 나타났다. 이처럼 내국인 집주인과 조선족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별집의 조선족화가 촉진되고 동네에 사람들의 왕래가 되살아났다.

조선족이 가리봉동을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렸다. 조선족 거주자가 늘어나니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식료품점과 생활용품점 그

리고 식당 등도 생겨났다. 당시 공단 이전 그리고 대형할인점 등장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던 지역 전통 시장인 가리봉 시장은 동포타운으로 변모하면서 활기를 찾았다. 중국 동포타운의 존재는 가리봉동을 조선족에게 더욱 매력적 주거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가리봉 시장의 핵심점포라 할 수 있는 파노라마 쇼핑센터가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었으나 지분을 가진 상인 간 이견으로 결국 사업이 무산된다. 철거된 쇼핑센터 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조선족은 가리봉 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체류기간이 길어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대림중앙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보다 양호한 대림동으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동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 조선족은 여전히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은 강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선, 2010). 그에 더해 조선족은 초기 이주 때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원룸 등 보다 양호한 주거시설을 찾게 되었다. 사실 가리봉동에



그림 3. 가리봉동 소재 다세대주택(좌상), 월세방 광고(우상), 파노라마 쇼핑센터 부지 주차장(좌하)과 철거된 상가건물(우하)

출처: 2020년 1월 17일 저자 촬영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별집보다는 원룸이 더 많아졌다. 조선족은 개량형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잔존해 있는 별집에는 3개월 관광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한족 중국인 노동자 여러 명이 월세로 산다.²⁾

2) 일터: 남구로역 인력시장

구로구 특히 가리봉동 일대가 재한 중국동포의 보급지가 된 것은 저렴한 주택과 가리봉 시장 때문만은 아니다. 현지에 형성된 인력시장 덕이기도 하다. 남구로역에는 새벽 5시 즈음해서 서울과 인근 경기도 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일용직 노동시장이 들어선다. 역 인근에 있는 수십 개의 인력사무소와 직업훈련 학교는 덩이다. 1972년 이래로 만들어진 남구로역 일대의 인력시장(이하 남구로역 인력시장)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거리를 찾으러 온다.³⁾

조선족의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활발한 참여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생활인구 추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인구 추계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을 합하여 특정 시점에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를 가늠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KT의 통신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하며 매일 시간대별로 그리고 행정동보다 작은 공간적 단위로 서울공공데이터에서 제공된다.

그림 5는 코로나19 전염병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가 있기 이전인 2019년 12월 8일 일요일과 9일 월요일 양일 간 남구로역 인력시장에 인접한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동 등 세 개 행정동의 국적과 체류자격별 생활인구를 보여준다. 내국인, 장기체류 중국인, 단기체류 중국인 등 각 집단의 0시 인구를 상주인구라 간주하고 이를 기준값으로 삼아 시간대별 생활인구를 100지수로 표현하였다. 8일 일요일(왼쪽 그래프)의 경우 내국인(실선)은 오전 8시 즈음하여 인구가 유입되어 머물다가 오후 9시 이후에 유출됨을 알 수 있다. 주말 근무나 상업 시설 이용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반면 장기체류 중국인(파선)은 낮 동안 유출되었다 저녁 시간에 다시 회복한다. 단기체류 중국인(점선)도 마찬가지로 낮 동안 유출되었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상주인구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중국 식당이 유동인구를 흡인한 것으로 보인다.⁴⁾

반면 평일의 시작인 9일 월요일(오른쪽 그래프)에는 새벽 5시 즈음하여 장기체류 중국인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상 장기체류 중국인은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거리를 잡아 승합차로 건설현장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현지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디 공사판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주로 경기도.. 그러니까 여기 남구로라는 데가 한국에서 인력 시장이 대단한 곳이에요. 아침 한번 새벽 5시에 저기 남구로역에 나가면, 몇 천 명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당일에 팀을 짜서 현



그림 4. 인력소개소(좌측 건물 2층)와 직업훈련소 및 안전교육원(우측 건물 3, 4층)

출처: 2020년 1월 17일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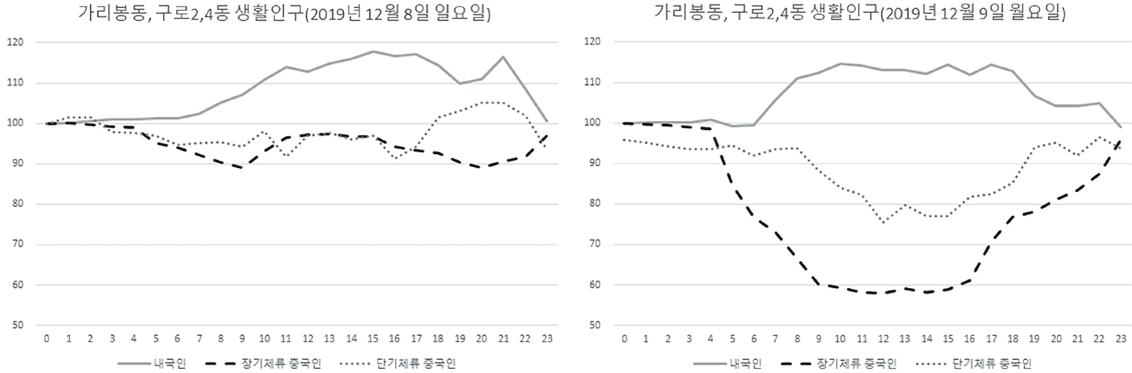


그림 5. 남구로역 역세권의 생활 인구 변화

* 2019년 12월 8일 0시 기준 내국인=57,898명, 장기체류 중국인=15,658명, 단기체류 중국인=1,147명

** 2019년 12월 9일 0시 기준 내국인=58,661명, 장기체류 중국인=15,058명, 단기체류 중국인=1,098명

자료: 서울시, 생활인구 추계, 서울공공데이터.

장으로 출발하니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5시 즈음에 팀을 꾸려서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용직으로...”⁵⁾라면서 일 나간다고 한다. 반면 여성 장기체류 중국인은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으로 또는 여타 지역에 입지한 상업 시설로 출근한다. 이러한 가리봉동 밖 출근 행렬이 생활인구 통계자료에 반영된 것이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이는 건설 작업이 끝나고 남구로역으로 돌아 오는 오후 4~5시 경에 일차적으로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즈음하여 한 차례 더 증가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단기체류 중국인도 정도는 다르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이 분석 결과로서 남구로역 일터시장이 조선족과 한족 중국인에게 있어 일터로의 관문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3) 조선족의 쉼터: 중국동포거리

가리봉동 상점가는 구로동로 그리고 가리봉 시장과 남부순환로 사이의 블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그림 6, 참조).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생활업종 통계지도⁶⁾에 따르면 가리봉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상권은 중식 식당과 호프 및 간이주점이 생활업종에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근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상권이나 구로디지털1단지 상권이 한식 식당과 카페 중심인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조선족과 한족 중국인을 주고객으로 삼는 가리봉동 상점가는 크게 외부로 공개된 구로동로 상점가와 내

부로 숨은 가리봉 시장 및 우마길 상점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로 이어지는 ‘구로동로 상점가’이다. 평일 새벽 일일노동자 시장이 형성되는 남구로역을 끼고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 중국인 인력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이다. 자연스레 저녁에 일을 마친 일일노동자들은 이 상점가를 마주치게 되고 이를 고객으로 삼는 상업거리가 발달했다. 상점들은 주로 도로의 한쪽에 늘어선 중국식당과 다른 한쪽에 즐비해있는 노래방, 게임장, 당구장, 여행사(행정사), 휴대폰 서비스점과 환전소 등 다양한 서비스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비자변경학원(기술습득학원)과 중국식품점도 있다.

둘째, 가리봉 시장 및 우마길 상점가이다. 우마길은 구로동로 남단과 연결되는 골목길이자 남부순환도로의 이면도로로서 가리봉 시장 인근을 빙 둘러 감싸고 있다. 가리봉동 조선족 상업거리의 전통 중심이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거주·활동하는 조선족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설날 같은 명절기간에는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골목(우마길)을 더 정비하고,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 조그맣게 시작해서, 리모델링하고, 실내는 그냥 두고 외부를 리모델링 하니까 깔끔하게 보이고... (중략) 중국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선족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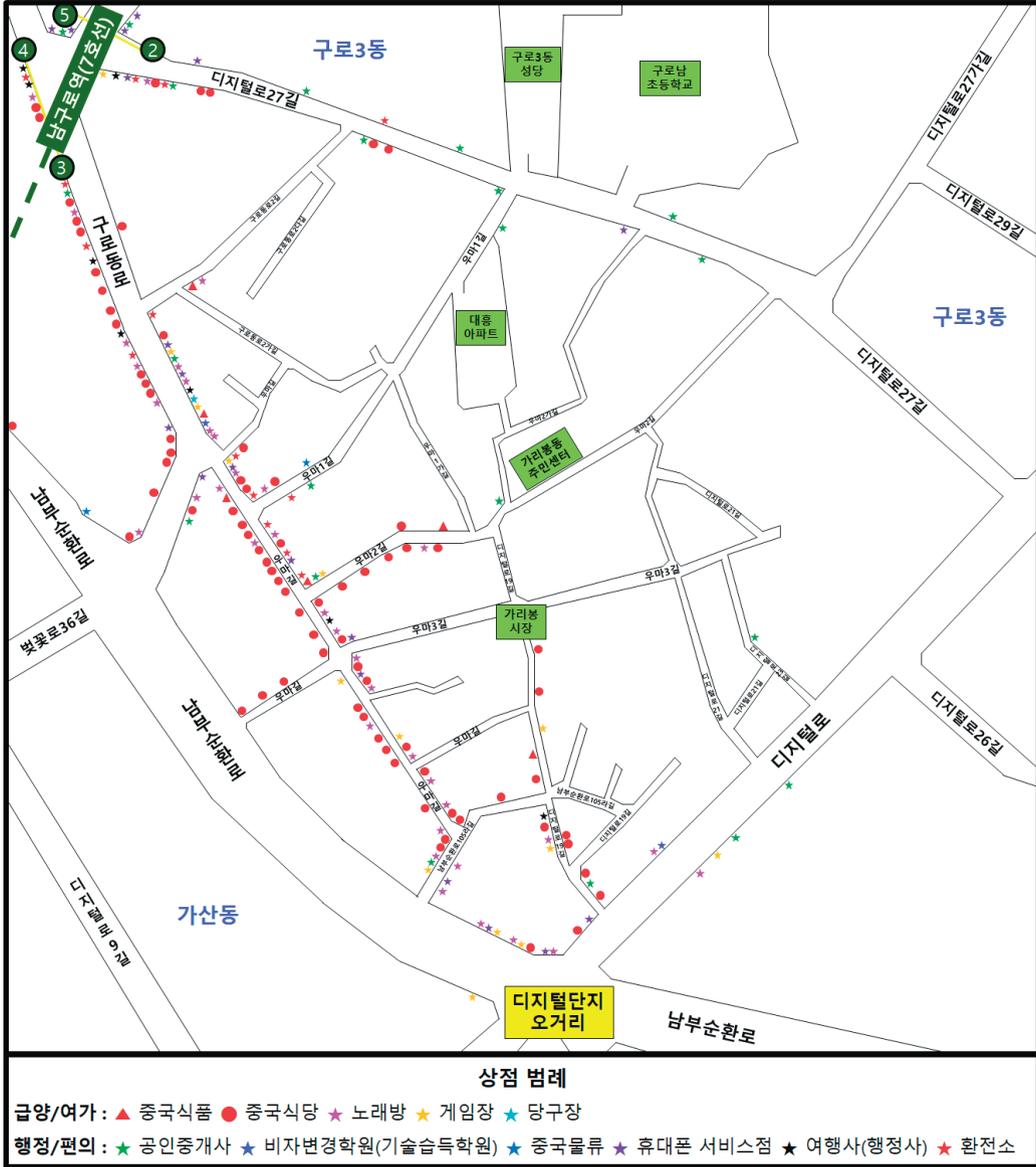


그림 6. 가리봉동 조선족 상업거리 (2020년 1월 조사)

국 사람들 위주로 장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 오게 되고... (중략) 춘절 때 식당이 더 잘 돼요. 비 오고 하면 식당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공사판 노가다를 못 가니까, 그 시간에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으니까... 여기 식당들은 쉬는 날이 더 잘 돼요. (중략)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정착했으니까 가리봉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가리봉동을 거쳐

서 갔으니까, 명절 때가 오면 그 사람들 약속 정할 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자 하면, 가리봉동 하면 다 아니까요. 지금은 대림동의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많이 모이자고 하지만요.”(가리봉동 공인 중개사(남), 2020년 1월 17일)

우마길을 따라 양측에는 다수의 중국식당과 몇몇 중국



그림 7. 가리봉 시장과 우마길 및 구로동로 일대 중국풍 상점

출처: 2020년 1월 17일 저자 촬영

식품점이 있으며, 그 사이로 노래방, 게임장, 환전소, 여행사(행정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중국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상점이 분포한다. 이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으면, 가게 운영자의 고향과 정체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연변(延邊), 지린(吉林), 투먼(圖們) 등 지명을 이용한 간판이 심심찮게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대해 논하면서 한국은 세계 도시들에서 관찰되는 ‘차이나타운’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자평이 있었다(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흔히 세계 도시의 차이나타운이라 하면 패루(牌樓) 뒤로 홍등이 달린 중국 음식점과 상점이 늘어난 과거 청나라풍 경관으로 특징지어진다(정수열, 2019). 현재 인천역 일대가 이 같은 정의에 부합하며 이국적 정취를 느끼려는 원주민을 상대로 하여 중국계 이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관광지에 가깝다. 반면 우리가 관찰한 가리봉동의 상점가는 현대 중국 도시에서 흔히 관찰되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리봉 상점가는 관광지 격인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현대 중국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일상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 상권이라는 점은 업종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당과 주점의 주고객은 중국계 이주민이다. 무엇보다 위안화에 특화된 환전소, 외국인 가입에 능숙한 휴대폰점, 본국에 돈과 물자를 보낼 수 있는 은행과 택배, 비자 관련 상담을 하고 서류 업무를 도와주

는 행정사 사무소 등을 통해 가리봉동 상권이 이주민의 편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연변 사과배

시인 석화(石華)는 작품 ‘연변, 사과배’에서 연변 조선족을 사과배에 빗대어 노래했다. 사과배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배어난 배나무가지를 연변 야생종인 들배나무 뿌리에 접목시켜 만들어낸 과일 품종이다(김호웅, 2010). 일제강점 전후로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에 정착한 조선족은 조선 민족문화를 간직해 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중국 공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과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한 알의 과일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엿보이듯 한국 정체성과 중국 정체성 양자 모두를 갖는 조선족은 사과배로 비유되었다. 사과배는 조선족이 자랑하는 고유 음식인 연변 냉면의 고품종으로 쓰인다. 쇠고기육수에 담긴 메밀냉면의 새콤달콤한 맛은 사과배가 고품종으로 선택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조선족은 한국을 모국으로 중국을 조국으로 삼는 다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사과배로도 비유되는 다중 정체성의 지리적 표출이 조선족의 집중거주지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조선족 집중거주지의 원형(原形)으로서 가리봉에

연변·7- 사과배

지은이: 석화(石華)

사과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한 알의 과일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백두산 산줄기 줄기저 내리다가
모아산이란 이름으로 우뚝 멈춰 서버린 곳
그 기슭을 따라서 들레들레에
만무라 과원이 펼쳐지었더니
사과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한 알의 과일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 땅의 기름기 한껏 빨아올려서
이 하늘의 해살을 가다가다 부여잡고서
봄에는 화사하게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푸름 넘쳐 내더니
9월,
해란강 물결처럼 황금이삭 설 때
사과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한 알의 과일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우리만의 『식물도감』에
우리만의 이름으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 ‘연변사과배’
사과만이 아닌
배만이 아닌
달콤하고 시원한 새 이름으로
한 알의 과일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출처: 석화, 2006,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6.
(김호웅, 2010: 16-17에서 재인용)

대한 지역지리학적 분석이다. 가리봉이 산업화 초기 상경한 여공들의 집터였다면, 탈냉전 그리고 탈산업화 시기 초국적 상경한 조선족들의 집터이다. 남구로역 일대에 뿌리 내린 일용직 인력시장은 조선족 이주민이 수도권 건설 현장을 일터로 삼게 한다. 이로써 가리봉은 조선족이 노동을 매개로 한국사회와 교감하는 접점이 되고 있다. 끝으로 구로동로와 우마길을 따라 형성된 조선족 상업거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편의 시설들로 이루어져있다. 최소 경관에 있어서는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현대 중국의 중소 도시와 닮았다. 중국식 식당 및 식품점, 주점과 노래방 등은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조선족이 체화한 중국 문화

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조선족 집중거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가리봉동을 지역지리학적으로 분석하였음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인다. 우선, 조선족의 삶과 삶터에 집중하여 가리봉동의 조선족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조선족 집중거주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해 귀환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적 방식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각지에 새롭게 생겨나는 조선족 집중거주의 확산과 분화를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리봉동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현지 조선족과 내국인의 근린 거주에 대한 전망 분석이다. 현재 가리봉동은 재개발이 중지되면서 내국인이 떠난 자리에 조선족이 입주한 형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재개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추후 재개발 시 복귀하는 내국인과 현지 조선족 간의 상생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둘째, 조선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이들이 가리봉동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더 좋은 터전을 찾으면, 어디로 이주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족의 삶터는 가리봉동을 시작으로 인근 대림동으로 확산되는 한편, 동 떨어진 자양동으로 재입지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를 떠나 수원시와 화성시와 같은 경기도 시군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이에 인구 규모 면에서 기타 외국인 집단보다 월등한 조선족이 국내 각지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들의 이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주

- 1) 사전적으로 집이 있던 자리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주활동의 무대를 지칭한다.
- 2) 전○○ 공인중개사 2020년 1월 17일 인터뷰.
- 3) 유현옥, '가리봉 인력시장에 가면...한국인>조선족>한족 임금 계단이 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16일 자.
- 4)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으로 거주지를 신고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가입한 국내 휴대폰의 이용 정보를 생활인구 추계에 활용한다. 반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국이동통신을 통해 국내의 로밍서비스를

- 이용하는데 그 정보를 추계에 사용한다.
 5) 전OO 공인증개사 2020년 1월 17일 인터뷰.
 6) 중소기업청의 주요상권정보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정보가 제공된다.

참고문헌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 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31-264.

김호웅, 2010,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회* 29, 1-20.

김희철·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5), 233-248.

박배균·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박우, 2017, “‘초국적 상경’과 서울의 조선족,” *서우석 외 엮음, 서울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13장, 329-346.

서지수, 2012,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49-75.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이정현, 2021, *국내 조선족 집중거주지의 성장과 분화*,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정현·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304-318.

이진영·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85-100.

정수열, 1998,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행태,” *지리학논총* 32, 75-101.

정수열, 2018, “서울시 외국인 및 동포 이주민의 경제공간: 대림동, 조선족 디아스포라 공간,” *강우원 외 저, 서울의 공간경제학*, 나남, 22장, 491-514.

정수열, 2019, “한국화교의 다중 정체성 저글링,” *국토지리학회지* 53(1), 31-43.

정수열·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정지은·하성규·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117-129.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최은영·김준희·심승희·한지은·조대현, 2013, “희망을 꿈꾸는 공간 가리봉동,” *서울역사박물관, 가리봉동: 구로공단 배후지에서 다문화의 공간으로*, 2013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102-247.

최재현·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52, 99-128.

교신: 정수열,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자하관 N312호(이메일: sychung@smu.ac.kr, 전화: 02-2287-5294, 팩스: 02-2287-0058)

Correspondence: Su-Yeul Chung,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03016, Korea(e-mail: sychung@smu.ac.kr, Tel: 02-2287-5294, Fax: 02-2287-0058)

최초투고일 2022. 1. 7
 수정일 2022. 1.21
 최종접수일 2022. 1.24

구조적 자산불평등 시대 주거복지 체제 전환 전략

김용창*

Strategies for Transforming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Structural Asset Inequality

Yongchang Kim*

요약 :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 추구는 자본주의의 퇴행적 형태, 자본주의의 변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격을 지대자본주의 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라 주거불안계급이 만연하면서 만성적·주기적 주거 위험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만큼 주거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글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서 인간 존재의 기초적 생활 보장과 기본 거처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BS)로서 접근이 필요하고, 기회의 지리 관점에서 주거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편적 주거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활 장소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주거균등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거복지에서 결정적 분기점 전략이 되어야 한다.

주요어 : 주거복지, 불로소득 자본주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거불안계급, 주거불평등, 주거균등사회

Abstract : The pursuit of unearned income based on real estate has been criticized as a degenerate form of capitalism and a corruption of capitalism, and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epening asset inequality. Recentl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called rentier capitalism. As the new housing precariat became prevalent, it entered an new era of chronic and periodic housing risk, and the universal provis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s became more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the universal basic services is the necessary approach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living security of human existence and equal opportunity for basic housing in an era of deepening wealth inequa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geography of opportunity. This paper conclude great transformation to the society for housing equality where people can enjoy basic housing lives without discrimination according to living places through the provision of universal basic housing services should be a critical juncture for housing welfare.

Key Words : housing welfare, rentier capitalism, universal basic service(UBS), housing precariat, housing inequality, society for housing equality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yc@snu.ac.kr

1. 문제제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처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추구는 자본주의의 퇴행적 형태(degenerate form), 자본주의의 타락(corruption)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일컬어 지대자본주의 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평등의 증가, 사회보장의 축소, 민주적 정당화 위기는 소지역과 글로벌 스케일 등의 모든 공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 지리를 철저히 재구성하고 있다(Sayer, 2020; Waldron, 202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21년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부동산 기반 불평등 심화를 문제로 삼은 바 있다. 자산가격이 치솟는 세계적 현상에 대해 작년 4월 3일에는 “주택시장은 2006년 이후 상황보다도 더 미쳤다”(Friedman, 2021), 4월 25일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와 비슷하다”(Otani and Wursthorn, 2021)는 평가를 하면서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의 체제를 밑으로부터 위협할 수도 있다. 토마 피케티(T. Piketty)는 1980년대 이후 불평등 심화의 이유로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로서 사회적 위치를 잃지 않으려는 ‘브라만 좌파’(교육 엘리트)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지키려는 ‘상인 우파’(자산 엘리트)의 공생관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담합(과두)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프레임을 넘어 기본자산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ethin, Martínez-Toledano, Piketty, 2022).

이처럼 주택과 같은 부동산 기반 자산불평등의 심화는 정치경제적 지속성 측면에서 결정적 분기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를 낳고 있고, 만성적·주기적 주거 위험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은 개인의 일상적 복지와 생활기회 접근, 자산의 축적, 사회적 이동성 및 존재론적 안정성,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Waldron, 2021). 그만큼 ‘인간 존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활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깊어지는 시대에서 인간 존

재의 기초적 생활보장과 기본 거처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로서 접근이 필요하며, 기회의 지리 관점에서 ‘주거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불평등의 심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

1) 부동산 자산 기반 불평등의 시대

산업자본주의 이래 도시로 인구집중이 지속되었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기간에는 교통혁명과 운송비 감소를 바탕으로 토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도시팽창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교통망을 따라 경제성을 충족할 수 있는 토지공급이 이루어졌다.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까지는 오랫동안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철도 교통망 확충의 한계와 도로 교통망의 교통체증에 따라 토지 이용의 공간적 범위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였다. 아울러 용도지역제 등이 토지공급 제한 효과를 낳는 반면에, 소득 성장에 따른 주거비용 지출 증가로 주거용 토지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거용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면서 20세기 후반부 이후부터는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Knoll *et al.*, 2017, 그림 1 참조).

이러한 도시공간구조 측면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주택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200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본주의 발달과 주택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housing) 현상 심화, 금융위기와 COVID 19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유동성의 증가, 저금리 정책의 지속 등이 결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른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R. Shiller)는 2012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미증유의 역사적인(historical) 수준이고, 미국에서 지난 100년간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이며, 마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서부개척시대의 무법천지(wild west)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New York Times, 2018; CNBC, 2021).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소득 불평등을 낳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라 버블 형성과 붕괴에 따른 주택금융위기의 세계화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자산분포와 소득의 급격한 재편성을 낳는다(그림 2 참조).

오늘날 주택은 거처로서 본래 기능은 더욱 의미가 줄어들었고, 자산축적(wealth accumulation)을 위한 투자수단으로서 기능에 초점을 두는 주택의 금융자산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그만큼 주택 소비에서 소득에 기반하기 보다는 자산 극대화 모델을 보편적 현상으로 만들면서 불평등

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주택소비 성향과 주택의 금융자산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투자 자산들 사이 장기 수익률 변동 추세이다. 1870년부터 2015년 기간 사이 145년간의 주요 선진국의 투자자산별 수익률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평균 수익률(7.05%)이 주식 평균 수익률(6.89%)을 앞서면서도 수익률 변동성은 단기 국채 다음으로 낮았다. 안전자산 이면서 수익률은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이 자리한 것이다. 자산투자시장에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크다는 일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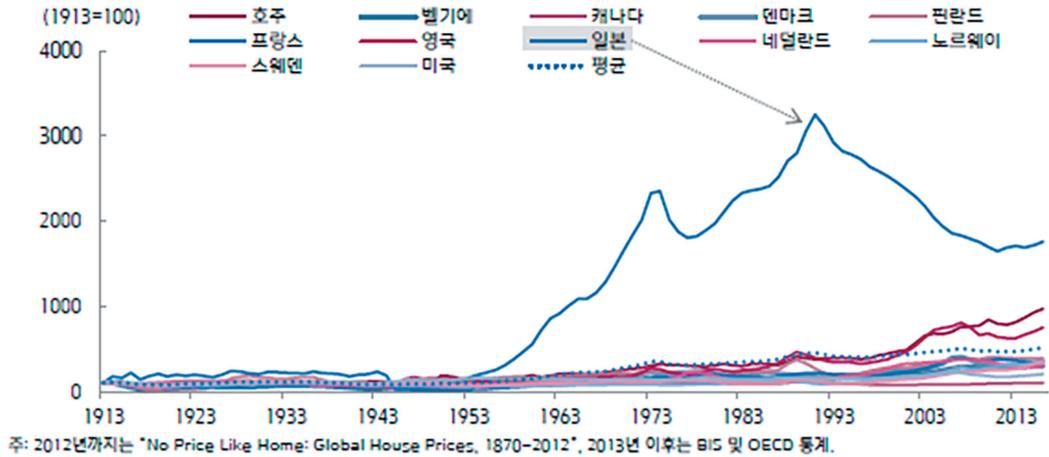


그림 1. 12개 주요 국가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출처: 홍춘욱(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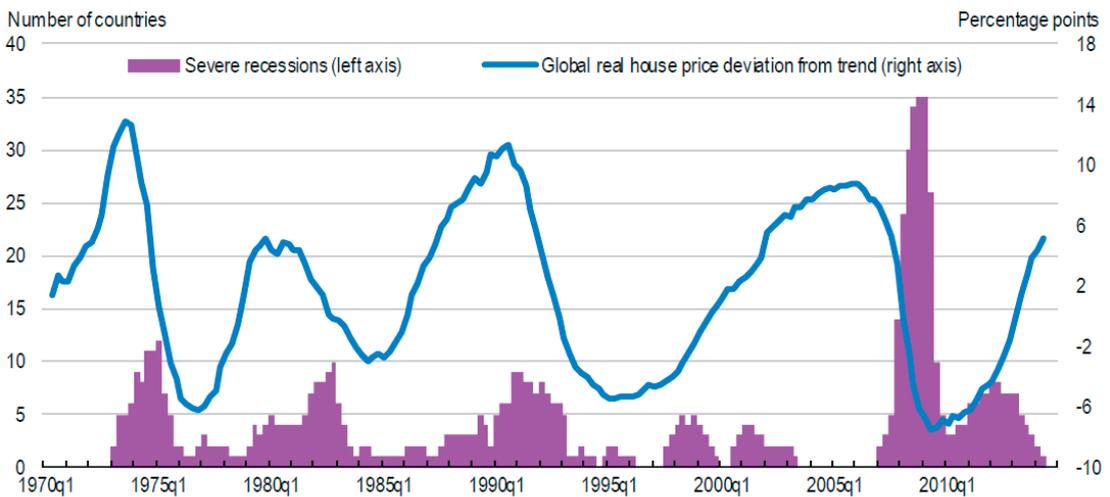


그림 2. 주기적 글로벌 주택버블과 주택위기의 글로벌 확산

출처: Cavalleri, M., B. Courneade and V. Ziemann (2019)

칙과 달리 주택의 경우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위험은 낮은 「위험-수익 반비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주택수익률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housing puzzle unresolved)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자산수익률이 GDP 성장률보다 계속 높은 것은 자본축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Jordà et al., 2019).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최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부(富)의 76%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불평등 수준에 대해 제국주의 절정기인 100년 전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축적된 부에 대해 상위 1%가 38%를 가져갔으며, 하위 50%는 겨우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에서 서유럽과 비교될 정도로 부유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지만 빈부 격차는 서유럽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진단한다(World Inequality Lab, 2021; 고현석, 2021).

이처럼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10년대 들어 소득분배지표 모두가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 기준으로 2014-2015년 기간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을 뿐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10분위 배율」,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인

「팔마비율」, 소득 하위 10%의 경계소득(P10) 대비 상위 10%(10분위) 소득경계(P90)의 배율인 「P90/P10 비율」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자산불평등 역시 나빠지고 있다. 자산불평등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핵심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자산이다. 가계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이 모두 토지와 주택의 서비스 제공 기능 제고 정책보다는 가격 중심 정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변동 차이에 기초한 불로소득 추구가 용이했다. 즉 부동산 정책 규제강화·완화를 반복하는 정책경기변동 및 이에 기초한 투기적 투자가 결합되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기 쉬운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격 움직임은 200만 호 건설과 부동산·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추세였다.

대체로 지난 40여 년의 추세를 보면, 경제위기와 보수정부 아래서는 부동산 중심의 단기 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위기-가격하락·안정-부동산 규제완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체제 이후 진보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과잉유동성-가격상승-규제강화」 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생산과 공급에 긴 시간이 걸리는 토지와 주택 상품의 성격상 정책 효과는 여러 정권에 걸쳐 상당한 시간 지체를 거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권교체에 따른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들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사라지면서 불로소득

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분배지표의 연도별 변화(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등화 중위소득(만원)	2,192	2,322	2,459	2,485	2,561	2,652	2,762	2,873	2,967	3,018
지니계수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0.405
팔마(Palma)비율(배)	2.05	1.98	1.86	1.82	1.79	1.87	1.90	1.86	1.89	1.90
소득 5분위배율(배)	11.21	10.65	10.29	10.32	10.41	10.88	11.27	11.15	11.56	11.37
소득 10분위배율(배)	28.20	26.55	25.90	25.90	26.76	29.36	31.28	31.10	32.43	31.83
P90/P10(배)	8.51	8.06	7.89	8.12	8.45	8.51	9.18	9.51	9.79	9.36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	19.6	19.0	19.1	19.6	19.5	19.8	19.7	19.9	20.8	21.3

주: 중위소득 50% 이하는 상대적 빈곤율과 동일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기준

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1980년대 중반 이래 4~5차례 주기적인 가격상승국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자산 기반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대체 투자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환금성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며, 부(富)를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중심으로 축적하는 시스템이 강고하게 자리하게 되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단순한 소유권 변동에 기초한 양도차익, 즉 비노동소득 기반 불로소득의 대규모 발생과 개인적 향유 시스템을 강고하게 만들었다. 국세 통계자료의 양도차익 기반 불로소득은 실제 거래를 통해 실현되어 향유되는 확정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양도차익은 취득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실현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은 제외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향유되는 불로소득 크기는 국세 통계자료에서 포착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987~2019년 기간 총 33개년 동안 약 1,766만 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였으며, 이 기간에 이들은 총

2016.2조 원에 자산을 취득하여 3755.5조 원에 매각함으로써 1660.8조 원의 불로소득을 개인적으로 실현하였다(김용창, 202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가계의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계층의 이중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연령대별 부동산 순자산 지니계수는 U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부동산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준호, 2020).

2)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 필요성

주요 선진국에서 부채금융에 근거한 자가소유를 촉진한 신자유주의 주택정책은 자가 소유율을 높이기 보다는 다주택 소유(multiple property ownership),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자(private small-scale landlordism)의 성장, 평생 임대주택세대(generation rent)의 증가, 이러한 특성에 기초한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불로소득을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은 자기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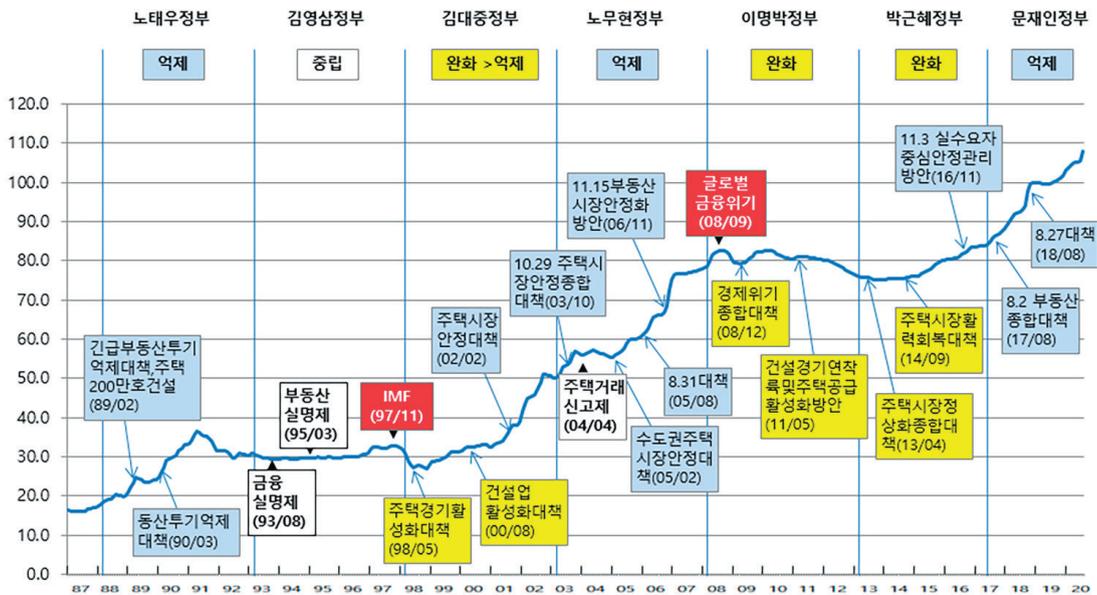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아파트가격 변화와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 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1월=100

출처: 최영규(2020)

소유 시스템 붕괴 이후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평생 부채를 짊어지는 삶의 양식이 지배당하거나 ‘부채를 짊어진 노예’(負債奴隸, days of debt peonag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김용창, 2021).

앞서 말한대로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격을 지대자본주의 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불로소득(지대소득) 친화적인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고, 자본주의의 퇴행적 형태로 일컬어질 정도로 지대소득자의 강력한 귀환(return of the rentier)이 일어난 것이다(Christophers, 2019; Sayer, 2020). 미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등의 주택 버블과 붕괴에서 보듯이 부동산을 통한 금융자본의 축적체제는 투기에 기초한 경제위기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심각한 자원 낭비, 중산층 붕괴, 소득 불평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 기반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부동산 문제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호주의 일본사 전공 교수인 머코맥(G. McCormack, 1996; 2002)은 제조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일본의 또 다른 측면이 토건국가(construction state)이고, 정치인과 관료, 금융기관, 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조’(Iron Triangle)가 토건국가를 강고한 체제로 만든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은 자민당 분과위원회, 행정기관 및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철의 삼각관계’가 분야별 정책영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건국가 체제로부터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일본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로소득 기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민주주

표 2. 주택소유 통계 총괄현황

(단위: 천호, 천명, 천가구, 호)

구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주택수		15,301	16,367	16,692	17,123	17,633	18,127	18,526
아파트		8,977	9,806	10,030	10,375	10,826	11,287	11,662
개 인 기 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A)	12,963	14,148	14,521	14,964	15,317	15,689	15,968
	아파트	7,450	8,192	8,426	8,697	9,031	9,378	9,647
	주택을 소유한 개인수(B)	12,033	13,045	13,311	13,670	14,010	14,336	14,697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A/B)	1.08	1.08	1.09	1.09	1.09	1.09	1.09
가 구 기 준	일반가구수(C)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수(D)		14,151	14,526	14,973	15,328	15,701	15,983
	아파트		8,194	8,429	8,702	9,037	9,385	9,655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E)		10,699	10,743	11,000	11,234	11,456	11,730
	가구의 주택소유율(E/C*100)		56.0	55.5	55.9	56.2	56.3	56.1
	무주택 가구수 (구성비)		841.2 (44.0)	862.4 (44.5)	867.4 (44.1)	874.5 (43.8)	888.7 (43.7)	9,197 (43.9)
소유가구기준 가구당 평균소유주택수(D/E)		1.32	1.35	1.36	1.36	1.37	1.36	

주: 1. 「가구별 주택소유통계」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된 후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가구모집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후 작성됨.

2. 가구별 소유 현황은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 집단가구(집단지설가구,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및 외국인 가구(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제외.

3. 개인 소유 집계 시 외국인 소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구 소유 집계시는 일반가구에 속한 외국인(내국인과 함께 거주)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 포함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각 년도.

의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근대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사유재산권과 자유의 신장, 민주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발전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재산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과두제 사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 자산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재산권 보호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일부 집단의 손에 있는 과두적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미래 생산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중요한 진입장벽을 쌓게 된다(Bowles and Gintis, 1987; 1994; Acemoglu, 2003; Eppinger, 2014).

특히 지대자본주의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거대한 세력과 이해관계 집단을 형성한 부동산 과두체제의 형성과 타락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심화, 자원배분 왜곡, 정책의 사결정 왜곡 등 다양한 폐해를 낳으면서 한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 신경제 체제로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촉진법 체제와 공용수용에 근거한 대규모 주택공급 시스템을 지난 40여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주택의 상품화 전략을 통한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가구별 주택소

유를 보면, 2020년 기준 일반가구는 2,092만 7천 가구, 총 주택수는 1,852만 6천 호이다. 전국의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 가구, 자가소유율은 56.1%이다. 서울의 일반가구는 398만 2천 가구, 주택소유가구는 192만 8천 가구로 자가소유율은 48.4%에 머물고 있다. 자가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로 35.5%에 그치고 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919만 7천 가구로 무주택 가구 비율은 43.9%로 이들이 잠재적인 임대주택 거주 대상이 된다.

분양주택 공급과 주택청약, 사전 공개분양제도 등을 통한 주택상품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자가소유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자가소유율 제고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주택수 증가에 비해 자가소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늘 56% 내외에 머물고 있다. 2015년 이래 주택수는 215만 9천호가 증가하였으나 자가소유율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전체 가구의 44% 내외는 항상 임차가구 상태에 머물게 된다(표 2 참조).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가소유율은 한계에 도달했고, 반면에 주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주택소유의 황금시대라 일컬어지는 베이비 붐 세대와는 달리 빠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진입장벽 때문에 자가소유 시장에 진입하지

표 3. 전국·서울의 전체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2015)

(단위: 가구, %)

구분과 기준	전국						서울						
	전체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전체가구	19,050,324	100.0	2,564,568	100.0	1,273,608	100.0	3,774,594	100.0	674,680	100.0	396,600	100.0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계	1,560,752	8.2	289,512	11.3	161,191	12.7	405,974	10.8	117,679	17.4	80,155	20.2
	시설미달	635,977	3.3	55,153	2.2	38,661	3.0	89,031	2.4	19,486	2.9	15,002	3.8
	면적미달	1,011,752	5.3	250,871	9.8	137,636	10.8	346,320	9.2	107,354	15.9	73,389	18.5
	방수미달	100,639	0.5	15,984	0.6	-	-	23,672	0.6	2,258	0.3	-	-
지하·옥탑	324,565	1.7	59,216	2.3	42,103	3.3	199,786	5.2	39,420	5.9	28,472	7.2	
최저기준미달+ 지하·옥탑	1,885,317	9.9	348,728	13.6	203,294	16.0	605,760	16.0	157,099	23.3	108,627	27.4	
주택 이외 거처	391,245	2.1	101,837	4.0	84,591	6.6	78,654	2.1	42,336	6.3	38,906	9.8	
주거빈곤	2,276,562	12.0	450,565	17.6	287,885	22.6	684,414	18.1	199,435	29.6	147,533	37.2	

주: 주거빈곤가구=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지하·옥탑거주 가구+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

자료: 최은영 외(2017)

못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지하·옥탑거주 가구, 비닐하우스 및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28만 가구가 있으며,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하고 있다. 만 20~34살 청년이 가장인 법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적으로 29만 가구(전체 가구의 11.3%)이며, 주거빈곤 청년 가구는 약 45만 가구(17.6%)로 전국 청년가구의 17.6%에 달한다. 아울러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2.6%, 서울시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37.2%에 달해, 1인 청년가구의 주거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다(최은영 외, 2017, 표 3 참조).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주거 취약 계층은 경제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이 중첩되어 있는 1인가구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 주택정책의 강화와 부담 가능한 임대주거공간의 부족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이종적 불안정 위험에 처해 있는 새로운 경제주거불안계층(new housing precariat)이다(Listerborn, 2021).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학력 수준, 낮은 소득 수준, 불안정 직업 종사,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 거주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의 불안정성이 높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 지불의 시간적 유예를 가능케 하는 임대 보증금이라는 완충장치가 취약하

다. 또한 1인 가구는 돌봄 측면에서도 취약하여, 위기 상황에서 주변에 상시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돌연사나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1인 가구이면서 불안정 직업군인 경우에는 보증부월세 46.9%, 순수월세 11.2%로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1인 가구의 58.1%인 132.6만 가구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월세 거주자이며, 이들이 전형적인 이종적 주거불안계층이다. 경제위기가 주거 위기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집단이다(박미선, 2021).

이와 같은 주거불평등 악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중심 주택정책을 벗어나 주거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으로써 주거불평등과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획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y)에 입각한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로서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는 주거복지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기회 접근에 차별성이 없어야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확립되고, 공간정의 또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종적 기회 균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주거공간이다. 주지하다시피 보편적 기본서비스 개념과 공간적 구현 방법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고민한 집단은 「인간존재기본기능」(Daseinsgrundfunktion, basic functions of human existence) 개념을 제시한 독일 사회지리학, 특히 뮌헨학

표 4. 주택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가구 수 분포

(단위: 만가구, %)

점유형태	전체 가구						1인 가구					
	안정직업군		불안정직업군		기타		안정직업군		불안정직업군		기타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자가	336.3	60.3	445.5	52.5	77.0	85.6	16.3	17.5	47.6	20.9	14.5	83.1
전세	120.6	21.6	126.0	14.8	3.4	3.8	24.0	25.8	31.3	13.7	0.3	1.4
보증부월세	79.0	14.2	211.5	24.9	2.1	2.3	44.6	48.0	107.0	46.9	0.5	2.7
순수월세	5.5	1.0	33.4	3.9	1.2	1.4	3.5	3.7	25.6	11.2	0.5	2.7
무상	15.9	2.8	32.9	3.9	6.3	7.0	4.6	5.0	16.4	7.2	1.7	10.0
합계	557.3	100.0	849.3	100.0	90.0	100.0	93.0	100.0	228.0	100.0	17.4	100.0

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무보수)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출처: 박미선(2021)

파이다(Werlen, B., 2000; 堤研二, 1992).

집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공급의 지리적 형평성 추구, 즉 기회기반 주거(opportunity-based housing) 복지정책이 주거불평등 심화에 대처하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주택(집)을 단순한 거처나 불로소득 추구 대상이 아니라 보편서비스 구현의 장소 또는 공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주택의 핵심 기능이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살고 있는 주택의 입지는 곧 여러 가지 생활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점이다. 그만큼 주택은 사람의 전체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들의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생활자원이면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Powell, 2002).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주기적인 글로벌 감염병 시대에서 주거공간이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주거공간은 거처, 교육, 노동, 여가, 보건의료, 사회생활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간 단위가 된 것이다. 이러한 기회기반 주거복지정책은 지역적으로는 보편적 생활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주거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단위로 설정하는 효과도 있다.

3. 주거복지의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

주거복지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인권으로서 주거권의 설정 여부이다. 주거권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자유와 해방에 필수적인 권리인 공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 인식하는 입장과 사회권의 관점에서 현실적 기반을 고려하면서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권리제도화 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많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주거권 규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유엔의 인권기반접근(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에 입각한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의 현실적 구현은 어려운 과제이다. 오랫동안 주택은 사회 안전, 보건 및 교육과 더불어 복지국가 4대 기둥의 하나로서 일상생활의 핵심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어 왔지만 구체적 실현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wobbly) 영역’으로 인식되었다(김용창, 2013).

오늘날 국가 주거복지 시스템은 크게 사회민주주의 주거복지(보편주의), 조합주의 주거복지, 자유주의 주거복지

(선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주택의 금융화와 자가소유기반 주거복지체제를 강조하면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수단은 ① 일상생활의 기초차원으로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주택공급, ② 민간임대시장을 포함하여 기본적 주거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주거비용 지원, ③ 주거복지 서비스 기준 설정, 공공임대관리 및 서비스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확립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주거자원 공급과 관리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생산과 공급 및 관리 기능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적자원을 통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수는 166만 128호로서 전체 주택 수 1,812만 6,954호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수는 137.1만 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7.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대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240만 호로 증가하면 전체 주택 중 임대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0.53%로 OECD의 조사에 응한 회원국 14개국 중 가장 높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20년 기준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재정과 연간 11.3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각국의 주거 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평균 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9.2%(2019년 기준)도 타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다. 각 나라별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영국 17.4, 프랑스 14.0%, 미국 3.5%, 독일 2.9% 등으로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등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장경석·송민경, 2020; OECD, 2021).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공공주거자원 관리 대상으로서 중요한 유형이 공공자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분양 주택이 공공자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자산불평등 심화 시대에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주거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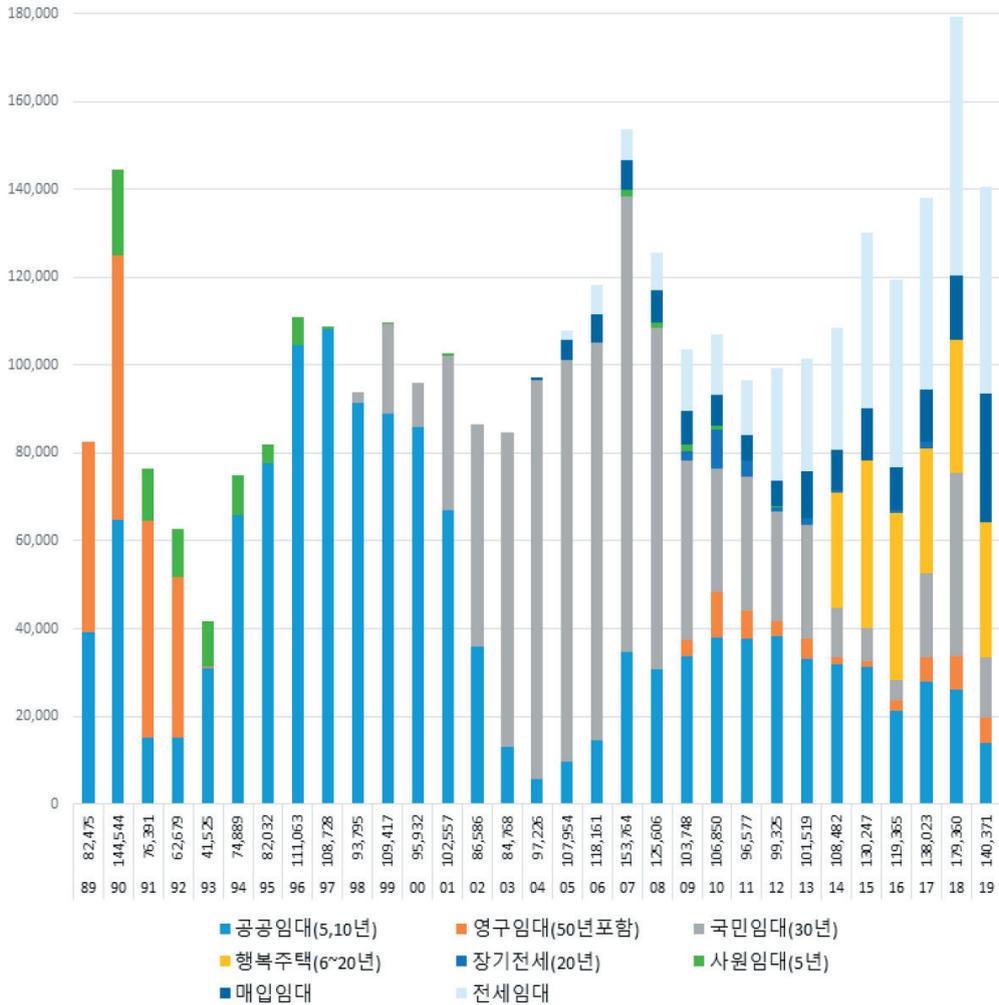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 1989~2019(단위: 호)

출처: 장경석, 송민경(2020)

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공공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불로소득 전유를 억제하는 형태의 공공(자가)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투자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처분가격을 통제하여 투기적 자산으로서 주택보다는 거처로서 주택기능과 주택시장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분공유주택(shared-equity homeownership) 또는 재매도 제한 자가점유 주택(resale-restricted, owner-occupied housing), 장기 전매제한 저렴 자가점유주택(Deed-Restricted/Below Market-Rate Programs) 형태로 공급되며, 지속적으로 적

정(저렴)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Davis, 2006; 강세진 외, 2014).

민간임대 주거자원을 공공주거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오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부과하는 방법이며, 혜택 부여와 공공성의 부여 사이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자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 영국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수의 창출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Buy-to-Let」 정책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주거불평등만을 심화하고, 일종의 중성자탄(neutron bomb)처럼 기능했다는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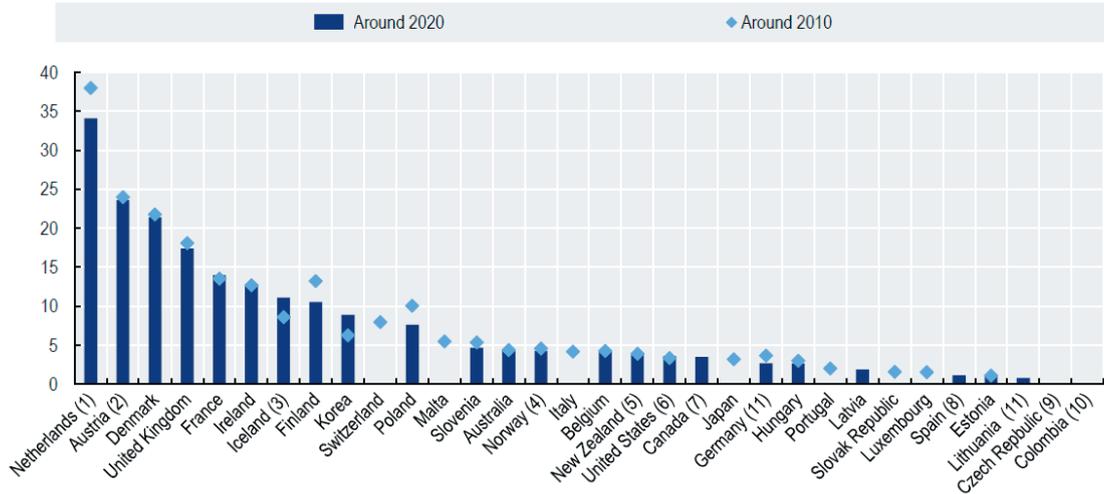


그림 5.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변화(2010년과 2020년)

주: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국가마다 정의와 형태가 다르며, OECD의 본 통계에서는 시장메커니즘 이외의 특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시장가격 이하(sub-market prices)로 공급되는 주거목적의 임대주거공간을 지칭함.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낮았고, 전통적으로 민간임대자원에 무주택 가구의 주거서비스를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1994년부터 시행하였고, 2017년 '8.2 대책'에서는 상당한 혜택 부여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격적무로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각종 혜택으로는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

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2020년 5월 기준 임대사업자 52.3만 명, 임대주택 159.4만 호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공공성에 비해 혜택부여가 크고, 다주택소유 축진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되는 등 크게 축소되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민간임대시장(private rental sector)에 대한 규제정책 수단을 통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주로 동원하는 정책

표 5.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구분	등록 임대사업자 (단위: 명)				등록임대주택 (단위: 호)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누적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누적
합계	147,957	73,855	29,786	51.1만	382,237	145,635	61,624	156.9만
수도권	114,046	55,981	21,242	36.7만	267,623	102,274	40,235	104.7만
서울	60,407	25,132	9,354	18.5만	142,118	48,048	18,434	50.4만
인천·경기	53,639	30,849	11,888	18.2만	125,505	54,226	21,801	54.4만
지방	33,911	17,874	8,544	14.4만	114,614	43,361	21,389	52.2만

자료: 국토교통부

표 6. OECD국가의 COVID-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 실행

국가	임차인						자가소유자					기타		
	퇴거 유예	임대차계약 연장	임대료동결	임대료지불 유예	임대료인하	임대료정부 보조	주택용 자금납부 유예	압류 유예	용자 금상환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출 은행 지원	공공 시설 요금 지원	건설 부문 지원	긴급 거처 제공
호주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콜롬비아							●				●			
체코							●							
프랑스	●												●	
독일	●	●		●			●				●			
그리스					●		●							
헝가리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이태리							●	●						
일본						●					●			
대한민국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	○	●	●	●	●				●		●	
터키										●				
영국	●						●	●					●	
미국	○						○	○			○	●	○	
아르헨티나	●	●	●				●	●			●	●		
인도											●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주: ● 국가차원 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된 정책적 조치, ○ 국가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경우에만 적용되는 정책적 조치

자료: OECD, 2020,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http://oe.cd/covid19tablesocial>.

출처: OECD(2020)

수단들은 임대료(초기계약임대료, 임대료 인상), 임대차 관계, 임대차 유형과 계약기간, 임대주거공간 품질, 단기 임대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스페인은 임대료 지불 모라토리움을 도입했고,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은 강력한 봉쇄조치 시행 기간(strict lockdown) 동안 임대료 지불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임대료 동결은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도 도입하였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임대차 기간 연장 또는 무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OECD, 2021).

두 번째 주요 정책영역으로서 주거비용 지원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구체적인 제공방식은 수당형태, 바우처형태, 임대주거공간 품질 개선을 연계하는 수당과 바우처 결합 형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OECD 통계에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은 주거비 충당을 위한 지원 가구에 대한 소득 이전으로 수요 측면의 지원 수단을 말한다. 나라에 따라 주거급여(주택수당, housing benefits, 영국), 임대료보조(호주), 임대료 보조금(rent supplement, 아일랜드, 뉴질랜드), 주택바우처(미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대출자금 보증과 지원, 세금 감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부금(grant) 지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OECD, 2021).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주거급여 비중은 0.07%로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GDP 대비 주거급여 투자 비중 0.33%와 비교할 때, 우리 주거급여 예산은 OECD 평균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중 수급 가구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약 10%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4.8%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심상정, 2020).

2021년 주거급여 정책 개선을 통해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가구당 1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주거품질이 연계되지 않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고 있는 등 월세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는 46%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요 주거복지 정책영역은 최저주거기준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부문이다.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대상은 부담 가능한 적정주거(affordable housing)를 위한 정책 수단들이다.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은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실행·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가소유와 자가소유자를 위한 지원(자가소유 촉진, 주택구입금융, 자가소유자 세제지원), 주거비 지원(주택수당, 적정가격 주택건설지원), 임대차시장 지원(사회주택, 임대비용 세제지원, 임대보증금,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상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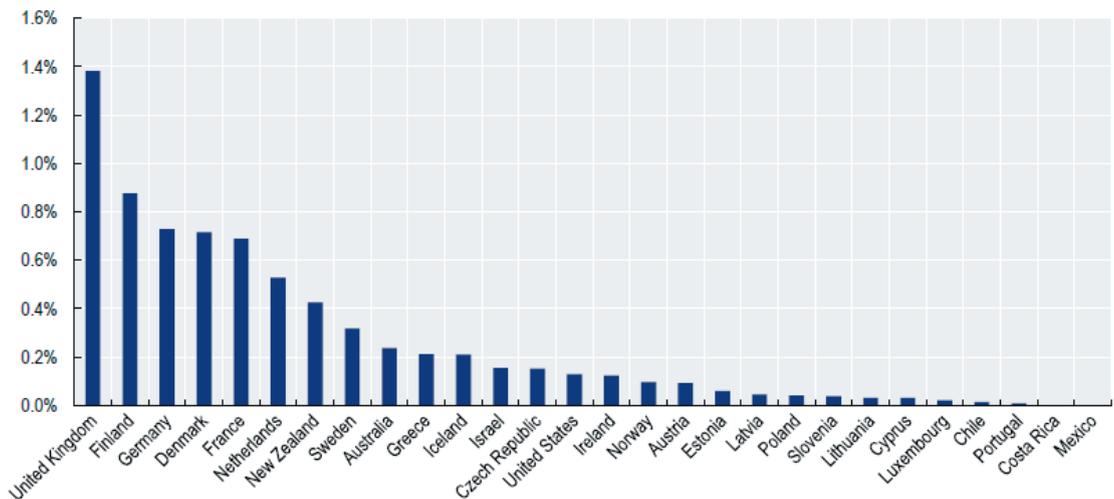


그림 6.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의 주택수당(주거비지원) 지원 비율(2020)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rent ceiling), 임대주거공간 최저품질 규제, 단기임대차)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주택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 금융, 개발, 환경 관련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주택문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집권적 주택정책 시행국가로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OECD, 2021).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 대상; 현금급여), 주택 개보수(주거환경개선지원), 금융지원, 기타 주거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정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주택 개보수, 금융지원, 긴급 복지주거지원 등의 기타 주거지원 서비스는 담당 소관 부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프로그램별 전담 기관 및 전달과정이 상이하다. 그만큼 주거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혼선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최은희 외, 2020).

주거공간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

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최저주거기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거공간의 품질 규제와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주택법」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2011년 한차례 상향조정되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주거기준」과 더불어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기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쟁점과 기본 방향

1)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질병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 경제지정학적 위기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만성적·주기적 주거 위험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만큼 주거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주택은 개인·가족의 일상생활과 사회 존속의 핵심적 토대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투기적 투자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순적 역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주거 복지 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금융지원	주택개보수	주택 개보수	주택 개보수	금융 지원	금융 지원	기타 주거 지원 서비스	기타주거 지원 서비스	기타주거 지원 서비스
주거 복지 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자가 가구 급여 - 수선유지, 임차 가구 급여	노후공공임대주택시 설계선 (2년용), 배럴목 전세 자금 대출, 내 집 마련 임대 대출, 주거 안정 임대 대출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전담 기관	LH	LH (주택조사)	LH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영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전달	지자체 선정 -> LH 공급	지자체 : 심사, 영도권, LH : 개보수	지자체 : 보조 LH : 시설 관리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영 : 선정, 대출심행	지자체 : 시설, 영도권, LH : 시설 관리	지자체 : 선정	금융 기관 :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영				

그림 7. 주거복지 포괄영역과 전달체계

출처: 최은희 외(2020)

주거복지 일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편적 준칙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주거복지의 결정적 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런 애스모글로우(Daron Acemoglu)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 분기점에서 포용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만 지속적 발전을 했다고 분석하였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주거복지의 결정적 분기점을 마련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로서 주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와 저부담-저복지 국가로부터 전환이 필요하다.

OECD 38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이고, 한국은 12.2%로 38개국 중 35위(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90년과 대비해 4.7배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로 OECD 평균 이하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2050년대 중후반 무렵에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윤경, 2021).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주거복지가 핵심 범주로 자리할

수 있어야 불평등 심화 시대에 있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의 주거 부문은 임대료 및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사회취약계층(노인·장애인)에 대한 주택공급 등을 포괄한다. 현물급여는 임대주택, 현금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주거보조금), 주택용자 이자 차액 보전, 사회취약계층 시설개선, 수리비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로서 주택과 자산축적 수단으로서 주택의 충돌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택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거처로서 성격과 자산으로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관계로 정책 수단과 전략에서 늘 모순적 관계에 놓이며, 주택의 기본성격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계층과 세대 사이 충돌과 갈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자산 축적 수단으로서 주택 성격 역시 복지정책에서 쟁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산기반 복지 전략에서는 주택이 핵심 대상이 되며, 신자유주의적 자가소유 촉진 정책이 대표적이다(이석희·임재만, 2019). 그러나 자산으로서 주택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면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향유 자산으로 전환되고, 부채금융 기반 투기적 투자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산기반 복지 전략의 핵심 대상으로서 역할이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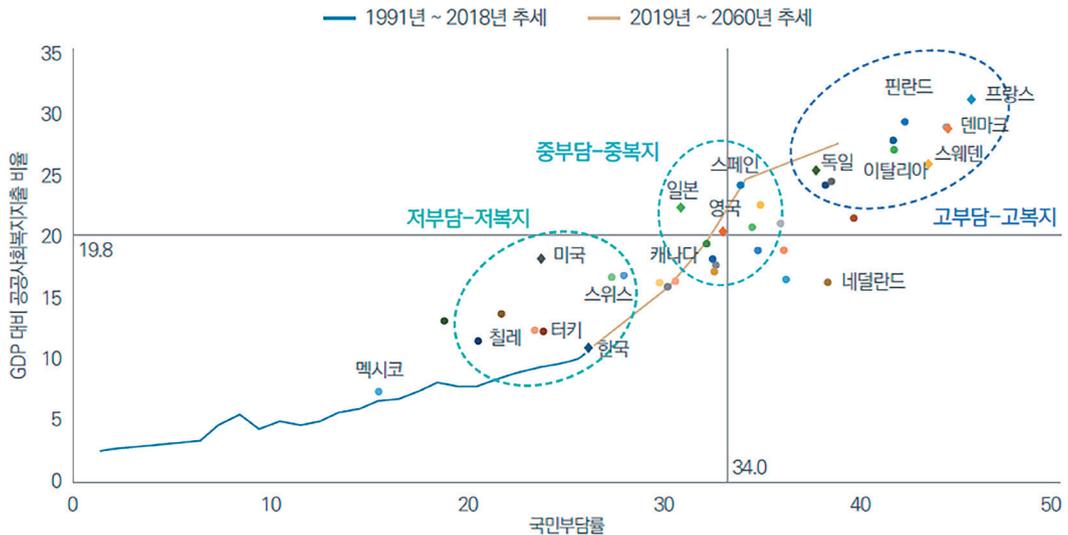


그림 8.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년) (단위: %)

출처: 이윤경(2021)

되는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기본 생활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 기능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안게 된다.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반적 전환과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주거복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다. 오늘날 주거불평등 심화 국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문제들, 즉 1인 가구용 공공주택, 3~4인 가구용 중형주택, 통합공공임대의 실질적 구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항 사업 및 주거급여 확대 등의 다양한 주거복지 쟁점들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한 영

국의 「글로벌번영연구소」(Institute of Global Prosperity)가 말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 제공의 기본 모델은 국채를 이용하여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료, 재산세, 공공편의시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이다(Institute of Global Prosperity, 2017).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주택 관련 모델은 입주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 주택규모와 품질을 높게 하는 전략이다. 대신에 저소득층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하여 임대주택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중산층 기반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의미하여 영국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과는 다른 모델이다. 기본주택 모델을 포함하여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

표 7. 우리나라의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 사례

구분	GH 기본주택		기존 토지임대부	경기도형 사회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형	장기임대형			영구·국민·행복	평생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 누구나	무주택자 누구나	청약저축 가입자	무주택자 60% + 취약계층 등 40%	소득, 자산, 나이 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2.88억/자동차 3.5천만)	무주택자 누구나
임대료	월 토지임대료* (예:30평 30만원)	운영비 수준 (예:30평 57만원)	월 토지임대료 (~48만원)	시세×80%	시세×30~80%	시세×90%	시세×85~95%
시행자 (사업주체)	공공	공공	공공, 민간 (제한 없음)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	공공+민간	민간
입지	역세권 등 핵심요지	역세권 등 핵심요지	군포(일반분양전환) / 서울 서초, 강남	사업주체 제안	유희부지 등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거주기간 (계약기간)	50년	30년 이상	40년	30년	30~50년	30년	20년
공급면적	전용 ~85㎡	전용 ~85㎡	전용 59,74,85㎡	전용 ~60㎡	전용 26~85㎡	전용 60~85㎡	~전용 85㎡
소유권	건물	민간	민간	민간	공공	공공	공공+민간
	토지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민간
입주비용	(건물분양가격) + 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건물)분양가격 + 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환매(퇴거) 조건	분양가격 + α (거주기간에 따라 일부 시세반영)	보증금 원금	서초/강남(환매종료) *신규건설시 (영구환매)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보증금 원금
재공급가격	시세 80% 이내	-	-	-	-	-	-

※ 조성원가 2천만원/평, 동일 평형으로 1천세대 조성 시(용적률 500%) 입주금 추정
출처: 경기도 기본주택 홈페이지, 기본주택.kr/ghhouse/main/index.do

표 8.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장하는 국토부 공공주택 지역별 재고 현황

(단위: 천호)

지역	구분	총계	진짜공공주택					짜통공공주택		가짜공공주택	
			영구	50년	국민	장기 전세	소계	매입 입대	행복 주택	10년	전세 입대
서울	주택수	307.7	46.8	86.6	25.3	31.3	190	36	12	2.3	67.4
	비중	19.4	22.3	77.4	4.7	94.5	21.2	24.6	18.9	1.1	25.4
경기도	주택수	455.8	27.7	5.6	215.5	1.5	250.3	32.4	24.9	78.4	69.8
	비중	28.8	13.2	5.0	39.8	4.5	27.9	22.2	39.3	36.8	26.3
인천	주택수	82.3	9.1	1.5	25.2	0.3	36.1	12.6	3.7	7.8	22.1
	비중	5.2	4.3	1.3	4.7	0.9	4.0	8.6	5.8	3.7	8.3
수도권	주택수	845.8	83.6	93.7	266	33.1	476.4	81	40.6	88.5	159.3
	비중	53.4	39.9	83.7	49.1	99.9	53.1	55.4	64.0	41.5	60.0
비수도권	주택수	739.2	125.9	18.2	275.9	0.03	420	65.2	22.8	124.7	106.4
	비중	46.6	60.1	16.3	50.9	0.1	46.9	44.6	36.0	58.5	40.0
총계		1,584.9	209.5	111.9	541.9	33.13	896.4	146.2	63.4	213.2	265.7
		100.0	13.2	7.1	34.2	2.1	56.6	9.2	4.0	13.5	16.8

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유형만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함.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21)

스를 제공하는 과정, 즉 주거복지 확대 과정에서 저소득층 및 경제적 위험가구 중심의 지원정책과 증산층을 포함하는 정책 사이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된다(표 7 참조).

또 다른 중요한 주거복지 쟁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비축 확대를 둘러싸고 형성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둘러싸고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정부 기준 사이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 기준으로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관리되는 주택을 말하며, 영구입대, 국민입대,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임차, 장기전세(20년), 분납입대(10년), 10년 임대 등 8종이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들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비축을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10년 임대) 및 민간소유(기존주택 전세임대) 제외 시 110.5만호 수준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비축에서 프랑스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 적정 재고 비율을 충족하도록 지방정부에게 의무로 부여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쟁점 사항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복지 정책 수단들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실행이다. 예

컨대 일자리 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이 중첩되는 집단에 대해 직업과 주거정책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표 4에 나타나듯이 이중 불안정 가구가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약 244.9만 가구, 1인 가구에서는 약 132.6만 가구에 달한다. 최소한 25만의 1인 가구는 실업 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16만 가구는 6개월 이상 수입이 없으면 거주하는 집을 비우거나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27만 가구가 1년 이상 수입이 없을 때 동일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이다(박미선, 2021). 일자리와 지역노동시장의 괴리, 도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구조에서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기회기반 주거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원호, 2016).

그리고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앞의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거빈곤가구,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거빈곤가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와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 민간임대주택의 불법 개조 방지, 임대주거공간의 감시체계 부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주거비 지원정책은 이러한 민간임대주거공간의 품질 개선과 연계되어야 주거수준 향

상에서 실질적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전환과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전략 확립

주거복지정책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housing)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차원의 인권 못지않게 유엔 사회권 규약을 준수하는 인권 차원으로 주거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0년에 유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지만 진정절차를 포함하여 이 규약의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조약인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권의 실효적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 관련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의 주요 정당들은 주택이나 주거정책에서 주거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원칙을 당 강령 차원에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및 진화에 대해 확립된 접근법과 로드맵이 없다. 그에 따라 정책의 일시성과 즉흥성에 기초한 논의들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투자를 유발하게 만든다. 정당의 정당 정책에서 주거의 본질과 기초적 주거생활 평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야 문명국가로서 주거 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입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명적 수준의 주거인권 보장은 수많은 국제법과 국제 규범, 국제지역기구 조약에서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불로소득 자본주의 성격의 구조화로 재산권이 불평등 심화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생존적 재산권'을 기본 인권으로서 재산권 범주에 포함시키고, 반면에 자본주의적 재산권은 인권과 구분하여 자본소유권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주택을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한 행복 추구 권리의 실현 장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한다(2013헌마 754, 2013.11.19). 1995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품위 있는 주거를 향유할 권리'(logement décent)가 헌법

적 가치의 목적이며, 재산권도 이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김용창, 2013).

그렇다면 적절한 주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고 보장할 것인가?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4호의 주거 '적절성' 개념이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아주 중요하다. 주거권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의 내용구성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이다. 보편적 주거 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공공성, 주거품질의 적절성, 주거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공간에 대한 점유와 기회접근의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일반논평 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 적절성의 구체적 내용이다.

-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상응하는 조치의 즉각적 시행.
- ② 서비스, 물, 시설, 하부구조에 대한 이용가능성: 주거 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반 자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확보.
- ③ 주거비용의 적정성: 주거 관련 비용이 다른 기초수요의 충족을 제한할 정도로 소득수준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안 됨.
- ④ 물리적 거주적합성: 적절한 공간 규모, 건강 침해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⑤ 접근의 편리성: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주거 접근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접근성에 우선순위를 둬.
- ⑥ 주거입지의 적합성: 생활편익시설에 근접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 부적합 지역의 주거입지를 지양함
- ⑦ 주택의 문화적 적합성: 현대 시설을 갖추면서 주택의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기본 주거서비스 보장을 통한 「기본주거 균등사회」, 「주거올가미」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본 전략의 확립이 필요하다. 먼저 생활기회 접근성 기반 주거서비스의 보편적 제공과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주택은 사람의 전체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들의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불평등의 구조화와 세습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주택을 기회의 지리의 핵심으로서 간주함으로써 종합적 생활기회의 균등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택을 통해 기회의 균등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자원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기본적 생활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과 계층,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거불평등과 주거소요(housing 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와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비적정 주거공간)와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를 해소하는 과제, 주거 빈곤의 세습을 단절하기 위한 아동주거빈곤 문제, 「주거 올가미」에 갇혀 있는 평생 임대주택세대(generation rent)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확대와 주거바우처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OECD 평균 수준의 기본적인 주거비용 지원과 민간임대공간의 품질 개선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과 주거비 지원 확대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선택성과 점유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 재고를 비축하여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자산 불평등 심화를 촉발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민간임대와 민간자가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시장에서 두 시장을 대개하면서 사회 신참자들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개입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의 비축확대, 불로소득 없는 지속 가능한 적정가격 기반 주택관리, 임대주거공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총괄하는 공공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문화적 수준을 구비한 주거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회의 지리 관점에서 보다 나은 거주환경으로 이주를 돕고, 생활기회 수준이 낮은 장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제약을 교정하는 방식의 주거상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기준의 최저주거기준 수준에서 미달가구를 완전 해소하여 최저수준의 열악한 주거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상향된 기준을 새로이 도입하여 주거공간 품질 혁신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지옥고」로 대변되는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을 주거급여 등 공적 주거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주거지원을 할 때, 품질이 취약한 민

간임대 주거공간의 환경 개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우리나라는 실제 거래를 통해 실현된 자산 양도차익(블로소득) 규모가 2006~2019년 기간에 총 1,399조원에 달했고, 이를 민간부문 개인 차원에서 향유하였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총 1164.9조원으로 전체 실현 블로소득의 83.3%를 차지하여 자산불평등 심화의 핵심이 되었다(김용창, 2021).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무주택가구 919.7만 가구(2020년), 주거빈곤가구 약 228만 가구(2015년)가 있고, 경제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이 중첩되어 있는 가구가 약 132.6만 가구(2019년)에 달한다. 부동산 기반 대규모 블로소득과 지옥고와 같은 주거빈곤이 양립하는 극단의 주거불평등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거불평등 심화의 시대에서 대안적 주거복지 전략은 기회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ies) 관점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지원 확충을 통해 기초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거처로서 주택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보편적 주거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활 장소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주거 균등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주거복지에서 결정적 분기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세진·진남영·이상열, 2014, “국의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209-2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짜퉁이다,” 2021.2.25. 보도자료.
 고현석, 2021,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소득, 부 불평등 훨씬 심각,” 대학지성, 2021,

- 12월 8일.
- 김용창, 2013,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514-540.
- 김용창, 2021, “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마르크스주의연구*, 18(3), 41-83.
- 남기업, 2020,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 기본소득당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박미선, 2021, “코로나19와 주거 영역의 사회정책 과제,” 제 4차 코로나19와 포용국가 사회정책 포럼 자료집, 9-28.
- 이석희·임재만, 2019, “서민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공적 주택금융 개선 방안,” *부동산학연구*, 25(3), 39-57.
- 이원호, 2016,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1(1), 41-56.
- 이윤경, 2021,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 포커스 제30호.
- 임재만, 2021,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정당한가?,” *동향과 전망*, 111, 777-114.
- 장경석·송민경, 2020, 공공임대주택 공급 동향 분석과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정준호, 2020, “상속,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 분포에 미친 효과,” *동향과 전망*, 109, 193-238.
- 최영규, 2020, “부동산대책: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 제언,” *현안과 정책*, 325호.
- 최은영·김기태·문규성·김두겸·최영은,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 최은희·이슬해·오두선, 2020, 지역 대응 분권, 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堤研二, 1992, “ドイツ社会地理学の一系譜: 社会地理学論争の周辺,” *人文地理*, 44(2), 44-65.
- Aalbers, M. B., and Christophers, B., 2014, “Centring Housing in Political Economy,” *Housing, Theory and Society*, 31(4), 373-394.
- Acemoglu, D. and Robinson, J. A.,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Publishers(최완규 역, 2012, 국가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 Bowles, S. and Gintis, H., 1987,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Thoughts*. New York: Basic Books(차성수, 권기돈(역), 199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재산, 공동체, 그리고 현대 사회사상의 모순, 서울: 백산서당).
- Christophers, B. 2019. “The Rentierization of the United Kingdom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DOI: 10.1177/0308518X19873007.
- CNBC, 2021, “Robert Shiller: ‘Wild West’ Mentality is Gripping Housing, Stocks and Crypto,” 2021.05.23.
- Davis, J. E., 2006, *Shared Equity Homeownership: The Changing Landscape of Resale-Restricted, Owner-Occupied Housing*. National Housing Institute.
- Eppinger, M. E., 2015, Property and Political Community: Democracy, Oligarchy, and the Case of Ukraine,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47(4), 825-891.
- Friedman, N., 2021, “The Housing Market Is Crazier Than It’s Been Since 2006,” *The Wall Street Journal*, 2021.04.03.
- Gethin, A., Martínez-Toledano, C., Piketty, T., 2022, Brahmin Left Versus Merchant Right: Changing Political Cleavages in 21 Western Democracies, 1948-202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7(1), 1-48.
- IGP(Institute of Global Prosperity),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 Jordà, O., Knoll, K., Kuvshinov, D., Schularick, M., Taylor, A., 2019, The Rate of Returns on Everything, 1870-2015,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3), 1225-1298.
- Knoll, K., Schularick, M., Steger, T, 2017, No Price Like Home: Global House Prices, 1870-2012, *American Economic Review*, 107(2), 331-353.
- Listerborn, C., 2021, “The New Housing Precariat: Experiences of Precarious Housing in Malmö, Sweden,” *Housing Studies*, DOI: 10.1080/02673037.2021.1935775
- McCormack, G., 1996, *The Emptiness of Japanese Affluence*, E. Sharpe.
- McCormack, G., 2002, Breakng the Iron Triangle, *New Left Review*, 13, 5-23(개변 머코맥, 김영희 옮김, 2002, 일본의 ‘철의 삼각구조’, 『창작과 비평』, 통권 116호, 68-85.
- New York Times, 2018, “The Housing Boom Is Already Gigantic. How Long Can It Last?,” 2018.12.10.

- OECD, 2020, *Housing Amid Covid-19: Policy Responses and Challenges*.
- OECD, 2021,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oe.cd/ahd>
- OECD, 2021, “Public Policies towards Affordable Housing,”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policies.htm>
- Otani, A. and Wursthorn, M., 2021, “Wild Market Ride Lifts Everything From Lumber to Stocks to Bitcoin: Veteran Investors are Unnerved by Bubble-like Condi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2021.04.25.
- Powell, J. A., 2002, Opportunity-Based Housing,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Law*, 12(2), 188-228.
- Sayer, A. 2020. “Rentiership, Improperty and Moral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DOI: 10.1177/0308518X20908287.
- Waldron, R., 2021, Housing, Place and Populism: Towards a Research Agenda,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3(5), 1219-1229.
- 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Eine Einführung*, Verlag Paul Haupt(안영진 역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이론 발달사, 한글).
- World Inequality Lab., 2021,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 교신: 김용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6동 사회과학대학 438호(이메일: sychung@smu.ac.kr, 전화: 02-2287-5294, 팩스: 02-2287-0058)
- Correspondence: Kim, Yongchang, Department of Geography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e-mail:kimyc@snu.ac.kr, Tel: 02-880-4066, Fax: 02-876-9498)

최초투고일 2022. 1. 10
 수정일 2022. 2. 4
 최종접수일 2022. 2. 6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현상의 증가와 전세계적 산림 생태계의 변화

이한섭*

Increase of Extreme Events and Following Changes
in the Worldwide Forest Ecosystem

Hanseop Lee*

요약 :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기상 현상의 변동성 증가를 동반하여 해당 현상과 관련한 자연계의 프로세스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상 여러 생태계에서의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증가한 변동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매우 드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극한 현상으로 인해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극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큰 규모로 생태계의 경관을 바꿔놓게 되므로 이로 인해 생태계의 구조와 프로세스까지 변하게 될 수 있어 극한 현상의 발생과 영향 및 이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계의 생태계 중 산림 생태계를 연구 대상 생태계로 선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 현상의 발생 양상을 조사한 다음, 발생 양상의 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극한 현상의 변화에 대응해 산림 생태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교란, 산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교란인 가뭄, 산불, 폭풍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현상의 변동성 심화로 인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세 현상 모두 모두 그 증가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수목 고사가 증가하고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산림의 쇠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산림 생태계는 이러한 극한 현상에 대응하여 대체로 개별 수목은 자신의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생존 활동에 집중하였고, 생태계 전체 스케일에서는 외부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종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위와 같이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 현상의 증가는 산림 생태계에 교란으로 작용하여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현재까지보다 미래에 산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극한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수목 고사나 부분적인 산림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산림이 극한 현상에 더 영향받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되어 이후 파괴되는 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양의 되먹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산림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와 그로부터 촉발된 극한 현상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기후변화, 산림 생태계, 극한 기상 현상, 산불, 가뭄, 폭풍

Abstract : Recent climate change causes increases in the fluctuation of weather events which now make changes in the related ecosystems' process. Specifically, such increased fluctuation gives rise to more extreme weather/climatic events in those ecosystems. Since the extreme events can dramatically change the landscape of ecosystem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t is important to appre-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hstop@snu.ac.kr

hend the occurrence and effect of the extreme events and consider its meaning.

In this study, forest ecosystem is the target ecosystem to be researched about its vulnerability and the influences it gets from the extreme events. Wildfire, drought, storm were the main extreme events to be dealt with this study, and aspect of occurrence and the response of the ecosystem was studied. Those kind of extreme events were in rise in forest ecosystem and following influences had also become serious in many aspects.

The increase of the extreme events in forest ecosystems make destructive changes, and it can be more serious as the climate change proceeds. Such changes can form positive feedback in the forest ecosystem which make the ecosystem more vulnerable to future events. Therefore, to maintain the resilience of the forest ecosystem and to make its ecosystem service sustainable, we ne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influence of ongoing climate change and following extreme events.

Key Words : climate change, forest ecosystem, extreme weather event, wildfire, drought, storm

1. 서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을 동반하여 지역별 기후 및 기상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차례로 그에 영향받는 생물과 인간의 활동 및 지구 순환 프로세스의 양상을 바꿔놓기도 한다. 특히 최근 수십 년 사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 및 대기 순환의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도의 극한 현상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극한 현상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을 정도로 큰 규모의 기상 현상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발생 지역의 반응과 발생 요인 자체에 '극한성(extremeness)'을 불러오게 된다(Smith, 2011). 이러한 극한 현상은 기후변화의 흐름 하에서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전과 같은 강도의 기상 현상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Meehl *et al.*, 2000), 이로 인한 인간 사회 및 자연계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Corey *et al.*, 2016). 본 연구는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라 규모와 영향이 커지고 있는 극한 현상이 어떻게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특정 환경 시스템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극한 현상에 대한 해당 생태계의 반응은 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극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 자연환경 시스템은 산림 생태계로, 산림에 관한 정의는 대체로 수목의 분포가 지배적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UNEP,

2010), 산림 면적은 전 세계 육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FAO, 2018). 이러한 산림 생태계는 다양한 식물 및 동물의 서식처가 되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Myers *et al.*, 2000), 생태계 내의 다양한 식물들의 탄소 고정 작용으로 지구상의 탄소 순환 작용에 관여하는 한편 온실가스의 하나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하며(Johnson *et al.*, 2001), 다양한 생물의 활동으로 인한 유기물 및 유기산 생성과 양분 분해 작용으로 활발한 토양 생성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Autry *et al.*, 1993), 수자원 함양이나 산림 휴양 기능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Rocca *et al.*, 2014). 이러한 산림 생태계 역시 다른 지구상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생태계가 겪는 변화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단기간에 산림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극한 현상으로는 가뭄, 산불, 폭우 및 폭풍 등이 있으며, 목본 식생은 그와 같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고 나면 회복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극한 현상의 영향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Virginia *et al.*, 2001).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현상 변화의 특징은 이전보다 기상 현상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것인데(Alexander *et al.*, 2006), 특히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열대 폭풍 등으로 인해 강수가 단기간에 집중되거나 반대로 오랜 기간 강수 현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야기한다. 산림 생태계는 특히 해당 생태계의 주요 생물군인 목본 식물이 수분 공급에 따라 직접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강수량 변

동성의 증가에 다른 생태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강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산림 식생이 크게 파괴되거나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강수가 집중될 경우 강수 자체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강수가 부족한 환경에서보다 작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열대 폭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 현상 자체의 에너지로 수목을 부러뜨리거나 허부 식생을 휩쓰는 것과 같은 교란을 발생시켜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산림 생태계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 현상, 그중에서도 가뭄, 폭풍, 산불의 발생에 있어 극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해 영향받는 산림 면적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있어 아래 그림 1과 같은 틀을 제시한 Dale *et al.*(2000)의 연구를 토대로 기후변화, 교란, 및 산림 생태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종합을 통해 해당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또는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후 및 그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생태계의 반응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외부 압력에 대한 저항력 증가로 이어져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생태계가 회복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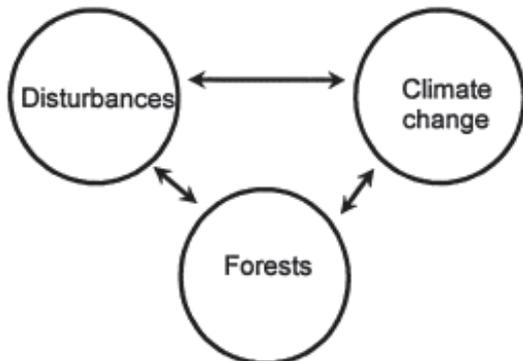


그림 1. 기후변화, 교란, 산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 관계도
출처: Dale *et al.*, 2000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산림 생태계 및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교란 현상인 가뭄, 산불, 열대 폭풍을 키워드로 정하여 이를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 자료의 검색은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진행했으며, 2021년 이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런 다음 앞서 언급한 가뭄, 산불, 열대 폭풍과 같은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산림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사례 연구와 모델링 연구를 조사하며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그러한 극한 기상 현상의 증가 추세를 확인하고 각 현상의 발생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산림 생태계에서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알아보하고자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교란 발생 이후의 사례 연구를 종합하였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앞서 종합한 결과들이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산림 생태계가 보이는 변화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현재 산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연구에 대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 고찰해보았다. 분석 대상이 된 선행 연구는 2021년까지 정식으로 출판된 문헌 중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연구의 논지 전개에 힘을 제공하는 것을 선정하였다.

3. 연구 결과

앞서 언급한 대로 산림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중 가뭄, 산불, 폭풍의 전체 발생과 극한 상황의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해 영향받은 산림 면적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을 이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나타난 변화가 이에 대한 산림 생태계의 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도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1) 가뭄

가뭄은 몇 달에서 몇 년의 기간 동안 강수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수분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의 역시 대체로 강수의 부족과 그것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Mishra *et al.*, 2010).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의 환경이 크게 건조해지게 되며, 이는 기상학적·수문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팔머 가뭄 지수, 효과 가뭄 지수, 가뭄 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지수에 의해 정량화된다. 산림 생태계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다른 생태계에 비해 특히 더 두드러지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산림 생태계의 특징적 생물군이자 시스템 내에서의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는 수목이 수분 스트레스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목, 특히 성목의 경우 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건조에 대한 내성이 있어 단기간의 건조 환경 및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생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McDowell *et al.*(2008)은 식물 개체군 중 탄소 저장량이 많아 가뭄 상황에서도 기공 개폐 조절을 통해 탄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집의 경우 가뭄 상황에서의 고사율이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수목이 다른 초본 식물군에 비해 탄소 저장량이 많으므로 같은 건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남을 의미했다. 또한 Trugman *et al.*은 그들의 2018년 연구에서 수목은 가뭄이 발생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탄소를 재배치하여 기능에 이상이 있는 목부의 물관과 통로 조직을 수리하는 식으로 수분 전달의 효율을 높여 건조 환경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뭄이 발생해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목이 생존할 수 있게 되지만 가뭄 상황이 길어질수록 수분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데다가 회복력 또한 감소하여 고사율이 증가하며, 개체의 생명 기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이 필요한 큰 수목일수록 가뭄 기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뭄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기온 상승으로 산림 생태계 내에서의 증발산량을 증가시켜 시스템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더 건조해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Dai(2011)는 이전까지의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전 세계의 가뭄 발생 추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 수년 주기의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가뭄 이외에 기후변화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대륙에서 가뭄

발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의 후속 연구(Dai, 2013)에서 지난 1950년부터 강수량 및 유량 기록과 이로부터 산출한 가뭄 지수를 바탕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해온 것을 확인했으며 그중에서도 사헬 지대와 중앙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가뭄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델링 결과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 발생 빈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남·북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및 중서부 유럽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세계 각지에서의 가뭄을 뚜렷하게 증가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받는 영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van Mantgem *et al.*(2009)은 미국 서부에서의 전반적인 수목 고사율 증가에 대해 연구하며, 그 주된 원인이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가뭄이고 이로 인한 수목 밀도의 감소는 산림의 구조와 구성을 바꿔 놓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 격리와 같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Allen *et al.*(2010)은 전 세계 산림 자료를 종합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생태계에 수분 스트레스와 열 압력이 증가하면서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어 수목 고사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산림 생태계의 구성, 구조 및 생물지리학적 종 분포 패턴까지 바꾸어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Adams *et al.*(2009)은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가뭄 발생 양상 변화로 국지적인 규모에서의 수목 고사율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Williams *et al.*(2012)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산림에서의 가뭄과 그로 인한 수목의 고사율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Anderegg *et al.*(2013)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온도 스트레스가 산림 생태계에서의 수목 고사율을 높이고, 이는 그 생태계 내의 군집과 생태계 기능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다. 가뭄으로 인해 수목의 고사율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 전반의 성장량과 생산성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Barber *et al.*(2000)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증가로 알래스카의 가문비나무림에서 수목의 성장량이 감소했음을 보고하였고, Breda *et al.*(2006)은 온대림 생태계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면서 생명 유지에 에너지를 집중하므로 성장량이 감소한다고

보았으며, Phillips *et al.*(2009)은 아마존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 이후 탄소 고정량이 감소함을 보고하고 이로 인해 산림 생태계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했고, Zhao *et al.*(2010)은 전 세계 산림 자료를 종합하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산림에서의 순생산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으로 가뭄을 꼽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이 산림 생태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이후 외부 변화에 대한 산림 생태계의 대응이 생태계 전반 또는 개별 군집이나 개체 단위에서 이전과 다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Allen *et al.*이 1998년에 산림과 그 외부 지대의 경계부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기후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뭄 발생이 증가할수록 산림 경계부에서의 회복성이 떨어져 경관 단위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 생태계가 점차 초지와 같은 다른 유형의 생태계가 되어 갈 것이라고 보았으며, Phillips *et al.*(2009)은 가뭄으로 인해 수목의 고사율이 높아질 경우 그로 인해 변화하는 수문 순환의 결과로 건조 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정도의 수목 고사율을 불러올 수 있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Breda *et al.*(2006)은 개별 수목의 생리 기작에서 수분 스트레스에 대응해 증발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목 개체가 기공 폐쇄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호흡 감소와 탄소 동화 감소로 이어져 산림 생태계 전반으로는 순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산림 생태계 전반의 관점에서는 Engelbrecht *et al.*(2007)이 열대우림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내린 바와 같이 가뭄에 대한 내성이 강한 수종이 지속적인 건조 환경에서 더 많이 살아남게 되므로 해당 생태계 내에서의 종 분포 패턴이 그러한 수종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Hui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산림 생태계 내의 물질이나 생물의 분포가 공간적 이질성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작은 스케일에서의 축적량 편중이 가뭄에 대응하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축적량이 많은 곳이 가뭄에 대한 높은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뭄의 증가는 산림 생태계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수목 고사율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산림 생태계는 개별 수목이 성장 활동을 억제하며 생존 자체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고 생태계 전반으로도 가뭄에 대한 내성이 큰 수종 위주로 시스템 구조

가 재편되며 향후 더 건조해질 수 있는 환경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불

산불은 앞의 가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기상 현상은 아니지만 고온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조성되는 건조한 환경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은 산림 생태계 내에서 발화점에 가까운 온도 환경을 만들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여 발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동시에 산림 생태계 내의 목본과 초본의 수분 함량을 떨어뜨려 화재 발생 시에 불이 더 잘 옮겨붙게 하며,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증가한 고사목 개체는 화재 발생 시에 연료로 작용하여 산불의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Hudec *et al.*, 2012). 따라서 기후변화는 산림 생태계에서 산불 발생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불의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큰 규모로 번지게도 하므로 산불의 강도 또한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산불 역시 가뭄과 마찬가지로 산림 생태계의 주를 이루는 수목이 해당 현상을 피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산불의 발생이 산림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산림에 건조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해 수목 개체가 서서히 고사하는 것과 달리 산불은 단시간에 극도의 고온으로 수목 개체를 열사시키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므로 발생 시의 파괴력은 가뭄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불은 앞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가뭄이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건조 환경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 빈도나 강도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뚜렷한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킨 이래로 세계 각지에서 산불 발생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이어진 바 있으며(Westerling *et al.*, 2006; Abatzoglou *et al.*, 2016), 이로 인해 영향받은 산림 면적의 증가 또한 확인되었다(Westerling *et al.*, 2008; Jolly *et al.*, 2015). 특히 대규모 산불의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Marlon *et al.*, 2009; Dennison *et al.*, 2014), 산불 발생 시의 지속 시간 및 산불이 발생하는 기간도 기후변화의 영향 아래에서 길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Jolly *et al.*,

2015; Taylor *et al.*, 2016). 이러한 산불 발생의 증가 및 피해 면적의 증가는 모두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변동성으로 인한 수분 부족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규모의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강수량 변동으로 인해 건조 환경이 조성된 것에 더해 마른 고사목의 사체나 활력을 잃어 수분 함량이 떨어진 수목 개체가 산불 발생 시에 연료로 작용하면서 지표 부근에서 발생한 지표화가 수관을 타고 수관부까지 번지는 수관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Pausas *et al.*, 2004). 또한 산불의 발생은 산림 토양의 성질을 변화시키기도 했는데, Certini *et al.*(2005)은 토양 내 유기물과 수소 이온 농도 및 양분 함량 등이 산불 발생 전후에 달라졌으며, 그러한 변화는 산불의 규모가 클수록 비가역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대규모의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별도로 이전까지의 토지 이용에 있어 산불 억제 정책을 통해 소규모의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온 것이 산림 내에서의 연료 축적으로 이어져 이것이 대규모 산불 발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는데(Brotans *et al.*, 2013), 이는 토지 관리의 측면에서 인간의 개입이 자연 현상의 정도를 심화시킨 사례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영향이 기후변화의 영향보다는 적다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의 다른 생물들의 발생 정도 변화에 의해 산림 생태계에서의 산불 피해가 심화된다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Mietkiewicz와 Kulakowski(2016)는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기온상승이 산림 생태계 내에서의 병해충 발생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수목이 고사하여 이후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Hicke *et al.*(2012)은 산림 생태계에서 병해충 대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산불의 양상을 조사하여 병충해로 인한 수목 고사율의 증가가 이후의 산불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영향을 받은 산림 생태계가 산불 발생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산림의 가장자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 경계부에서 가뭄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생태계의 회복 과정에서 산림이 아닌 다른 생태계로 변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는데(Calder *et al.*, 2017), 이는 산림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이 산불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에 더해 산불 발생 자

체가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이후 수목이 다시 자라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여 수목 개체 대부분이 불에 탄 경우 햇빛이나 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하층 식생에 햇빛과 양분이 공급되면서 하층 식생에서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한 초본이 일시적으로 해당 생태계를 우점하게 되고, 그것이 목본 치수와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해당 식생이 초본 식생으로 변하게 되기도 했다(Wine *et al.*, 2018). 또한 산불로 인해 산림 식생이 크게 황폐화된 경우, 이후에 새로 교란이 발생하게 되면 표층에서의 토양 유출이 심화되고 수목에 의한 수자원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생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회복되는 면적에 제한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chimmel & Grandstrom, 1996; Seidl *et al.*, 2016). 그밖에 산불 발생 이후 수피에 불이 잘 옮겨붙지 않거나 극도의 고온을 견디는 성질이 강한 수종들이 주로 살아남아 이후에도 점차 그러한 수종 중심으로 구성이 재편되거나, 고온에서 발아가 촉발되는 수종의 경우 산불 발생 이후에 새 개체가 발생하기도 하여 생태계 내에서의 종 분포가 변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같은 건조 환경이 조성되면서 산불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산불의 발생과 규모가 증가하여 이에 영향받는 산림 면적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산불 발생 이후 산림 생태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다른 생태계로 변하거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산불에 내성이 강한 수종의 우점도가 높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산불 발생으로 인한 수문 프로세스의 변화는 이후 해당 산림 생태계를 더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폭풍

폭풍 중에서도 극한 기상 현상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산림 생태계에 교란으로 작용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것은 대체로 열대 지방의 저기압에서 발달한 열대 폭풍을 뜻한다. 이러한 열대 폭풍은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강수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하므로 산림 내의 수목을 부러뜨리거나 뿌리째 뽑기도 하며, 다량의 토양을 침식시켜 초본 위주의 하층 식생을 휩쓸어 파괴하기도 한다(Hilton *et al.*, 2008). 또한 열대 폭풍은 앞서 살펴본 가뭄이나 산불과는 다르게 해당 현상이 산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지형 형성 작용을 일으켜 기존의 지표와 다른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강풍을 동반한 단기간의 집중 강우는 산림 내에서의 유량과 유출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가 기존 유로를 침식하거나 새로운 유로를 만들면서 산림 하천 주변에서 지형을 바꾸기도 하며, 이는 기존 식생의 분포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열대 폭풍의 발생은 발생 시의 해수면 온도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열대 폭풍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포괄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만큼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Woodruff *et al.*, 2013). 오히려 지속적인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아니라 수년 주기의 해수 진동이 열대 폭풍의 발생 및 육지 상륙 빈도를 결정한다는 주장도 있으며(Zhang *et al.*, 2012), 해수 진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영향만을 고려하였을 때 기온 상승과 열대 폭풍의 발생 강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다(Tsai *et al.*, 2014).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 및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관찰할 수 없었던 정도의 강한 열대 폭풍의 발생이 확인되어왔고, 그와 같이 극도로 규모가 큰 열대 폭풍은 2005년에 뉴올리언스에 상륙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와 같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열대 폭풍에 비해 비선형적으로 큰 피해를 생태계와 사회에 입히게 되었다(Chapman *et al.*, 2008).

따라서 기후변화의 흐름 아래에서 산림 생태계가 받는 폭풍으로 인한 영향은 빈도는 적지만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은 사건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그 과급 효과와 이후의 산림 생태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열대 폭풍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는 산림의 경계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주변 산림 식생으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었고, 마찬가지로 산림 중심부에서도 수목의 밀도가 낮은 곳에서 폭풍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Lugo & Scatena, 1996). 열대 폭풍은 수목을 뿌리째 뽑거나 줄기를 부러뜨리기도 하지만, 줄기의 초두부를 절단하거나 일부 가지만 부러뜨려 이후 해당 개체의 성장을 둔화시키기도 했으며, 임상 전체로는 대체로 폭풍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심근성 수종¹⁾의 생존 확률이 높아 해당 수종의 우점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Lin *et al.*, 2011). 다음으로 열대

폭풍 발생 이후 산림의 회복 양상에 대해서 Everham *et al.*(1996)은 열대 폭풍 교란 발생 이후 생존한 개체들로부터 비롯되는 ‘재생장’, 죽은 개체가 차지하던 자리에 초기 천이종이 진입하는 ‘신규 도입’, 죽은 수목 개체와의 공간 및 양분 경쟁이 사라지며 이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하층에서의 생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방’, 교란 발생 이후 초본 성장 활성화와 덩굴식물 진입 등으로 목본 식생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억압’ 등의 회복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Lugo(2008)는 열대 폭풍 발생이 산림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생태계 내의 유기체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 창출, 경관 내에서 다양한 생태계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공간상의 이질성 증가, 이전보다 낮은 천이 단계로의 회귀, 산림 구조 재구성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이전보다 상당히 규모가 커진 열대 폭풍이 산림 생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수목 개체의 피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형이 변하기도 하며, 이후의 식생 회복 양상은 하층 식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란으로 작용하는 열대 폭풍의 규모가 커질수록 홍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초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의 및 결론

위와 같이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한 극한 현상인 가뭄, 산불, 폭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 세 현상은 각각 발생 빈도가 증가하거나 발생 시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생태계가 그러한 사건들의 극한 현상에 더 자주 노출되거나 큰 규모의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서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후변화가 산림 생태계의 전반적인 쇠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목의 치사율이 높아진 것 이외에도 산림 생태계 전반의 성장량과 생산성이 감소한 것 역시 향후 산림이 쇠퇴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수목이 고사하여 그 주변에서 수분 함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산불 발생 이후 토양 유실로 하부 식생 정착이 어려워지는 것 또는 폭풍의 영향

으로 산림 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경우 등은 그로 인해 이후의 회복 양상이나 다른 교란으로부터의 저항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교란으로 인한 산림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가뭄, 산불, 폭풍 모두 산림 생태계에 교란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교란 발생으로 인해 산림 내부에서 새로 지위 창출이 이루어져 그로부터 식생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나, 산림 생태계는 그 구성 특성상 목본 식물이 교란 발생 이전 단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란이 더 높은 빈도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 생태계의 쇠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앞서 제시했던 기후 변화, 교란, 산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의 틀에서 살펴보면 세 인자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교란 발생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모두 가속화되고, 산림 환경 또한 교란에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교란 발생과 산림 환경 악화는 서로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의 되먹임 관계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가 극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생태계의 생산성과 회복력 상실로 이어지며, 이것이 심화되어 생태계 변화의 임계점을 넘게 될 경우 양의 되먹임의 과정을 거치며 급속한 산림 파괴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환경 아래에서 산림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다 더 폭넓게 파악하고, 향후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여 그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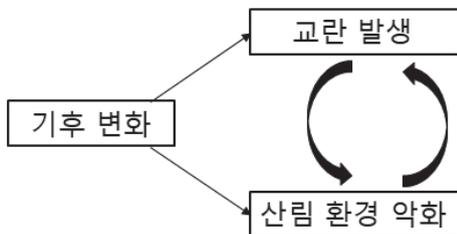


그림 2. 기후 변화 지속 시 산림 생태계와 그에 대한 극한현상 및 교란과의 관계

주

- 1) deep-rooted tree species; 근계가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수종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천근성 수종에 비해 수목 전체 비중 중 근계의 비율이 높아 외부 충격 등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참고문헌

- Abatzoglou, J.T., Williams, A.P., 2016, Impact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on wildfire across western US fores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 11770-11775.
- Adams, H.D. et al., 2009, Temperature sensitivity of drought-induced tree mortality portends increased regional die-off under global-change-type drough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 7063-7066.
- Alexander, L.V. et al., 2006, Global observed changes in daily climate extreme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1, D0519.
- Allen, C.D. et al., 2010, A global overview of drought and heat-induced tree mortality reveals emerging climate change risks for forest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9, 660-684.
- Allen, C.D., Breshears, D.D., 1998, Drought-induced shift of a forest-woodland ecotone: Rapid landscape response to climate vari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5, 14839-14842.
- Anderegg, W.R.L., Kane, J.M., Anderegg, L.D.L., 2013, Consequences of widespread tree mortality triggered by drought and temperature stress, *Nature Climate Change*, 3, 30-36.
- Autry, A.R., Fitzgerald, J.W., 1993, Relationship between microbial activity, biomass and organosulfur formation in forest soil,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25, 33-39.
- Barber, V.A., Juday, G.P., Finney, B.P., 2000, Reduced growth of Alaskan white spruce in the twentieth

- century from temperature-induced drought stress, *Nature*, 405, 668-673.
- Breda, N., Huc, R., Granier, A., Dreyer, E., 2006, Temperate forest trees and stands under severe drought: a review of ecophysiological responses, adaptation processes and long-term consequences, *Annals of Forest Science*, 63, p.625-644.
- Brotons, L., Aquilué, N., de Cáceres, M., Fortin, M., Fall, A., 2013, How fire history, fire suppression practices and climate change affect wildfire regimes in Mediterranean landscapes, *PLOS ONE*, 8, e62392.
- Calder, W.J., Shuman, B., 2017, Extensive wildfires, climate change, and an abrupt state change in subalpine ribbon forests, Colorado, *Ecology*, 98, .2585-2600.
- Certini, G., 2005, Effects of fire on properties of forest soils: a review, *Oecologia*, 143, p.1-10.
- Chapman, E.L. et al., 2008, Hurricane Katrina impacts on forest trees of Louisiana's Pearl River basin,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6, 883-889.
- Corey, L., Pedram, R., Navin, R., 2016, Influence of extreme weather disasters on global crop production, *Nature*, 529, 84-87.
- Dai, A.G., 2011, Drought under global warming: a review, *Climate Change*, 2, 45-65.
- Dai, A.G., 2013, Increasing drought under global warming in observations and models, *Nature Climate Change*, 3, 52-58.
- Dale, V.H., Joyce, L.A., McNulty, S., Neilson, R.P., 2000, The interplay between climate change, forests, and disturbance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62(3), 201-204.
- Dennison, P.E., Brewer, S.C., Arnold, J.D., Moritz, M.A., 2014, Large wildfire trend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1984-2011,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1, 2928-2933.
- Engelbrecht, B.M.J. et al., 2007, Drought sensitivity shapes species distribution patterns in tropical forests, *Nature*, 447, 80-82.
- Everham, E., Brokaw, N., 1996, Forest damage and recovery from catastrophic wind, *The Botanical Review*, 62, 113-185.
- FAO, 2018,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 Hicke, J. A., Johnson, M. C., Hayes, J. L., Preisler, H. K., 2012, Effects of bark beetle-caused tree mortality on wildfire,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71, 81-90.
- Hilton, R.G. et al., 2008, Tropical-cyclone-driven erosion of the terrestrial biosphere from mountains, *Nature Geoscience*, 1, 759-762.
- Hudec, J.L., Peterson, D.L., 2012, Fuel variability following wildfire in forests with mixed severity fire regimes, Cascade Range, USA,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77, 11-24.
- Hui, L. et al., 2018, Stock volume dependency of forest drought responses in yunnan, China, *Forests*, 209, DOI:10.3390/f9040209.
- Johnson, D.W., Curtis, P.S., 2001, Effects of forest management on soil C and N storage: meta analysi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140, 227-238.
- Jolly, W.M. et al., 2015, Climate-induced variations in global wildfire danger from 1979 to 2013, *Nature Communications*, 6, DOI:10.1038/ncomms8537
- Lin, T.C. et al., 2011, Typhoon disturbance and forest dynamics: Lessons from a northwest Pacific subtropical forest, *Ecosystems*, 14, 127-143.
- Lugo, A.E., 2008, Visible and invisible effects of hurricanes on forest ecosystems: an international review, *Austral Ecology*, 33, 368-398.
- Lugo, A.E., Scatena, F.N., 1996, Background and catastrophic tree mortality in tropical moist, wet, and rain forests, *Biotropica*, 585-599.
- Marlon, J.R. et al., 2009, Wildfire responses to abrupt climate change in North Americ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 2519-2524.
- McDowell, N. et al., 2008, Mechanisms of plant survival and mortality during drought: why do some plants survive while others succumb to drought?, *New Phytologist*, 178, 719-739.
- Meehl, G., Zwiers, F., Evans, J., Knutson, T., 2000, Trends in extreme weather and climate events: Issues related to modeling extremes in projections of future climate change,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81, 427-436.
- Mietkiewicz N., Kulakowski D., 2016, Relative importance of climate and mountain pine beetle outbreaks on the occurrence of large wildfires in the western USA. *Ecological Application*, 26, 2523-

- 2535.
- Mishra, A.K., Singh, V.P., 2010, A review of drought concepts, *Journal of Hydrology*, 391, p.202-216.
- Myers, N. et al., 2000, Biodiversity hotspots for conservation priorities, *Nature*, 403, 853-858.
- Pausas, J.G., Bradstock, R.A., Keith, D.A., Keeley, J.E., 2004, Plant functional traits in relation to fire in crown-fire ecosystems, *Ecology*, 85, p.1085-1100.
- Phillips, O.L. et al., 2009, Drought sensitivity of the Amazon rainforest, *Science*, 323, 1344-1347.
- Rocca, M.E., Miniati, C.F., Mitchell, R.J., 2014, Introduction to the regional assessments: Climate change, wildfire, and forest ecosystem services in the USA,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27, 265-268.
- Schimmel, J., Granstrom, A., 1996, Fire severity and vegetation response in the boreal Swedish forest, *Ecology*, 77, 1436-1450.
- Seidl, R., Spies, T.A., Peterson, D.L., Stephens, S.L., Hicke, J.A., 2016, Searching for resilience: Addressing the impacts of changing disturbance regimes on forest ecosystem services, *Journal of Applied Ecology*, 53, 120-129.
- Smith, M.D., 2011,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extreme climatic events: a synthetic definition and framework to guide future research, *Journal of Ecology*, 99, 656-663.
- Taylor, A.H., Trouet, V., Skinner, C.N., Stephens, S., 2016, Socioecological transitions trigger fire regime shifts and modulate fire-climate interactions in the Sierra Nevada, USA, 1600-2015 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 13684-13689.
- Trugman, A.T. et al., 2018, Tree carbon allocation explains forest drought-kill and recovery patterns, *Ecology Letters*, 21, 1552-1560.
- Tsai, H.C., Elsberry, R., 2014, Improved tropical cyclone intensity and intensity spread prediction in bifurcation situations,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50, 669-680.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0, Forest definition and extent.
- van Mantgem, P.J. et al., 2009, Widespread increase of tree mortality rate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Science*, 323, p.521-524.
- Virginia, H.D. et al., 2001, Climate change and forest disturbances, *BioScience*, 51, p.723-734.
- Westerling, A.L., Hidalgo, H.G., Cayan, D.R., Swetnam, T.W., 2006, Warming and earlier spring increase western U.S. forest wildfire activity, *Science*, 313, p.940-943.
- Westerling, A.L., Bryant, B., 2008, Climate change and wildfire in California, *Climate Change*, 87, p.231-249.
- Williams, A.P. et al., 2012, Temperature as a potent driver of regional forest drought stress and tree mortality, *Nature Climate Change*, 3, 292-297.
- Wine, M.L., Cadol, D., Makhnin, O., 2018, In ecoregions across western USA streamflow increases during post-wildfire recovery,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3, 014010.
- Woodruff, J.D., Irish, J.L., Camargo, S., 2013, Coastal flooding by tropical cyclones and sea-level rise, *Nature*, 504, 44-52.
- Zhao, M.S., Running S.W., 2010, Drought-induced reduction in global terrestrial net primary production from 2000 through 2009, *Science*, 329, 940-943.
- Zhang, W., Graf, H.F., Leung, Y., Herzog, M., 2012, Different El Niño types and tropical cyclone landfall in East Asia, *Journal of Climate*, 25, 6510-6523.
- 교신: 이한섭,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이메일: lhstop93@snu.ac.kr, 전화: 02-880-6322, 팩스: 02-877-7656)
- Correspondence: HanSeop Lee,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e-mail: lhstop93@snu.ac.kr, Tel: 02-880-6322, Fax: 02-877-7656)
- 최초투고일 2022. 1. 11
수정일 2022. 2. 1
최종접수일 2022. 2. 3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동정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 조직

• 임원진

소 장: 이강원(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연구부장: 박정재(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편찬부장: 신혜란(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도부장: 류재명(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운영위원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양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권석만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김의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박기호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배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수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윤순진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정만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Edo Andriessse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소속 연구원 (2021.12.31. 기준)

겸무연구원(14명)	구양미, 김대현, 김용창, 김유겸, 박기호, 박수진, 박정재, 변종민, 손정렬, 신혜란, 이강원, 이견학, 이상일, Edo Andriessse
객원연구원(4명)	김은경, 이치복, 이훈중, 진금주
자체연구원(16명)	강은진, 김우철, 노영희, 박위준, 박준영, 안유순, 양재석, 이경은, 이수진, 이정훈, 이한섭, 장윤정, 전정옥, 정진영, 허권, 허정화

2. 콜로퀴움 개최

No.	일자	제목(Title)	발표자 (Presenter)	소속
238	5월 18일	Towards Convivial Conservation: tackling the biodiversity crisis through systemic redesign	Bram Büscher	Wagening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239	5월 25일	효과적인 영어논문 작성방법	장희준	Portland State University
240	10월 12일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the Unprecedented Climate Change	강도혁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241	11월 9일	우리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과정	이전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재)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장
242	11월 30일	산업집적지 존립기반의 변화와 향후 과제	이철우	경북대학교

3. 인사

- 김대현 소장 후임으로 이강원 소장 취임(2021.03.25~2023.03.24)
- 박준범 조교 후임으로 정진영 조교 임명(2021.09.01~)

4. 연구과제

- 북한이탈주민과 미래 한반도 사회변동 연구 사업
 - 연구책임자: 신혜란 교수
 - 시행기관: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 연구수행기간: 2021.03.01.~2022.02.28.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규정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규정

[시행 2014. 9.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73호, 2014. 9.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22.]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국토문제연구, 지역지 편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9. 22.]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 ① 연구소에 연구부, 편찬부, 지도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는 국토문제 및 그 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
2. 편찬부는 국토지리 지역지를 포함한 학술지의 출판 및 자료의 수집, 정리에 관한 업무
3. 지도부는 각종 지도의 수집, 보관 및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지도제작에 관한 업무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본조개정 2014. 9. 22.]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 9. 22.]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신설 2014. 9. 22.]
2. 각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4. 9. 22.]
3.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9. 22.]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폐기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내외 인사 중에

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9. 22.]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973호, 2014. 9.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리학논총 윤리규정

2021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국토문제연구소 및 논총 투고자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 투고자의 의무)

지리학논총에 투고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지리학 및 관련 연구를 통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리학 및 관련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논문을 편집하고 심사하는 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논문을 투고하거나 연구발표문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3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규정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발표한다.
2. 인간 대상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4.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6.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7.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만 들어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표절의 정확한 한계는 편집위원회 내에 설치

- 되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중복게재”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이다.
 - 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②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시투고”는 지리학논총에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이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①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리학논총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할 수 없다.
 - ② 특수관계인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받아서 안된다.
 7. ‘이해상충’은 논문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상충을 위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8. ‘특수관계인 누락’은 특수관계인,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정의한다.
 -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9.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누구든지 위원회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이를 행한다.
2.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조사)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조사위원회는 국내기관 소속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 ③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1.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의결된 결과를 지체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1. 위원이 당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피조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제척된다.
2.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1. 누구든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피조사자의 신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한다.
2. 지리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지리학논총에서 해당 논문의 목록을 삭제하고, 국토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② 제재를 받은 회원은 향후 3년 이상 지리학논총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 ④ '특수관계인 누락'인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한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1.(효력발생)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리학논총 편집규정

2015년 8월 1일 제정

2021년 5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지리학논총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리학논총(Journal of Geography)'(이하 '논총'이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역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논총'의 기획과 편집 그리고 출판(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과 자격)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국토문제연구소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국토문제연구소장은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대학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 ② 정부, 국회 및 기타 유관정책기관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
 - ③ 그 외 지리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 또는 실무 능력이 우수한 자
 - ④ 관련 분야에서 연구 및 활동 능력이 탁월한 자
4. 위원장은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활동이 탁월한 자를 편집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 또는 비위원을 편집 간사로 두고 실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정기 및 임시회의)

1. 위원회는 해당 호의 기획 및 투고 안내 등을 위해 적절한 일시에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총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위원 및 비위원 그리고 외부 인사의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제8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연구소 소속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단 지리학의 발전 및 국토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9조(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분야의 논문, 연구노트,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 ① 논문: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 ② 연구노트: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을 띤 것.
 - ③ 자료: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 ④ 비평: 저서, 비평, 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반론.
 - ⑤ 서평: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국토문제연구소가 주관 및 주최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3.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14매 내외, 연구노트·자료·비평은 8매 내외, 서평은 2매 이내로 한다(hwp 기준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60).

제10조(투고일)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제11조(원고 집필 요령)

1. 논문은 제목, 저자, 저자 소속 및 직위, 요약문, 본문, 사사, 미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요약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첫 페이지에 첨부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 국문 요약은 생략할 수 있다.

4.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는다.
5.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 1)
 - ①
6. 미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 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 작성한다.
7.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 ① 단독연구: 박영한(1975, 1-15)에 의하면..., 김인(1991)에 의하면, 이들 연구(박동원, 1975; 박삼옥, 2000)에 의하면..., ...이다.
 - ② 공동연구: 김경성·박영한(1977)..., Berry and Horton(1970)은 ...(2명의 경우), 유근배 등(2017)..., Adams *et al.*(1971)은 ...(3명 이상의 경우)
8.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 ①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문헌, 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유럽어문헌 등의 순으로 하며, 국문과 중국어문헌 및 일본어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하고, 유럽어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국내고문헌은 국문문헌의 말미에 오도록 한다.
 - ②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③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 ④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서]

허우궁, 2018, 교통의 지리, 푸른길, 서울.

Martin, Geoffrey J. and James, Preston E., 1993,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3r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논문]

류유익, 1978, “지리학에 있어 공간개념의 문제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5, 1-14.

Tuan, Yi-Fu, 1971, Geography,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human nature, *Canadian Geographer*, 15, 181-192.

Abler, Ronald, 1993, Desiderata for geography: an institutional view from the United States, in Johnston, R. J.(ed.), *The Challenge For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Oxford.

[고문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70).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文化社, 影印本(1971).

[번역서]

최병두 옮김, 1983, 사회 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서울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London).

[Internet Web 자료]

참고 자료의 웹사이트 작성 주제, 제목, 주소를 기함.

예)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sillok.history.go.kr/id/kaa_000001

9.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첫 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앞에 기재하고,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논문의 최초 투고일과 최종 접수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10. 투고되는 모든 논문, 연구노트,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를 밝혀야 한다.
11. 논문의 연구책임자는 제일 앞에, 공동연구자는 그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그 다음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

다. 그리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팩스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제12조(그림과 표의 작성)

1.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3.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5.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13조(원고 제출 등)

1. 논문과 연구노트, 자료와 비평, 서평은 전자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논문은 논총 편집규정과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3. 논문 투고시에는 연구윤리서약을 하고 편집규정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며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투고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고논문을 점검한다.
5. 원고 제출 시 투고자는 이해 상충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논문과 연구노트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 인쇄 시 초고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9.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4조(논문심사평가)

1. 논총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연구노트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 결과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다.

제15조(심사 절차)

1.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2.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3. 편집위원회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 해당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된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 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2차 심사위원은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해당 분야 권위자로 인정되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자와 투고자가 제공한 이해 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4.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 이해 상충이 있다면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제17조(심사 기준과 판정)

1.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논리 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
- ⑤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2.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에 1차 심사를 표기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로 한다.
3.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의 익명성)

1. 논문 및 연구노트의 심사 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심사비)

1.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20조(심사 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2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4.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논문이 투고자의 사유서 없이 기한 내 미제출된 후 장기간 심사가 중단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논문심사결과 처리표

1차 심사	2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2차 심사 결과(1)	2차 심사 결과(2)	2차 심사 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적합성과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다.

제5장 발행

제21조(발행 횟수와 일자)

논총의 발행 횟수와 일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연 1회(2월 말일)로 한다.

제22조(특집호)

편집위원회는 특집호를 낼 수 있다.

제23조(발행 부수 등)

논총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저작권 이양

제24조(저작권 이양 후 저자의 권리)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다음과 같은 권

리를 가진다.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제25조(저작권 이양 후 저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단서)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지리학논총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제24조 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6조(저작권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1.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투고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5.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논총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논총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논총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6.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리학논총 편집위원회

(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502호
 TEL: 02)880-6322 / FAX: 02)877-7656 / E-mail: kukto.geographyedit@gmail.com

「지리학논총」 게재 신청서

성 명 (교신저자)	한글 (漢字)				※ 20 년 월 일 접수
	영문				
소 속	한글			직위	
	영문			직위	
연 락 처	주소				
	휴대전화: 전 화:	Fax:		E-mail:	
공동투고자	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합니다.				
논문제목	한글				
	영문				
원고의 종류	논문() 연구노트() 자료() 비평()				
원고의 속성	원고()매, 본문()매, 그림()매, 사진()매				
편집부에 대 한 요망사항					

- 1) 투고자는 원본 컴퓨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본문 제1쪽에 밝혀주십시오.
- 3) 복수저자인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ence)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논문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교신저자):

(서명)

지리학논총 편집위원회

(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502호
TEL: 02)880-6322 / FAX: 02)877-7656 / E-mail: kukto.geographyedit@gmail.com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 제목:

저자(들)명:

본인(들)이 투고한 논문은 지리학논총에 게재와 동시에 본 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copyright)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지리학논총에 이양함을 동의합니다.

제1저자 (저작권 소유 대표자)	소속: 성명:	직 위: 년 월 일
----------------------	------------	---

지리학논총 편집위원장 귀하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

-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본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저자가 본 논문을 교육하기 위해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승진, 연구계획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결과와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및 인쇄를 할 권리
 -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기된 단체, 저자(들)의 개인 웹사이트에 논문의 전문 또는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의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권리
-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제1항에 허용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지리학논총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1항의 1)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저자 중 제1저자는 나머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기관과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본 저작권이 지리학논총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 본 저작권의 이양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의 발표초록을 제외한 어떤 다른 형태로도 발간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되었더라도 학회지 게재 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들)가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전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 내용을 기록한 후 투고논문과 함께 우송하시기 바랍니다.